

해외aT센터 주재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서

2012. 2



목 차

주재국별 보고내용 요약	1
일 본 / 도쿄aT	15
중 국 / 상하이aT	39
미 국 / LAaT	65
홍 콩 · 대 만 / 홍콩aT	81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싱가포르aT	93
태 국 / 방콕aT	117
네덜란드 / 로테르담aT	139

주재국의 주요 농업 및 경제동향 요약

주재국 주요농업 및 경제동향 요약

□ 농업동향 및 정책

- 일본 : • 대지진 농림수산 피해액은 약 2조 3천억엔(피해면적 2.34만ha)
• 농산어촌 6차산업화(산업 및 서비스와 결합)하여 1조엔 시장규모를 10년 후 10조엔 시장규모로 육성계획
- 중국 : • 3농(농업, 농촌, 농민) 투자확대 및 “强農惠農” 정책강화
• 2012년은 경지면적 확보, 단위수확량 증대로 생산확대주력
- 미국 : 미국재건 및 재투자법(‘09.2월제정)하에서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주력
- 대만 : 중국과 ECFA체결(‘10.6월) 대만 농식품 중국 수출확대
※ ‘11.1~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증(5.9억불)
- 태국 : 대홍수로 인해 농경지 20,240km²유실(쌀 생산 20%감소)로 쌀 가격 영향

□ 경제동향

- 일본 : 2012년 GDP 1.8% 성장전망 및 엔고상승으로 소비자물가 하락지속
일본정부는 환태평양 경제연계협정(TPP)에 적극 참여 전망
- 중국 : 2012년 GDP 8.9% 성장(전년대비 0.9% 감소) 및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미국 : 경제가 호전되어 GDP 4.0% 성장 및 소비자물가 3.5%로 상승세 둔화
2013~14년에는 국가재정 및 통화정책위험요소로 경제성장을 하향 전망
- 홍콩 : 중국관광객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이 25.6% 성장하여 경제성장(6%) 견인
- 대만 : 2011년 경제성장률은 4.6%로 ‘10년 대비 대폭감소(6.5%감)
2011년 1인당 GDP 2만달러 초과 및 수출금액 3,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
- 말레이 : ‘12년 경제성장률이 유럽경제위기로 당초 5.8%에서 4.9%로 하향 전망
- 싱가포르 : 교통비 및 주거비가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5.5% 증가

가. 농업동향

□ 일본농업 내·외부 환경변화

- 일본국내의 농업총생산(부가가치액)은 1990년 8조9,986억엔에서 2010년 4조 6,645억엔(총 GDP대비 0.97%)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
- 경작포기지는 1985년 2.9만ha에서 2010년에는 10.6만ha로 확대
- '10년 민주당의 APEC·FTA·EPA대응검토프로젝트팀이 제시한 EPA 기본방침수립을 위한 제언 안에 따라 무역자유화논의 본격화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농업피해현황

- 동일본대지진으로 농림수산물피해액은 약 2조3천억엔
* 동북지역 6개현 피해면적은 약 2.34만ha(논 20천ha, 밭 3.4천ha)로 평균 2.6% 피해
- 피해복구의 장기화와 방사능오염규제 강화로 생산축소 불가피 예상

□ 농산어촌 6차산업화 추진(민주당 농정전략)

- '농산어촌 6차산업화'는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2차·3차 산업을 융합하여 농산어촌지역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 산업간 융합은 농림어업자주도형과 타 산업 사업자 주도형으로 구분

나. 경제동향

□ 당분간 엔고, 동북대지진, 원전사고의 트리플 악재 지속될 전망

- 국가별 물가상승률의 차이, 세계적 저금리화·경기침체로 해외투자자본의 일본 환류로 엔화환율상승경향은 당분간 지속

□ 환율상승과 소비침체가 겹쳐 소비자물가는 하락세 지속

- '08년 리만사태 이후 급락한 소비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왔으나, 대지진 이후 엔고현상 심화로 다시 급락상태

□ 일본의 실질GDP 성장 전망('11년 -0.5% →'12년 1.8% 전망)

- 엔고, 해외경제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 예상되나, 복구수요로 인한 경기 부양효과가 '12년 GDP성장 견인할 것으로 전망

□ 「포괄적 경제연계(FTA·EPA)」 가속화

- 일본 정부는 '10년 11월 세계의 주요국과 경제연계를 추진하는 포괄적 경제연계협정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의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을 위한 적극적인 교섭 참여 전망

가. 농업정책

- “三農(농업, 농촌, 농민)” 투자 확대 및 “强農惠農” 정책 강화
 - 재정지출의 중점을 농업, 농촌에 두으로써 농업, 농촌분야 재정투입 증대
- 농업생산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 확보
 -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확대는 ‘12년 “三農”의 중점사항으로 식량의 파종 면적 확보를 통한 단위당 생산량 제고
- 농산물 유통 및 시장조절 규제 개선을 통한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 및 농산물 판매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술 및 장비수준 향상으로 농업발전의 기초역량 강화
- 경지보호 정책조치 등
 - 당(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경지보호를 위한 일련의 중대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여 경지보호 강화정책을 실시함

나. 수출농업정책

- 원예, 수산물, 축산물 등 우위 농산물의 품질과 가공농산품의 비중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수출품목과 브랜드 육성
- 농산물 수출조직화를 강화하여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조직을 설립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수출 선두기업 육성
- 수출 관련법규 및 수출업체 기술훈련 강화로 전면적인 품질안전 통제능력 향상
- 각 지역의 수출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전략 수립 및 전통적 수출 시장에 대한 발전은 물론 신규시장 개척을 강화하여 수출목표 시장 다변화
 - 일본, 홍콩, 아세안, 한국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유럽, 미국시장 개발추진
 - 러시아, 캐나다, 인도 등의 수출 확대와 동시에 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추진

다. 경제동향

- GDP 성장률은 '11년 1/4분기 9.7%에서 4/4분기 8.9%로 하향세 전망
 - * GDP 성장률 : ('10. 4Q) 9.8 → ('11. 1Q) 9.7 → (2Q) 9.5 → (3Q) 9.1 → **(4Q P) 8.9**
- '11.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하여 9월 6.1%, 10월 5.5%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
- '11.11월말 현재 수출은 전년 대비 21.0%증가, 수입은 **24.2%**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843억불 흑자이나 전년 대비 8.5% 감소

가. 농업정책

- 1949년 제정된 농업법(The Agricultural Act)이 미국의 물가와 소득지원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틀로 자리 잡고 있음
 - 미 의회는 정기적으로 농업법을 개정하며 ‘08년 6월에 제정된 “식품, 보호 및 에너지 법률(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같은 농업제품 및 가격을 규제하는 법규 (Farm Bills)를 통해 영구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
- 몇 년간의 지속적인 농업정책 개정으로 농산물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1991년~2001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ad hoc) 비상지원 같은 분리된 제정법의 비상사태 및 그 외 지원, 그리고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 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있음
- 미국 회복 및 재투자 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09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임
 - 전체 7,890억불 중 약 3.5%는 영양보조, 농촌개발, 환경보호 및 산림, 그리고 농촌보조 및 교역을 위해 USDA가 관리
- 최근의 농업정책 주요 지원책
 - 직접지불 및 경기대응지불, ACRE(수입보전 직접지불), 유통보조용자 및 용자 부족불제도

나. 경제동향

- 경제성장률
 -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GDP는 ‘11년 3.5%에서 ’12년 4.0% 증가 전망되며, 실업률은 8% 미만 예상
 - '13~'14년에는 국가 재정과 통화정책의 위험요소로 경제 성장률은 다시 평균 수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
 - 전체 및 주요(식품과 에너지를 제외)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012년 12월까지 전년대비 3.5% 예상되며 2012년 상반기에는 시장성장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실제 인플레이션은 다소 느릴 것으로 예상

가. 농업정책 및 생산현황

- 정부 참여 최소화로 자유시장을 겨냥한 완전 개방정책이 기본 정책기조임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95% 이상
- 농식품 생산현황
 - 홍콩 농가 수는 '10년 기준 2,600개이며, 농업종사자는 약 4,700명임
 - 주 생산 작물은 관상용 화훼류(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이며, 식용작물로는엽채류, 국화과 작물, 수상작물이 있으나 소규모임
 - 경지이용은 '10년 기준 채소류 297ha, 화훼류 153ha, 논작물 20ha, 과수류 276ha로 경지면적이 매우 협소함
 - 총 농산물생산은 US 615백만불로 이중 작물생산 US 232백만불, 축산물 US 176백만불, 가금육 US 207백만불을 생산하였음
 - 전체 농산물 소비에서 자국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선농산물 2.5%, 가금육 56.2%, 돈육 6.4% 등임

나. 경제동향

- 2011년도 완만한 경제성장세 보임
 - 2010년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1년 상반기에도 6.3%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소비자물가는 2010년(2.4%)보다 높아져 2011년 1~9월 기간 중 5.1%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은 심화
 - 소비시장은 2010년 18.3%에 이어 2011년 1~8월 기간 중 2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 '11년 전체 관광객 수는 41백만명 수준이며 그 중 중국인 관광객 수는 2,800만명으로 중국인 소비액은 1500억 홍콩달러로 '11년 홍콩소비시장의 39%를 차지하여, 홍콩 경제성장률에 0.5~1%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경제성장률은 3~4%대로 둔화 전망
 - 홍콩무역발전국은 3%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HSBCk 등) 내년도 홍콩 경제성장 전망을 3~4%대로 예상

가. 농업정책

□ WTO 가입, 중국과 ECFA 체결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 WTO가입 후 농업 생산량 20% 증가, 수출은 31% 증가

* 대만은 '02년에 WTO에 가입하였으며, '10년 농업 생산량은 NT\$4,263억원 (약 16조 2천억원)으로 WTO 가입 전 대비 20% 증가. '10년 농식품 수출은 US 40.2억달러로 '02년(30.3억) 대비 31% 증가

□ 중국과 2010년 6월 ECFA 서명, 대만 농식품 중국본토 수출 확대

- '10년 대만 농식품 중국 수출액은 US 3억달러로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 전인 '07년에 비해 23% 증가하였으며, '11년 1월~11월까지는 US 5.9억달러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 중국 직항로 개설, 검역 협정 등 대만 농식품 수출애로 해소

- 대만은 '08년 농식품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운송시간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직항로를 개방하였으며, 2009년 신선 냉장 과일들의 수출 검역검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양안 농산품 검역 검사협력”을 협정하였음.

□ 대만 정부 한국산 수입사과 농약 전수검사로 사과수출 애로

- '11. 2. 1일부터 한국산 사과 전수검사 및 지속적인 농약 검출로 당분간 전수검사 해제 지난

나. 경제동향

□ 2011년 경제성장률은 4.6%로 '10년 10.9% 대비 대폭 감소

- '10년 대만의 수출입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민간소비 성장률도 최근 6년간 최고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0.9%에 달하여 '87년 이후 최고치 기록
- '11년에는 일인당 GDP가 사상 최초로 2만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11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4.0%로 전년 3.7% 대비 소폭 증가

□ 2012년 경제성장률은 4.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대만 중화경제연구소의 2012년 경제예측에 따르면 성장률은 4.1%로 전망
-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은 각각 4.6%와 1.0%로 수출이 수입보다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지탱할 것으로 보임

가. 농업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4년부터** 국가 농업정책(NAP, National Agricultural Policy)을 도입하여 시행
- 2011~2020년은 4차 NAP이며 2012년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농업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FSP, NAP, NKEA 3가지임
 - **식량안보정책 (FSP, Food Security Policy)**
 - 2008년 쌀 대란 당시 도입한 정책으로, 당시 2008-2011년의 기간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식량안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NAP와 연계시켜 존속시키기로 함
 - **국가농업정책 (NAP, National Agricultural Policy)**
 -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말레이시아가 식량 수입국가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석유와 팜유 일변도의 수출, 그리고 삼성 전자를 비롯한 해외기업들의 전자제품 생산기지 등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NAP를 시행함
 - **국가 주요 경제 분야 (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
 - 농산물 관련 NKEA는 16개의 진입 프로젝트(EPP, Entry Point Project) 및 11개의 사업기회(Business Opportun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 MYR21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나. 경제동향

- 경제성장률**
 - '09년에는 GDP 성장률이 $\Delta 1.7\%$ 감퇴하였으나, '10년 중에는 7.2%에 달하는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고, '11년 에는 5~5.5%의 무난한 성장세를 나타냄
 - 수출 주도형 경제(주요 수출품목 : 석유, 팜유)인 말레이시아는 Eurozone의 공공 부문 부채위기에 의한 세계경제의 약화로 인하여 경제 성장 둔화가 전망되어, '1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5.8%에서 4.9%로 하향조정
- 소비자 물가**
 - '11년 1/4분기 2.8%, 2/4분기 3.3%, 7월 3.4%, 8월 3.3% 등 상승세 지속 중

가. 경제정책

□ 자유시장경제 고수

- 자유시장경제 및 개방 노력은 싱가포르의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본토대가 됨.
-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싱가포르는 기업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간주되며,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여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외부 지향 경제정책 추진

- 싱가포르는 국가 규모와 부존자원의 한계로 인해 외부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무역과 투자 부문에 있어 시장개방으로 이어져 FTA체결과 같은 각종 역내 협력의 주력으로 이어짐

나. 경제동향

□ '11년 4.8%의 성장률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1/3수준으로 급락

- 싱가포르는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4.7%의 성장률을 달성

□ 유럽 채무위기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불확실한 외부경제여건으로 인하여 '12년 성장률은 연간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11년 3/4분기 기준)

- 수출입 : 수출 및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S\$1,301억) 및 6.2%(S\$1,161억) 증가함에 따라 총 교역규모는 S\$2,471억(5.4%)을 기록
- 국제수지 : S\$100.9억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 분기 S\$54.7억에 비해 흑자 폭이 크게 확대
- 실업률 : 전분기보다 조금 낮은 2.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방학기간 중 일자리를 구하던 대학원생 등의 학교복귀에 기인함
- 물가 : 3/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 분기 4.7%보다 1.2%p 증가한 5.5% 기록. 교통비(11.8%)와 주거비(9.7%)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상승 주도

가. 농업생산 현황 및 정책

□ 2011년 대홍수에 따른 농업생산 현황

- 홍수로 인해 손실된 농경지는 20,240km²(논 16,000, 밭 3,008, 기타 1,232)임
- 주요 품목별 피해 현황
 - 쌀 : 목표치인 2,514만 톤에 못 미치는 2,025만 톤으로 연 생산량의 20% 정도가 감소. '12년 국제 쌀 가격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카사바(Cassava) : 타피오카의 주재료인 카사바는 평년 생산량이 3,000만 톤이나 2011년 생산량은 2,000만 톤으로 줄어들어 가격상승이 예상됨
 - 고무나무 : 피해는 크지 않으나 홍수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어 고무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하락이 우려됨

□ 농업정책 방향

- 농업종사자 생활의 질 향상
 - 농민 소득 및 삶의 안정성 창출, 교육센터 및 관계기관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전파,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위기상황 대처 역량창출 등
- 생산 및 관리와 식량안보 역량개발
 - 생산 공정 개발을 장려하여 생산효율성 증대 및 상품의 품질기준 향상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와 유기농법 활용을 장려하고 농업자원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줄이는 등 녹색·저온 농업경제를 실행 등
- 농업자원의 효율적·균형적·지속적 개발
 - 토지 관리와 배분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생활기반 창출

나. 경제동향

□ 주요 경제 변화

- 금융부분에서는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내수경제 증가, 대체에너지 활용으로 인해 경기회복

□ 국가재정은 공공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안정화 악화 우려

- 잠재 서비스와 창조적인 경제로부터 새로운 소득원천이 필요

9 네덜란드 / 로테르담αT센터

가. 농업정책

- '83년 이전 : 공급과잉을 시장 확대로 해결
 -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규모 확대 등이 강조
 -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농업인에게 성장기반 제공
 - 전문화, 규모화
- '84년 이후 : 농산물 생산촉진에서 부작용 억제로 전환
 - 생산지원에서 환경이나 경관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 이동
 - 농업연구, 지도,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던 공공의 영역에서 지식시장으로 이동되고 민영화
 - 지원방식도 계획에 입각한 사전 투입보다 사후에 산출물의 내용을 따지는 결과중심으로 이동

나. 네덜란드 농정의 시사점

- 시장 개입보다는 연구, 지도, 교육에 정책 집중
 - 성과 중심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
- 토지통합과 생산단지 정비, 원예 및 축산 시설현대화 등 규모화
 - 지식과 혁신을 통한 전문화
- 자금의 효과적 지원을 통해 신용 제공 활성화
 - 성과를 중심으로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 여건 조성
- 계획에 입각한 지원보다 산출물 내용을 따지는 결과 중심의 지원
 -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의 최적 분배

다. 경제동향

- 명목 GDP는 '11년 5,910억유로, EU 27개국의 약 4.9% 차지
 - GDP 성장률 : ('09) -3.5% → ('10) 1.7% → ('11) 1.8%
- 1인당 GDP는 35,400유로 (약 50천불)로 EU에서 4번째로 높은 국가
- 네덜란드의 교역은 무역수지 흑자로 수출이 수입보다 389억 유로가 많음
 - 농식품 수출은 수입보다 254억 유로가 많음
-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를 1.5% 수준으로 인상

일 표

국 가

일 본

작성자
도쿄 aT센터

I

일본 농업정책 동향

1. 일본 농업의 현황

1. 농업분야의 환경변화

□ 일본농업 내·외부 환경변화

- 일본국내의 농업총생산(부가가치액)은 1990년 8조9,986억엔에서 2010년 4조 6,645억엔(총 GDP대비 0.97%)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
 - 1990년 농업 총 산출액은 11조4,927억엔에서 2010년 8조1,214억엔으로 감소
 - 판매 농가수는 297.1만호(총 농가대비 77.5%)에서 163.1만호(64.5)로 45% 감소
 - 경지면적은 602.8만ha(논 310.만천ha)에서 459.3만ha(논 249.6만ha)로 약 24% 감소
 - 2009년도 판매농가의 평균 농업소득 104만엔으로 2005년(124)대비 약 16% 감소
- 경작포기지는 1985년 2.9만ha에서 2010년에는 10.6만ha로 확대
 - 경작포기 원인 중 하나는 가격하락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농산물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
 - 소비자 소득 하락추세 속에서 농산물 가격하락 억제는 한계
-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경영 법인화추진」이 명시되면서 급속히 법인화가 진행되고(2008년 기준 10,519개소) 있으며 이중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10년 민주당의 APEC·FTA·EPA대응검토프로젝트팀이 제시한 EPA기본 방침수립을 위한 제언안에 따라 무역자유화 논의 본격화
 - 제언안에 TPP관련 정보수집 등을 위해 TPP에 참가 또는 교섭중인 미국 등 9개국과의 “양국간교섭”을 포함한 사전협의시작을 요구하는 내용 포함
 - 칸 나오토 총리는 연두담화에서 2011년을 「평성(平成)개국」의 원년으로 하고 무역자유화와 국내농림어업의 양립을 천명
 - 농림수산성은 TPP참여시 자급률(40%→14%)하락과 농업생산감소(농업 산출액 기준 연간 4.1조엔)를 주장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농업피해현황

- 동일본대지진으로 농림수산피해액은 약 2조3천억엔
 - 동북지역 6개현 피해면적은 약 2.34만ha(논 20천ha, 밭 3.4천ha)로 평균 2.6% 피해
- 피해복구의 장기화와 방사능오염규제 강화로 생산축소 불가피 예상
 - 현재까지 작부곤란한 방사성세습농도 5000Bq/kg 이상 농지는 약 8,300ha로 파악
 - 2012년4월1일부터 농축산물포함 방사성세습기준치를 500Bq/kg에서 100Bq/kg로 강화

□ 동일본 대지진발생 이후의 농산물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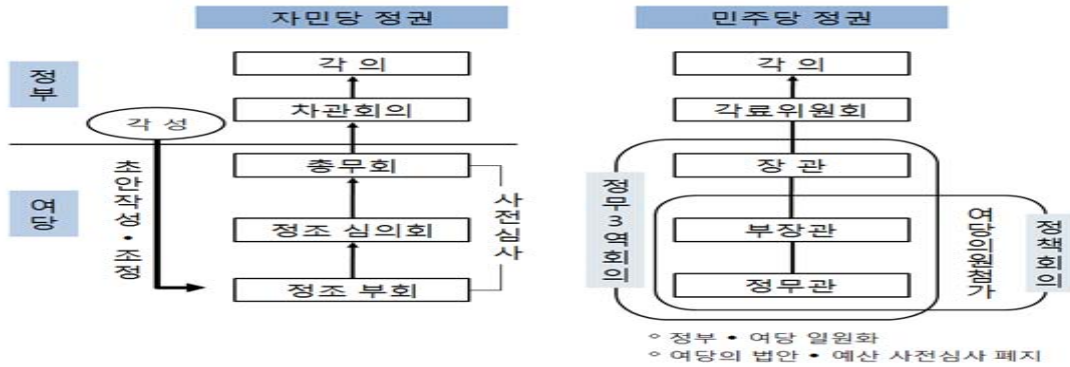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농지유출 및 침수피해를 입은 곳은 이와테(岩手県), 미야기현(宮城県), 후쿠시마현(福島県)의 연안지역
-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해지역은 후쿠시마현(福島県), 이바라키현(茨城県), 치바현(千葉県), 도치기현(栃木県), 군마현(群馬県) 등
 - 후쿠시마현은 쓰나미 피해와 방사능피해를 입은 일본 최대 지진피해 지역
 - 동북지역 산지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방사능공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 현단위로 표시토록 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제도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
- 방사능피해를 입은 동북산지에서 6월 이후부터 본격 출하
 - 동북지역산 청과물 기피현상은 관동지역보다 관서지역이 현저
 - 방사능 피해지는 주로 과채류 주력산지로 특히, 후쿠시마현은 6월 이후 오이, 피망, 토마토의 일본 최대 산지
 - 장기적으로는 오사카 아래 서남지역의 고랭지를 중심으로 동북지역의 과채류를 대체하는 산지가 형성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체될 가능성 존재

2. 민주당정부의 농정전략

□ 민주당 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방식 전환

-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전환
 -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대신에 ‘각료위원회’ 설치
- 자민당정부 하에서의 여당·관료·업계 등 3자 유착문제 차단 의도

〈 정책결정방식의 전환 〉



□ 민주당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농정전략

○ 문제인식

- 1990년대부터 시장개방(외부여건), 농업노동력 고령화와 농지 유희화에 따른 생산축소 및 가격하락으로 농가 소득 감소
- 농림수산업의 수익성악화로 인한 농촌경제 침체

○ 농정 과제

- 지구온난화와 지구의 자원문제에 대응
-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품의 안전·안심에 대한 기대상실에 대응
- 농산어촌 붕괴의 위기에 대한 대응

○ 접근 전략

- 소득문제해결, 식량자급률향상, 지역사회유지 등을 목적으로 ‘호별소득 보상제도’의 직불제와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 호별소득보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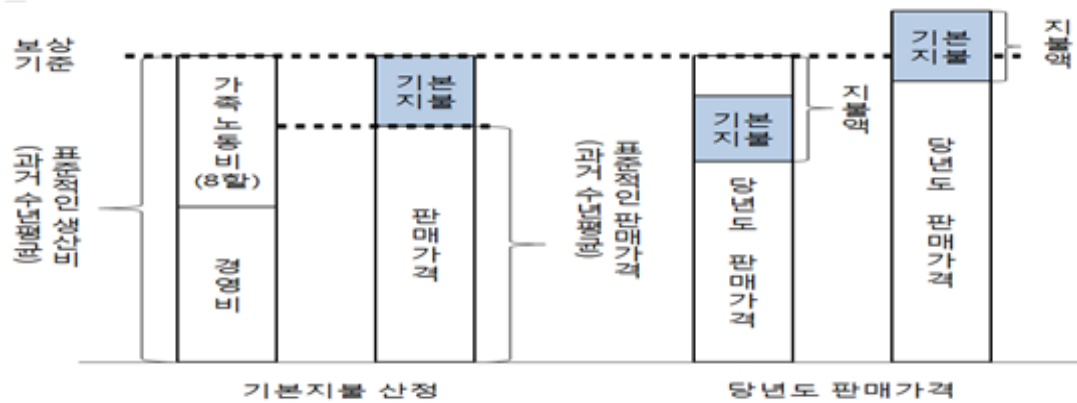
○ 도입 목적

- 식량자급률목표를 전제로 책정된 ‘생산수량목표’에 따라 생산한 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와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려는 제도
- 자급률향상, 농촌 활성화, 판매농가 소득확보, 다원적 기능발휘, 지역사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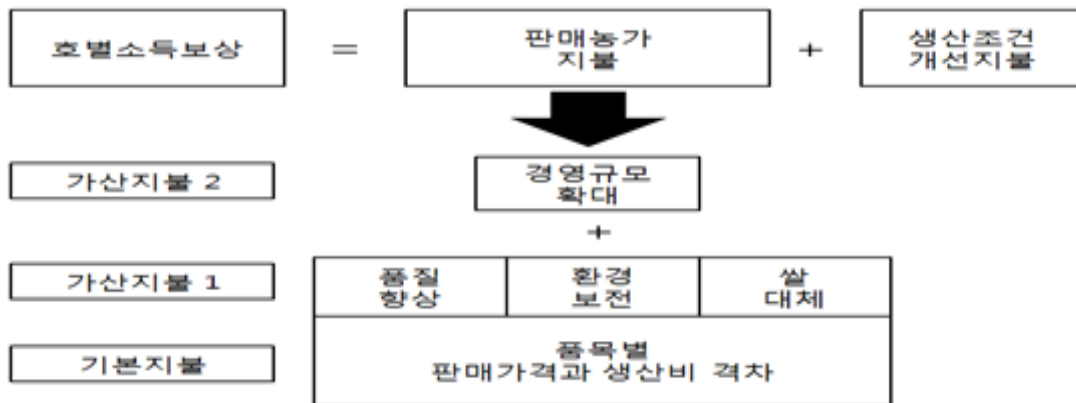
○ 대상 품목 및 대상농가

- 시장개방으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쌀, 맥류, 대두 등을 대상으로 전체 판매농가가 대상
- 규모 확대농가가 지불대상이나, 선택제이기 때문에 규모 확대 효과에는 한계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기본 지불 〉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가산 지불방식 〉



□ 농산어촌 6차산업화

- ‘농산어촌 6차산업화’는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2차·3차 산업을 융합하여 농산어촌지역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 산업간 융합은 농림어업자 주도형과 타 산업 사업자 주도형으로 구분
 - 농림어업의 생산(1차산업) 자체의 질적인 전환
 - 농림어업측이 주도적으로 2·3차산업으로 진출하는 활동이 「6차산업화」로 농림수산성이 소관
 - 가공이나 판매·서비스부문의 사업자가 농림어업에 진입하여 창업하는 활동은 6차산업화보다 「농상공연계」로 경제 산업성이 소관
- 농림수산성은 향후 5년간 6차산업 시장규모를 현행 1조엔에서 3조엔으로 확대하고, 10년 후에는 10조엔 시장으로 육성계획

□ 새로운 농정추진을 위한 농림수산성의 조직개편

○ 2011년 9월 농림수산성의 본성 및 지방농정국 등의 조직개편 단행

- 조직개편 배경은 2008년 공업용미곡이 식용미곡으로 부정 유통되는 등 각종 사건발생과 호별소득보상제도, 6차산업화 등 새로운 농정추진목적
- 미곡유통감시 업무 등은 매각관련업무와 분리하는 등 관리·감독기능 강화

〈농림수산성 본성 조직개편〉

- ① 6차산업화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합식료국을 식료산업국으로 재편
- ② 곡물·농축산물 총괄정책부서인 생산국 외에 농산부와 농축산물수급 및 가격대책 등을 총괄하는 생산진흥 심의관을 신설
- ③ 미곡유통을 감시하는 총합식료국 식료부 폐지와 소비·안전국에 업무 이관
- ④ 호별소득보상제도 실시에 따른 교부금과 제도전반을 경영국이 총괄
- ⑤ 정책평가, 정책사업평가, 업무리스크관리 등을 사무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신관 방하부에 담당 정책평가심의관을 설치하고, 대신관방하부의 협동조합검사부를 검사부로 개편하여 기존의 협동조합 이외에 도매시장, 상품거래, 공제조합, 토지 개량구 등의 검사업무를 이관

〈농림수산성 지방조직 조직개편〉

- ⑥ 2계통 업무(농정업무(지역과 132개소), 통계업무(통계정보센터 176개소)로 나뉘어져 있던 지방농정국 현장조직거점(346개소)을 통합, 원스톱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지역 센터(65개소)와 그 지소(38개소)를 설치하여 농정업무, 통계업무, 소비·안전업무를 일원화

3.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 2010년 3월30일 제3기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각의결정

○ 3기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특징은 무역자유화와 국내농업활성화

- ①식의 안전안심과 소비자신뢰확보, ②호별소득보상제도의 창설과 생산·경영관련시책 재편, ③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해 자급률을 향상 시킴으로써 「무역자유화와 국내농업의 양립」을 도모한다는 점을 명시

□ 일본정부의 정책추진지침

- 2011년 5월 17일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정책추진지침」 각의결정
 - 지진·원자력피해 농어업인의 심정을 배려하면서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 명시
 - 일본 언론은 한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품목 육성과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문제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진국가로 소개

□ 자유무역화에 대응한 기본방침과 분야별 대응전략수립

- 2011년10월 TPP교섭참가를 고려하여 「식과 농림어업재생을 위한 기본방침과 행동계획(2016년 까지)」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
 - 2012년 예산(2조3,284억엔)중 「식과 농림어업재생」 관련 예산은 총 1조 2,034억엔으로, 이중 방사능피해대책의 하나인 수출회복사업예산은 2.38억엔
 - 2012년도 농림수산물수출촉진대책예산은 총 15.44억엔으로, 수출확대리드사업(3.18억엔), 수출확대서포트사업(9.12억엔), 동아시아식품산업해외전개지원사업(0.76억엔), 농산물수출회복사업(2.38억엔)으로 구성

< 2012년 식과 농림어업재생을 위한 전략별 예산 >

비고	식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전략	관련예산(1조2,034억엔)
전략 1	지속 가능한 강한농업의 실현	7,697억엔
전략 2	6차산업화·성장산업화, 유통효율화	265억엔
전략 3	에너지생산에 농산어촌자원의 이용촉진	38억엔
전략 4	산림·임업재생	1,266억엔
전략 5	수산업재생	1,211억엔
전략 6	강한 농림수산 인프라구축	1,516억엔
전략 7	원자력재해대책	41억엔

- 식과 농림어업재생대책의 기본방침
 - 농산어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농림어업을 성장산업화
 - 토지이용형 농업의 실질적인 경영 규모 확대(평지 20~30ha, 중산간지 10~20ha규모 경영체비율 80%)를 위해 기간적 종사자확보, 농지·생산대책, 관련조직 등 관련시스템개혁을 통한 공격적 정책으로 전환
 - 농림어업자에 대한 안전망제공을 통해 농림어업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

○ 농림어업재생을 위한 7개 전략

- 전략1 : 신규취농 확대와 경영규모 확대로 지속가능한 강한 농업 실현
- 전략2 : 6차산업화·성장산업화, 유통효율화로 농업경쟁력·체질강화
- 전략3 : 에너지생산을 위한 농산어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 전략4 : 목재자급률 50% 달성과 산림·임업재생플랜 추진(2009년 발표)
- 전략5 : 수산업 현대화
- 전략6 : 지진재해에 강한 농림수산 인프라구축(조기 추진)
- 전략7 : 원전사고에 따른 안전대책과 신뢰회복(조기 추진)

2. 일본의 농산물 무역 동향

1.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 농림수산물 무역동향

-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수출액의 15배('09년)로 불균형심화
- 농림수산물 수입과 수출국가·지역의 편중 및 불균형 심화
 - 수입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과반수 이상 이며, 품목별 더욱 심화

〈 농림수산물 주요 무역국가·지역별 실적(2009) 〉

순위	수입국·지역	구성비(%)	수출국·지역	구성비(%)
1위	미국	22.1	홍콩	22.2
2위	중국	12.7	미국	16.4
3위	호주	7.0	타이완	13.1
4위	캐나다	6.2	중국	10.4
5위	태국	5.8	한국	10.3

<포켓농림수산통계 2010>

〈 일본의 평균관세율의 국가 간 비교 〉

		일본	미국	EU	호주	중국	한국	태국
광공업품등 (비 농산품)	단순평균(%)	2.5	3.3	4.0	3.8	8.7	6.6	8.0
	무역가중평균(%)	1.2	1.9	2.4	5.6	4.0	3.3	3.9
농산품	단순평균(%)	21.0	4.7	13.5	1.3	15.6	48.6	22.6
	무역가중평균(%)	12.5	4.1	9.8	2.9	10.3	119.8	12.5

<자료:WTO“World Tariff Profiles 2010>

□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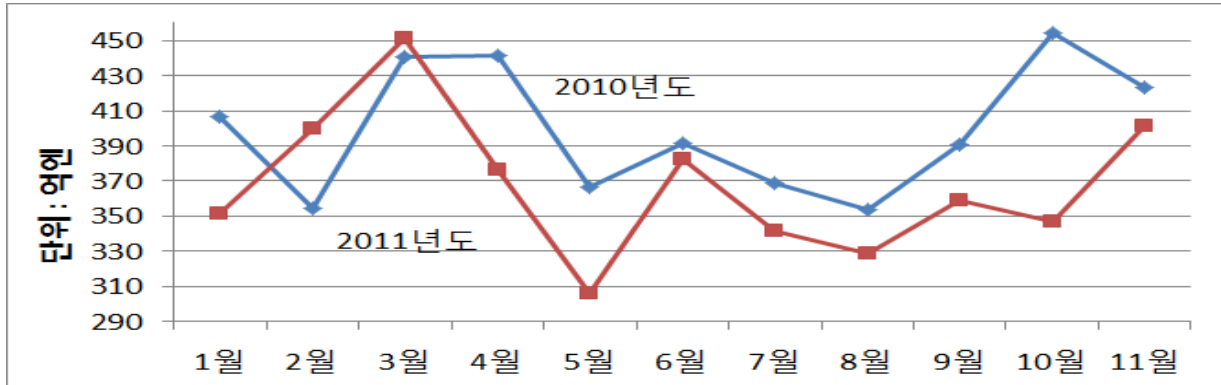
- 농림수산물수출액을 2020년 1조엔까지 확대한다는 공격적 정책
 - 수출확대를 위해 폭넓은 활동지원 및 소요비용의 50%까지 전폭 지원
 - 규제완화 등 수출환경 호전으로 수출국 안테나숍설치, 테스트판매 강화
 - 전통요리인 카이세키요리의 유네스코 등재추진 등 일식세계화 추진
 - 동아시아 등 거점도시로 일본외식기업이나 대형마트 등이 빠르게 진출
- 수출품목을 농산물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추세
 - 가공식품 수출액이 1,325억엔(26.9%)로 매년 증가추세
- 최근 수출확대를 위해 6차 산업화 추진정책과 연계를 강화
 - 2011년3월1일부터 시행된 6차산업화법을 통해 각종 수출 지원정책 추진
- 지진 이후 농림수산물수출액(2011년 11월 누적 4,045억엔)은 전년대비 7.9%감소
 - 원전사태로 세계 43개국·지역이 일본산 농식품 수입규제를 강화한 결과
 - 방사능검사 및 정보제공 강화로 농식품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

〈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수입규제조치사례 〉

	대상 현	품목	조치
중국	10현	모든 식품, 사료	수입정지
	10현 이외	채소·기타제품, 우유·유제품, 차·차제품, 과일·과일 제품, 약용식물	방사성물질의 검사증명서 및 산지증명서를 요구
		수산물 및 수생동물	상기 이외에 원산지, 수송경로를 기록한 검역허가신청을 요구
		기타 식품·사료	산지증명을 요구
한국	6현	시금치, 원유, 사료, 차 등	수입정지 (품목별 수입정지대상 상이)
	13현	모든 식품(위의 6현을 제외)	방사성물질의 검사증명서를 요구
	13현 이외	모든 식품	산지증명서를 요구
EU	12현	모든 식품, 사료	방사성물질의 검사증명서를 요구
	12현 이외	모든 식품, 사료	산지증명서를 요구
대만	5현	모든 식품	수입정지
	5현 이외	채소, 과일, 유제품, 수산물 등	전 롯데검사
홍콩	5현	채소, 과일, 우유 등	수입정지
		식육(계란 포함), 수산물	방사성물질의 검사증명서를 요구
미국	6현	시금치, 원유, 버섯, 까나리치어 등	수입정지
	3현	우유, 유제품, 채소, 과일 등	방사성물질의 검사증명서를 요구

- 2011년 중반 이후 농산물수출은 회복국면이며, 국가별 편차 심화
 - 중국(-36.6%), 한국(-10.3) 등과 반대로 베트남(+23.2%), 프랑스(19.7%) 등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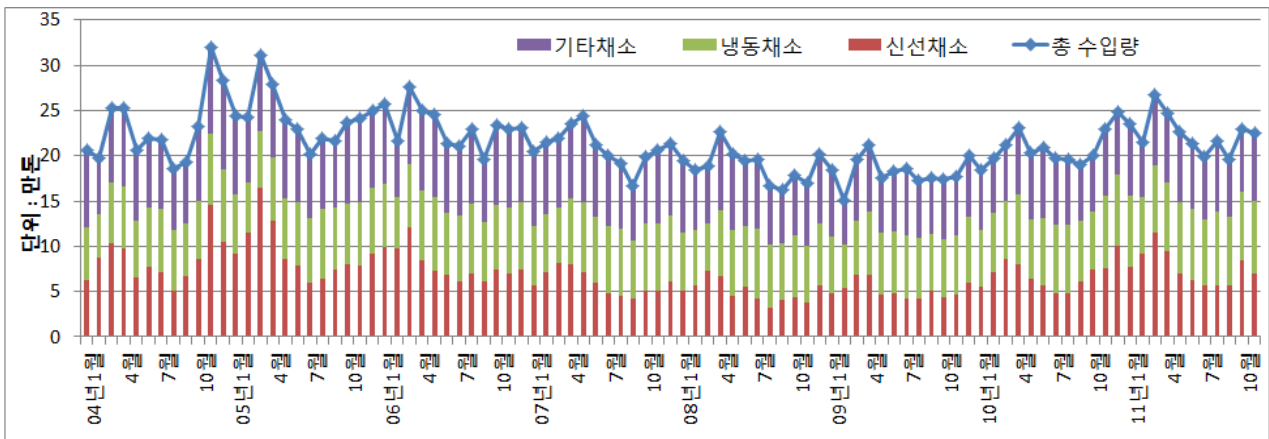
〈 농림수산물 수출액 추이(2010년과 2011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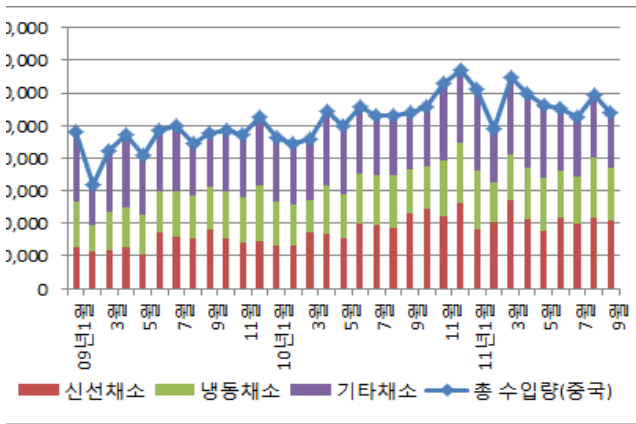
□ 일본의 농산물 수입동향

- 2005년 이후 감소하던 일본의 채소수입량이 2009년부터 재차 증가
 - 현재 채소류 수입증가를 신선채소가 견인
 - 수입채소 중 신선채소비중이 가장 낮았던 2008년에는 26.6%에서 2010년에는 32.8%(약 82만톤)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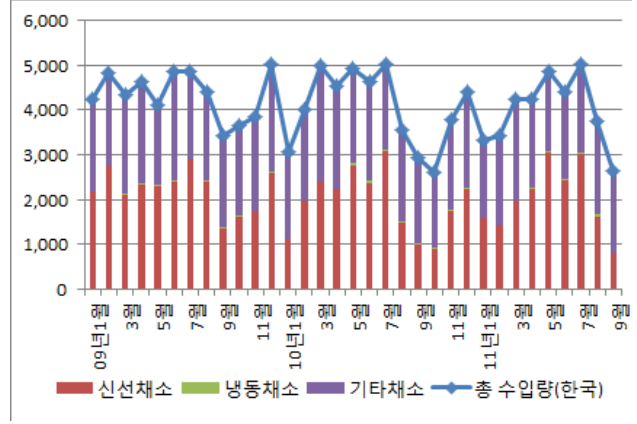
〈 일본의 채소형태별 월별 수입동향 〉



- 냉동채소는 약 34.1%(약 85만톤)로 신선채소와 여전히 수입을 견인
 - 일본의 2010년도 채소 총 수입량(약 250만톤)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02만톤으로 2009년 대비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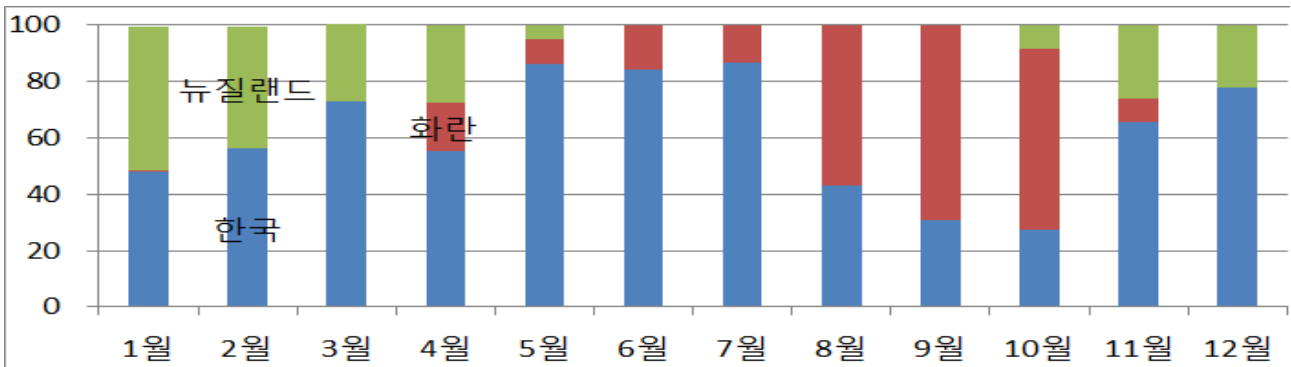
중국의 대일본 수출채소형태별 비중



한국의 대일본 수출채소형태별 비중

- 신선채소 상위 4개 품목이 신선채소 수입량의 약 68%를 차지
 - 일본에 수입된 신선채소의 상위 4개 품목은 양파, 단호박, 당근, 대파
 - 파프리카는 전체 채소수입량의 불과 3.4%로, 상위 9위에 위치하는 품목
- 한국파프리카의 수출확대는 점유율 확대결과로, 수요량 증가와는 무관
 - 파프리카 수출량확대는 당분간 점유율확대를 피하거나, 수출단가인하를 통한 파프리카 수요확대 이외에 자연적 수요확대 기대는 곤란
 - 일본유통업자는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요 확대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 인하와 여름철 품질향상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반응
 - 2010년도 일본의 파프리카의 수입량은 총 25,400톤으로 이중 한국산이 약 64%를 차지하였으나, 여름철 재배에 해당하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시장점유율은 비교적 낮음

〈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 내 월별 시장점유율 동향(2010년 수량기준) 〉



주 : 수입파프리카 평균단가 389엔/1kg(한국 365엔, 화란 469엔, 뉴질랜드 486엔)

□ 채소수입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요 대책

- 가공·외식용 채소의 특성 규명과 생산 장려
 - 계약채소 공급안정제도와 산지육성사업
 - 계약수량 확보가 곤란할 때 대체상품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
 - 시장가격에 연동한 계약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가격보전
 - 계약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지원
 - 가공·외식용 채소수요 대응 산지육성사업
 - 채소의 합리적인 생산·유통체계구축과 계약거래 코디네이터 육성
 - 계약거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출하단체는 실수요자의 당해 산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는 계약거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거래도입에 따른 산지의 전략수립, 제품개발, 판매촉진 등에 대해 지도기관 등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관련 전문가를 육성
- ※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실수요자의 니즈와 생산을 결합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제품개발에 관련된 교섭 등 중계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출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는 제품개발상의 고객화방법의 제안이나 판매촉진기획 등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

2. TPP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대응

□ 민주당의 APEC·FTA·EPA 대응검토프로젝트팀은 정부의 EPA의 기본 방침수립을 위한 제언안을 제시

- 제언안에 TPP에 대해 정보수집 등을 위해 TPP에 참가 또는 참가하여 교섭중인 미국 등 9개국과의 “양국 간 교섭”을 포함한 사전협의를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 2011년 칸 나오토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평성개국론이 제기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개국포럼을 개최하여 분위기 조성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교섭참가 논의속도감 저하

□ 일본이 TPP교섭에 참가하려는 의도와 과제

-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여 일본보다 수출 면에서 우위성을 확보해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수출산업계를 중심으로 시장의 조기개방을 요구

- 한국에 뒤쳐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시장개방이 필요하나 양자 협상인 FTA, EPA로는 무역자유화의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이에 TPP교섭의 경우 교섭참가국의 일괄타결을 추진하기 때문에, 양자 간 교섭을 생략하고 다수의 국가와 동시에 무역자유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TPP교섭에 참여하려는 의사로 판단됨
- 칸 나오토 총리는 '10년 11월 13일에 요코하마(横浜)에서 개최되는 APEC 총회를 앞두고, TPP교섭참여의사를 표명하였음
 - 다만 농업분야의 경우 일괄타결시 농업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는 점에서 '농업구조개혁추진본부'를 신설하여, 2011년10월25일 「식과 농림어업재생을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
 - 일본정부는 농업개혁의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TPP교섭에 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정체상황
- TPP교섭이 타결될 경우 농업이 괴멸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계를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과 여당에서도 찬반논란이 진행 중
 - 2010년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2011년 현재의 농업예산 약 2.5조엔(추경예산 포함) 수준에서 수십조엔이 소요되는 대책수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반응
 - 특히 농림수산성 및 농림위원회의원이 맹렬하게 반대
 - 농림수산성은 국경조치철폐로 인한 농수축산물생산 감소액 4.1조억엔 중, 특히 쌀(약 19.5천억엔)이 전체 피해금액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TPP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TPP참가국(9개국)의 동의가 필요
 - TPP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세철폐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미 EPA를 체결한 국가를 비롯하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도 동일한 관세철폐를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
 - TPP교섭참가국간 이미 양국 간, 다자간FTA가 발효·교섭중인 국가 다수
 - 교섭참가 9개국사이에 양국 간 교섭은 36건이나, 이중 양국 간 FTA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10건임
 - APCE가맹국(21개국·지역) 전체에서도 양국·다자간 FTA 다수 발효
 - APEC가맹국 전체의 무역액(2009년 3조7,594억달러)에 차지하는 FTA 발효완료국간의 무역비율은 51.3%를 차지

II

일본의 경제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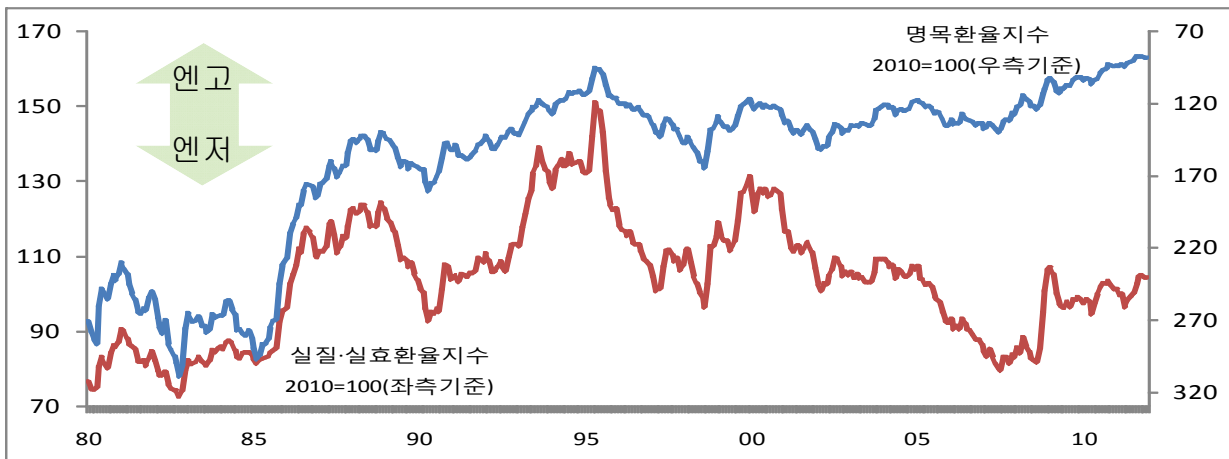
1. 일본 경제동향

1. 환율동향

□ 엔화환율 현황과 일본 정부의 대응방향

- 2008년 8월 미국 발 리만브라더스사태 영향으로 환율 급상승 이후, 2011년 3월 동북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엔화자금확보를 예상한 투기자본의 엔화매입으로 재차 환율급상승
 - 2011년 유럽 발 금융위기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일본 엔화로 자본이 이동하여 대 유로화 대비 엔화환율까지 급상승
- 명목환율과 실질실효환율은 리만브라더스사태 이후 괴리 폭 확대
 - 명목환율은 리만쇼크 이후 급등하였으나, 실질실효환율은 하향 안정세
 -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양국 간 거래가격을 무역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글로벌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표현하는 환율

< 일본의 장기 환율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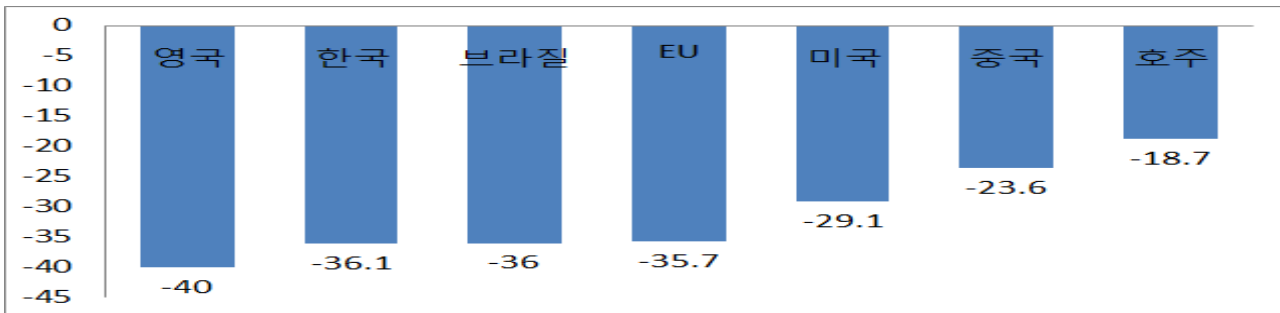


자료 : 주요 시계열통계(월차), 일본은행

주 : 명목환율지수는 엔·달러기준으로 중심 거래가격 월중 평균을 사용

- 당분간 엔고, 동북대지진, 원전사고의 트리플 악재 지속될 전망
 - 국가별 물가상승률의 차이, 세계적 저금리화·경기침체로 해외투자자본의 일본 환류로 엔화환율상승경향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일본과 각국 시장에서 경쟁관계 있는 한국의 원화환율하락에 관심 급증

〈 엔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의 하락률(2008년8월 ~ 2011년 11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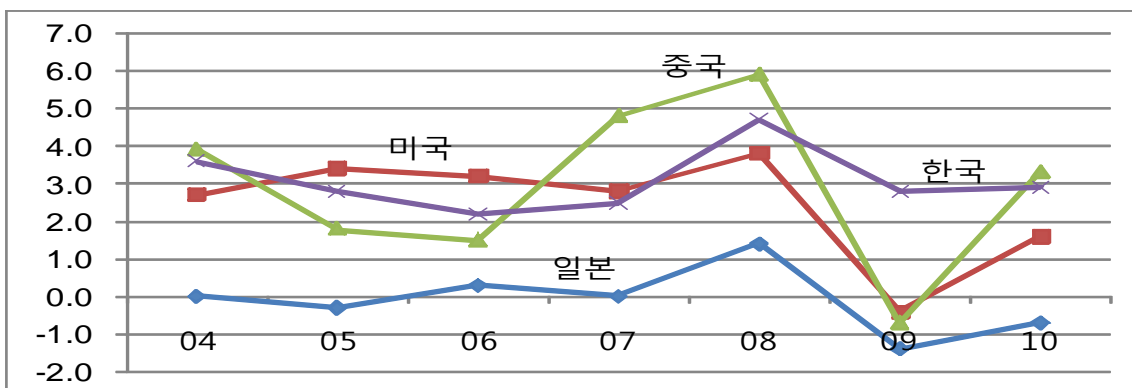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홈페이지

□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상승의 영향

- 현재까지 환율상승과 소비침체가 겹쳐 소비자물가는 하락세 지속
- 2008년 리만사태 이후 급락한 소비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왔으나, 대지진 이후 엔고현상 심화로 다시 급락상태
- 식료품 소비자물가는 2007년 이후 상승국면에 있었으나, 리만사태 이후의 엔화환율상승 영향에 따른 하락세를 유지
- 향후 지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소비자물가는 서서히 회복될 전망

〈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



자료 : 소비자물가지수, 총무성

□ 무역에 대한 엔화환율상승의 영향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엔화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은 확대될 전망
 - 가격 면에서 엔화환율 상승은 특히 기계 산업 분야의 환차손 확대
 - 원재료 수입비율 높은 소재산업분야 등 비 제조업분야의 환차익 확대
 - 향후 국제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일본경제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리스크

〈 엔화가치 상승이 기업수익에 미치는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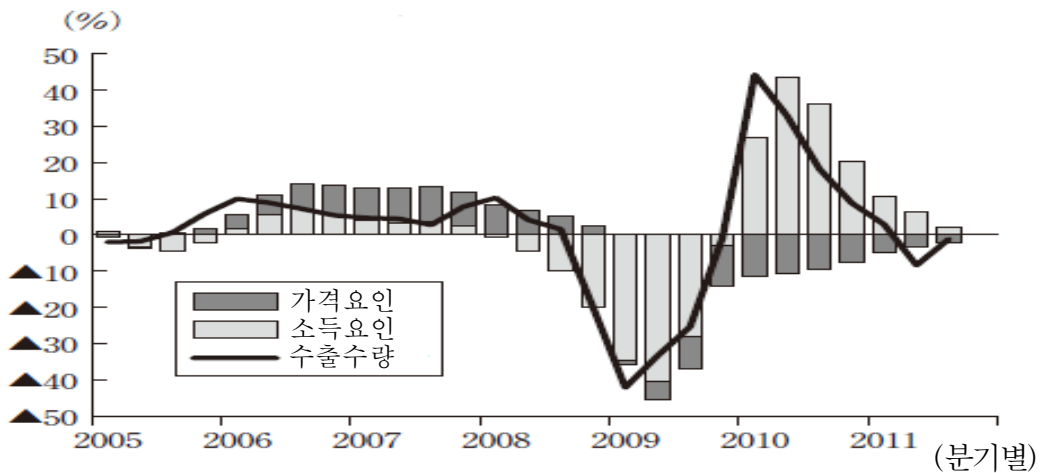
(단위 : 천억엔)

	제조업	가공업종		소재업종
		기계	기계 이외	
80엔/달러	0.1	-0.5	0.2	0.7
75엔/달러	0.3	-3.7	1.1	3.2
70엔/달러	0.6	-6.8	1.9	5.8
65엔/달러	0.9	-9.9	2.7	8.3
60엔/달러	1.1	-13.0	3.5	10.9

자료 : 재무성, 일본은행, 총무성 등을 바탕으로 일본총합연구소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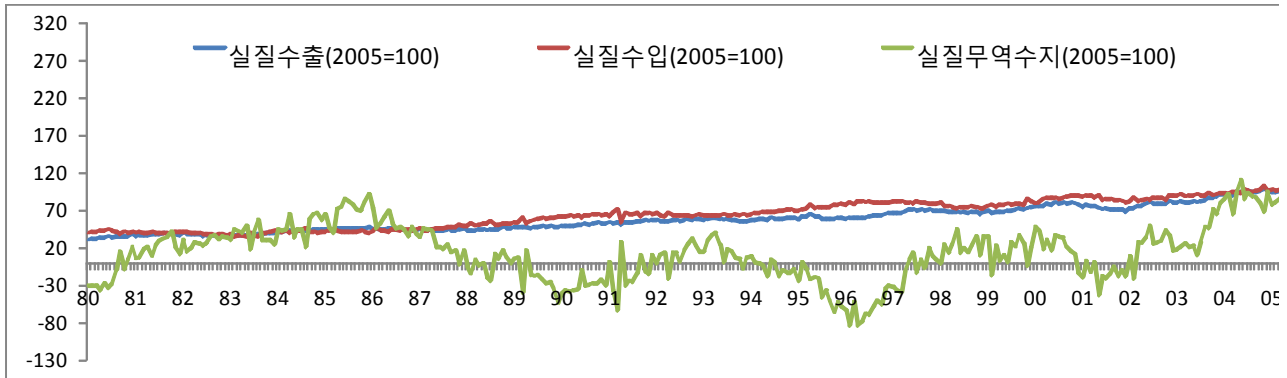
- 수량측면에서 엔화환율 상승은 수출량감소·수입량증가를 유도
 - 리만사태 이후 20%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였고, 수출은 약 10%감소
 - 엔화환율상승에 따른 마이너스영향은 6개월~2년 이후 나타나며, 2011년 환율상승영향으로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수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료 : 자료 : Business & Review 2012.1, 일본총합연구소

〈 일본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



자료 : 재무성무역통계, 재무성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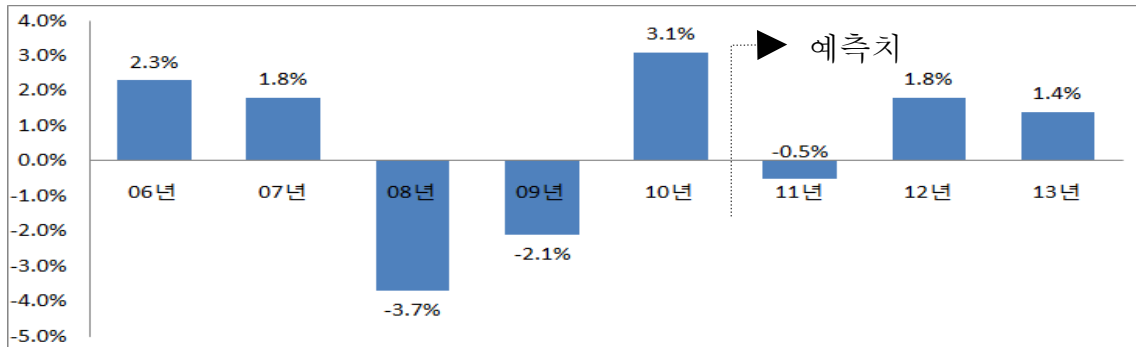
- 2008년 리만사태 이후 환율상승으로 실질무역수지가 악화
- 유럽금융위기와 지진피해 등으로 무역수지도 당분간 악화상태 지속
 - 동북지역, 태국지역홍수 등 영향으로 부품공급 원활치 못한 것도 한 요인
 - 2013년 까지 지진 이전수준의 무역흑자실현은 기대 곤란

2. 경기 동향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및 전망

- 엔고, 해외경제침체 등으로 수출은 당분간 부진하겠지만, 복구수요로 인한 경기부양효과가 2012년 GDP성장을 견인 할 것으로 예상
 - 대지진 이후에는 복구수요가 일본경제를 지탱해 왔으며, 2012년은 본격적 예산 집행으로 복구수요가(内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내각부는 3차 추경예산(약 9.2조엔)이 GDP 1.7% 성장을 유도하며, 약 70만명(고용유지 10만명, 고용창출 60만명)의 고용효과 있다고 예측
 - 비제조업과 내수관련업종은 고용자수 증가율이 높지만, 제조·수출관련 업종은 낮음
 - 해외시장에서 한국보다 가격경쟁력 낮아진 일본제품의 점유율 하락을 경계
- 지진피해 복구수요 증가로 소득수준은 회복되나 가처분소득은 감소
 - 소비심리위축, 복구재원(약 15.6조엔)마련 위한 증세(소비세, 소득세) 및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처분 소득감소 되는 등, 소득수준과 지출 수준의 괴리가 확대될 전망

〈 일본의 실질GDP성장률 추이 〉



〈 일본의 각종 경제지표 전망 〉

(전기 대비 연평균비율, %)

	2011년				2012				2013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예측)				예측				예측
실질 GDP	-6.6	-2.0	5.6	1.2	2.3	2.0	1.7	0.9	0.4
개인소비	-4.9	1.1	3.0	0.5	1.3	0.8	0.7	0.7	0.6
주택투자	7.3	-7.8	22.4	-3.5	3.9	3.7	8.7	1.2	-3.9
설비투자	-3.5	-2.1	-1.6	1.9	2.4	3.2	4.0	3.0	2.6
재고투자(기여도)	-2.9	-0.0	1.1	-0.3	0.2	0.2	0.2	0.1	0.1
정부소비	1.9	2.9	0.9	1.9	1.5	1.1	0.4	1.2	1.2
공공투자	-7.2	29.8	-3.9	8.1	18.2	13.0	3.5	-4.4	-9.8
공적재고(기여도)	0.0	0.1	0.0	0.0	0.0	0.0	0.0	0.0	0.0
수출	-0.2	-21.7	32.7	2.2	4.7	4.1	4.1	3.2	2.5
수입	4.5	1.7	14.9	2.3	4.9	3.9	3.8	3.3	3.2
국내민간수요(기여도)	-5.7	0.2	3.2	0.1	1.3	1.1	1.3	0.9	0.6
관공서수요(기여도)	0.1	1.8	0.0	0.8	1.1	0.8	0.3	0.0	-0.2
순 수출(기여도)	-0.6	-3.9	2.3	-0.0	0.1	-0.0	0.0	-0.0	-0.1

(전년 동기비율, %)

	2011년				2012				2013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예측)				예측				예측
명목 GDP	-2.2	-4.0	-2.9	-1.7	0.6	2.3	1.5	1.3	0.8
GDP디플레이트	-1.9	-2.4	-2.2	-1.4	-1.3	-0.4	-0.5	-0.2	-0.5
소비자물가(신선제외)	-0.8	-0.2	0.2	-0.1	-0.1	-0.3	-0.4	-0.3	-0.3
완전실업률(%)	4.7	4.6	4.4	4.2	4.2	4.2	4.1	4.1	4.0
엔/달러 환율	82	82	77	77	78	79	80	80	80

자료 : Business & Review 2012.1, 일본총합연구소

- 2011년 대지진은 1995년 대지진과 달리 경기회복에 어려움이 예상
 - 금번 지진은 피해범위가 넓고 공급망의 단절로 인해 전국단위의 생활·물류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원전사태로 수도권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복구재원 마련을 국채발행 이외의 증세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

3. 무역정책

□ 「포괄적 경제연계(FTAAP·EPA)에 관한 기본방침(2010)」

- 일본 정부는 2010년 11월 세계의 주요국과 경제연계를 추진하는 포괄적 경제연계협정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의결정
 - 주요 무역국과 경제연계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국내개혁의 선행적 추진
 - 경제연계추진과 자급률향상(41%→50%), 국내농업·농촌진흥을 병행
- 2011년 5월에는 정책추진지침을 각의 결정
 - 「FTAAP·EPA를 위한 각료회의」에서 「기본방침」에 기초한 경제연계 추진이나 경제안전보장확립 등 지진·원전피해 농어업인의 정서, 국제 교섭의 진척상황, 산업공동화를 고려하면서 검토한다는 지침
 -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교섭참가의 판단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 2011년 5월 미·일 수뇌회담에서 TPP참가 여부를 조기에 판단한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나, 여당 내부의 강한 반발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
- 일본이 TPP교섭참여에 적극적인 이유는 한국의 공세적인 FTA협정체결로 수출시장에서 우위성을 확보한다는 위기감도 중요한 배경
 - 한국에 뒤쳐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시장개방이 필요하나 국가 간 양자협상으로는 무역자유화속도가 느리다는 판단
 - TPP는 교섭참가국의 일괄타결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와 동시에 무역자유화 협상을 위한 의지로 판단됨
- TPP교섭참가국간에는 이미 상당수 양국·다자간 FTA발효·교섭 중
 - 현재 TPP에 참여하는 9개국 GDP합계는 16조 달러로, 미국(88%)과 호주(6%)가 94%를 차지하며, APEC전체 GDP 중 TPP참가국 비율은 50.65%
 - 일본은 9개국 중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6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

- 2009년 기준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약 82.2%로, 무역확대가 경제성장의 절대조건이지만, 동년 무역의존도가 약 22.2%에 불과한 일본은 무역 확대만이 경제성장의 절대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자유화 반대론자의 주장

〈 광역FTA구상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위치(2009년~) 〉

(단위 : %)

		ASEAN+3	ASEAN+6	APEC (FTAAP)	TPP (P9)
세계인구에 차지하는 구성비	67.3억명	31.2	49.2	40.4	7.4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구성비	57.8조달러	21.4	25.6	55.1	27.7
일본과의 무역액(수출입)	1조1,323억달러	38.9	45.9	70.8	25.2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 잔액	7,404억달러	19.4	25.3	59.8	40.6

주1) ASEAN+3 : ASEAN, 일본, 중국, 한국

ASEAN+6 : ASEAN,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APEC(FTAAP)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apr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환태평양전략경제연계협정(TPP) :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뉴질랜드,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주2) 세계경제는 세계의 명목GDP(시장환율환산 달러기준)

주3)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잔고 중 TPP는 통계제약을 이유로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6개국 합계이며, APEC는 브루나이, 칠레, 파푸아뉴기니아, 페루 제외

주4) 세계인구는 180개국 합계

〈 TPP교섭참가국의 기존 FTA와의 관계 〉

		교섭참가국								옵서버	비고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부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교섭참가국	싱가폴		○	○	○	○	○	○	○	○	교섭중	○
	뉴질랜드	○		○	○	신규	○	신규	○	○		
	칠레	○	○		○	○	○	신규	합의완료	○	○	
	브루나이	○	○	○		신규	○	신규	○	○		○
	미국	○	신규	○	신규		○	○	신규	신규	○	
	호주	○	○	○	○	○		신규	○	○		교섭중
	페루	○	신규	○	신규	○	신규		신규	신규	○	교섭중
	베트남	○	○	신규	○	신규	○	신규		○		○
	말레이시아	○	○	합의완료	○	신규	○	신규	○			
캐나다	교섭중		○		○		○					
일본	○		○	○		교섭중	교섭중	○	○			

주 : '○'는 FTA발효완료, 합의완료는 FTA서명완료, 신규 또는 교섭중은 FTA교섭중

□ 일본정부의 환율정책 기본방향

- 2011년 10월 일본은 환율급등에 대해 ①환율상승 고통완화와 고용기회 해외유출 방지, ②고환율 이익환원을 기본 대응방향으로 설정
 - ①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고용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광업 지원, 기업 R&D·생산거점에 대한 입지보조, 신규수요(절전·신에너지)촉진 등
 - ②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해외투자·해외자원확보, 해외연구자 초빙활용, 해외 유학촉진, 국민·소비자에 대한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 환원 등
 - 대책의 기본골격은 환율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거점을 국내에 만든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경기침체와 국내 산업공동화를 예방한다는 점
 - 국비 2조엔 투입하여 사업규모 총 23.6조엔 규모의 대책으로 실질국내 총 생산(GDP)증가효과 약 0.5%, 고용 약 30만명 유지·창출을 기대
- 2011년 12월 엔화환율상승에 대한 종합대책을 각의(국무회의)결정
 - 2011년도 3차 보정예산에 산업공동화대책 5천억엔 계상, 4차 보정예산에 외환시장개입자금인 「외국환율자금증권」에 15조엔 증액하여 46조엔분 발행
 - 1달러 75엔, 1유로 100엔에 이르면 2011년 하반기 제조업 전체 경상이익 1,200억 감소(일본총합연구소추산)

2. 일본 경제정책의 기본시점과 방향

1. 신 성장전략과 경제대책

□ 일본의 신 성장전략과 경제대책

- 2010년 9월 「신 성장전략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 각의결정
- 경제대책은 두 가지 시점과 다섯 가지 골격으로 구성
 - 환율상승과 해외경제침체 등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동시에 저탄소사회 구축 등 「새로운 성장전략」의 조기추진이라는 시점에 입각한 대책

〈 일본이 추진하는 신 성장전략의 개요 〉

일본의 신 성장을 위한 7전략 21국가프로젝트

2010년 6월 18일 각의(국무회의)결정

전략 1 : 환경·에너지대국 전략(그린이노베이션)

- (1) 「고정자산취득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가능에너지·조기 확대
- (2) 「환경미래도시」 구상
- (3) 산림·임업재생플랜

전략 2 : 건강대국전략(라이프이노베이션)

- (4) 의료실용화촉진을 위한 의료기관선정제도
- (5) 국제의료교류(외국인 환자유치)

전략 3 : 아시아경제전략

- (6) 해외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인프라 전개
- (7) 법인 실효세율 인하와 아시아거점화 추진
- (8) 글로벌 인재육성과 외국인 인재 등의 유치확대
- (9) 지적재산·표준화전략과 일본문화의 세계화 추진
- (10)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의 구축을 통한 경제연계전략

전략 4 : 관광·지역 활성화 전략

- (11) 「종합특구제도」 창설과 철저한 항공자유화추진 등
- (12) 「일본방문 외국인 3,000만명 프로그램」 과 「휴가사용 분산」
- (13) 중고주택·리모델링 시장의 배증(倍增) 등
- (14) 공공시설의 민간개방과 민자 유치사업 추진

전략 5: 과학·기술·정보통신 입국 전략

- (15) 「Leading 대학원」 구상 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
- (16)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 활용의 촉진
- (17) 연구개발투자 강화

전략 6 : 고용·인재육성전략

- (18)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체화 등
- (19) 「실천경력향상(경력단위제도)」 제도와 「개인별 지원제도」 의 도입
- (20) 공공영역의 재검토

전략 7 : 신 금융 입국전략

- (21) 종합적인 거래소(증권·금융·상품)개설을 추진

□ 일본의 신 성장전략과 경제대책의 기본골격

- 정책기본골격은 「고용」·「투자」·「소비」·「지역방재대책」·「규제·제도개혁」
- 새로운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고용」 기반조성
 - 저탄소형 고용창출산업 입지지원(에코카, LED, 리튬전지 등 그린산업)
 - 엔화 환율상승 등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하여 고용을 유지
 - 인력수요가 큰 중소기업 등과의 매칭을 강화하여 고용의 장을 마련
- 산업공동화예방을 위한 「투자」 기반조성
 - 저탄소형 고용창출산업 입지추진사업 확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 저탄소 사회실현을 바탕으로 한 「소비」 기반조성
 - 주택 에코포인트제도, 가전 에코포인트제도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에코 관련 가계수요지원
-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역 방재대책」
 - 병원 등의 내진대책, 긴급방재대책
- 「규제·제도개혁」 조기추진
 - 예산·세제지원 등의 재정조치 이외에 수요·고용창출효과가 큰 규제·제도 개혁을 추진
 - 도시재생·주택, 환경·에너지, 의료·계호, 관광진흥 등 지역활성화, 경제전략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제도개선 100선을 발굴추진

중 국

국 가	중 국	작성자 상하이 aT센터
------------	------------	------------------------

I 중국 농업정책

1.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주요 농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三農(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투자확대 ○ 농업생산 확대 ○ 농산물 유통 및 시장조절 규제개선 ○ 농업기술 장비수준 제고 ○ 농촌 민생개선 및 농촌개혁

□ “三農” 투자 확대 및 “强農惠農” 정책 강화

- 재정지출의 중점을 농업, 농촌에 둬으로써 농업, 농촌분야 재정투입 증대
 - 예산 내 고정자산투자의 중점을 농업농촌 기초시설건설에 집중시켜 예산 총액과 비중 제고
 - 토지매도 수익의 중점을 농업토지개발, 농전 수리 및 농촌기초건설 분야로 집중시켜 농지 및 기초건설 분야의 지출 확보
- 금융기관의 농업신용 대출규모 확대 등 “三農”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 농업생산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 확보

-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확대는 ‘12년 “三農”의 중점사항으로 식량의 파종 면적 확보를 통한 단위당 생산량 제고

- 전국 식량생산 천억 근 증산계획, 전국 자포니카 벼 생산 확대 계획, 식량주산지의 이익보상제 구축, 채람자(장바구니)공정*, "대생산·대유통" 견지, 우수 생산지의 생산능력 제고, 산지직판 확대 등

* 菜籃子(장바구니) 공정 : '88년 농식품의 수급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가 수립한 일종의 민생 공정(농식품 안정공급 프로그램)

□ 농산물 유통 및 시장조절 규제 개선을 통한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 및 농산물 판매네트워크 구축

- 집무시장* 및 할인마트 임대비에 관한 규정 확립, 농산물시장 관리감독 강화, 곡물과 면화 등 주요 농산물의 수매질서 유지, 허위정보 및 물가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등 다양한 조절규제수단을 통한 농산물 시장 안정화 유지

* 集貿市場 : 일정시간 간격으로 일정지점에서 주변거주민이 상품을 교역하는 장소

□ 농업기술 및 장비수준 향상으로 농업발전의 기초역량 강화

- '20년까지 8억畝* 高표준 農田건설을 위한 "전국 고표준 農田건설계획"의 제정·실시

- '11년 전국의 향진 및 지역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 동식물 병충해 예방작업, 농산물 품질감독 등의 업무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혁신과 보급능력 강화

* 1畝 : 약 202평(8억畝 : 1,613억 평)

□ 농촌민생 개선

- 농민 직업기술 및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모색, 농촌의 식용수, 도로, 가스, 노후주택의 개조, 농촌교육, 3급 의료위생서비스 체계 및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확립, 신형 농촌사회 양로보험 시범지역 확대, 향후 10년 농촌 빈곤지역 개발요강 제정·실시

□ 경지보호 정책조치

- 당(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경지보호를 위한 일련의 중대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여 경지보호 강화정책을 실시함

- 1986년 “토지관리 강화와 경작지 무단침범 제지에 관한 통지” 발표
 - 1992년 “경작지 남용과 파괴금지에 관한 통지” 발표
 - 1994년 “기본농지보호조례” 발표
 - 1997년 “토지관리 강화 및 경지보호 강화관련 통지” 발표
 - 1998년 경지보호를 “형법”에 삽입하였으며 “경지파괴죄”, “불법토지승인죄”, “불법토지 양도죄” 신설
- 16기 3중 전회에서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시행하여 국가식량안전을 보장하기로 결정함.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관철,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은 ‘04년 “토지관리의 심화·개혁에 관한 규정”(국발(2004)28호)을 제정하여 구체적 방안 제시
- 첫째,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농지를 확정하고 기본농지에 대한 보호강화
 - 둘째, 건설용 토지는 성(省)급을 넘어 확대해서는 안 됨
 - 셋째,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의 권리 확정, 등록과 허가증 수여를 계속적으로 진행
 - 넷째, 토지 도급 경영권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킴

□ 식량수매정책

○ 최저수매가격정책의 시행

- ‘98년 이후 5년 연속 식량생산이 감소하여 ‘03년에는 ‘98년 대비 16% 감소한 4억 3070만 톤에 불과하자 중국정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정책 조치를 단행
- ‘04년 봄 파종 전 국가에서는 최저수매가격 정책을 발표하고 뒤이어 “식량유통체제 개혁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2004] 17호)을 통해 이를 제도화시키고 최저수매정책을 실행
- ‘05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벼 최저수매가 정책, ‘06에는 밀 최저수매가정책을 실행
- ‘08년에는 최저수매가격을 두 차례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일부 식량의 최저수매가정책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

○ 식량비축제도의 완비

- “식량유통체제의 개혁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2004] 17호)에서 중앙과 성급정부의 직권에 따라 식량 비축제도와 조절제도를 철저히 완비토록 지시
- 즉 “생산지역은 3개월 분량의 판매량을, 판매지역은 6개월 분량의 판매량을 유지”하도록 요구
- ‘06년 국무원은 이러한 시장화 개혁요구에 부합하도록 중앙에서 식량비축 조절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식량비축관리회사는 어떠한 상업적 경영 활동에도 참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

○ 식량가격 파동에 효율적 대처

- ‘06년에 중앙비축은 모두 24차례의 벼 경매와 7차례의 밀 경매를 실시하였고, ‘07년에는 총 43차례의 벼 경매와 48차례의 밀 경매 실시하여 식량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

○ 식량위험기금 운용

- ‘식량유통관리조례’에 의거 식량위험기금은 종자식량 농민직접보조, 식량 비축지원, 식량시장안정 등에 사용

○ 식량 산지와 주요 판매지역에서의 이익조절체계 구축

- 생산지역의 식량판매를 확보하고 판매지역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유통체제의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2004] 17호)에서는 주요 식량판매지역과 주요 생산지역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매 및 판매 합작체제를 마련하고 주요 판매지역은 주요 생산지역의 식량생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
- 주요 식량판매지역과 생산지의 이익 불균형에 관해 “식량유통체제의 개혁정책 실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2006] 16호)에서는 주요 판매지역 간의 이익조절체제를 마련하고 경제발달지역인 주요 식량판매지역은 중앙재정보조의 식량위험기금을 식량의 생산과 판매와 연결해 사용하고 주요 생산지역에서의 식량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촉구

□ 채람자공정(菜籃子工程, shopping basket program)

○ 개요

- 채람자(장바구니)공정은 '88년 농식품의 수급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부가 수립한 일종의 민생공정(농식품 안정공급프로그램)

○ 채람자공정의 4대 정책과제

1) 산업화경영 발전 추진

- 선두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채람자 생산전업 합작사와 농촌 중개인의 농산물 가공기업 설립추진
- 채람자 선두기업과 농민전업 합작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채람자 상품생산과 유통 조직화 수준 제고
- 농업생산자와 슈퍼마켓의 연결을 전면적으로 전개. 채람자 합작사의 신선농산물이 직접 대형 슈퍼나 유통기업에 연결되고 합작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경로와 조치를 모색

2) 원예농산물 집약화 생산지역 건설 강화

- 채소, 과일, 차 등 원예농산물 우세지역에서 생산기반을 굳건히 하고, 원예농산물의 표준화·규모화·집약화 수준, 자연재해와 시장위험 방지 능력 및 상품품질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농민소득 증대추진
- 이를 위해 집약화 육묘시설 건설 및 표준화 생산시설, 상품화 처리시설 건설강화를 추진

3) 농산물 품질안전 강화

- 농업표준화 추진,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체계와 이력제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검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채람자의 품질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

4) 농산물시장 유통체계 구축

- 현대물류와 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농산물 시장시스템 건설을 가속화

2. 중국의 수출농업정책

- 중국은 한국 등 기타국가와 달리 현재까지 농식품 수출을 주관하는 기관은 없으며, 중국 상무부에서 수출정책을 총괄
 - * 外貿司 農產品貿易一處 : 양식, 면화, 유지, 당, 양모, 연초 수출입담당 (010-6519-7785)
 - * 外貿司 農產品貿易二處 : 기타 농산물 수출입담당(010-6519-7755)
- 중국의 농식품 수출정책 수립은 '06년에 발표된 "농산물 수출 11.5 발전규획(农产品出口“十一五”发展规划)"이 최초이며, 이후 추가발표 자료는 없음

<“농산물 수출 11.5 발전규획” 주요내용 >

* 11.5 발전규획 :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06~'10)

1. 기본원칙

- 과학적 시각으로 발전을 이루고 농촌취업과 농민수입 증가추진
- 중국 인력자원 우위를 활용하여 토지와 수자원부족을 극복하고 과학적 발전목표와 전략의 수립·실행
- 기술혁신으로 핵심경쟁력 육성
- 마케팅 방향설정 및 적극적 수출경영체 육성

2. 농산물 수출목표

□ 총괄목표

- “11.5” 기간 동안 수출계획 총괄목표는 '10년까지 농산물 수출액 380억불 및 연간 평균 성장률은 7% 달성
- 원예, 수산물, 축산물 등 우위 농산물의 품질과 가공농산품의 비중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수출품목과 브랜드 육성

- 농산물 수출조직화를 강화하여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조직을 설립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수출 선두기업 육성
- 수출시장의 관련법규 및 수출업체 기술훈련 강화로 전면적인 품질안전 통제능력 향상추진
- 각 지역의 수출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전략 수립 및 전통적 수출 시장에 대한 발전은 물론 신규시장 개척을 강화하여 수출목표 시장 다변화 추진

□ 품목별 수출전략

- 수산물, 해산물 및 관련제품 수출우위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동남아 지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시장 개척추진
- 원예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수준을 높이고 미국 및 유럽시장 개척.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유럽과 미국시장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추진
- 농축채소주스, 건채소, 유아채소식품 등 부가가치와 영양이 높은 深加工 제품 개발추진
 - 아스파라거스, 마 등 국제시장에서 유행하는 공인된 보건가치를 지닌 채소 생산가공
 - 과일 신선도 유지기술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새로운 농축과즙 시장개척
 - 식용버섯, 삼나물 등 국제시장에서 인기 있고 보건기능이 있는 채소 생산가공
 -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홍보하고 식용버섯, 절임채소(泡菜), 콩으로 만든 식품, 조미료 등 동방 민족특색이 있는 전통식품을 유럽과 미국시장에 수출확대
- 축산제품 수출확대 추진
 - 홍콩 및 동남아시아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여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소고기와 양고기 수출시장 적극개척
 - 육가공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위생등록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HACCP을 널리 보급

- 수출기업의 품질안전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역병(疫病)지역에 대한 감독을 규범화하고 적극적 농업규범(GAP) 표준화 생산 보급추진
 - 수출등록, 양돈·양계장 등록관리를 강화시켜 홍콩과 마카오에 산(活) 축산·가금류에 대한 품질 안전관리 보급으로 제품 품질안전 수준제고
- 곡물, 콩 및 관련제품 수출은 전통 수출시장 점유율 유지노력
- “11.5” 기간 동안 전면적 기술혁신,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농산물 가공제품 수출을 발전을 통해 곡물, 콩 및 관련 제품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토록 하고 농산물 가공제품 수출액을 190억불 달성추진

□ 시장별 추진전략

- 다원화된 글로벌 농산물 시장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11.5” 기간 동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임
- 일본, 홍콩, 아세안, 한국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유럽, 미국시장 개발추진
 - 러시아, 캐나다, 인도 등 국가의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추진
- 전통적인 수출시장 확립
- 일본은 세계 주요 농산물 수입국 중에 하나이자 중국 농산물 최대 수출 시장으로 중국 수출 농산물의 1/3을 일본으로 수출
 - 중국은 일본의 제2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11.5” 기간 동안 일본에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시키고 특히 가공제품 수출을 확대추진
 -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농산물 수출시장이자 최근 10년 중국의 제3대 수출시장으로 농산물 무역관계가 점차 깊어지고 있음. 중국은 주로 한국에 곡물과 수산물, 채소와 유지작물(油料)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역 등 제반 우세한 점을 활용하여 한국 내 농산물 수출 점유율 제고 추진
- 잠재시장 심층개발
- 아세안시장 :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기회, 지리적 인접과 식습관의 유사한 점을 이용하여 중국 축산물 및 가공제품 수출확대
 - 유럽시장 : 양질의 부가가치가 높은 심가공 축산물, 원예농산물, 수산물 및 유기농 수출확대
 - 미국 : 중국 농산물의 비교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미국 수출을 추진

○ 신흥시장 개척

- 최근 중국은 러시아, 중동, 남미, 중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11.5" 기간 동안 적극적 신흥시장과 안정적인 무역채널을 건설하고 업체들을 도와 위험방지 시스템을 설립하여 주로 가격적 우위를 점한 양식(쌀), 채소, 연초 등 수출추진
- 중국 농산물의 대만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며, 수출제품은 상호 보완성이 높은 온대 농산물과 지방 특산품을 위주로 추진

3. 농산물 수출확대 관련 정책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출 농산물 경쟁력 제고

- 수출 농산물 근원에 대한 통제 강화
- 농산물 수출 가공절차에 대한 통제강화
- 농산물의 검사, 안전감시 시스템 개선 및 강화

상품구조를 최적화하여 브랜드 전략 실시

- 심가공 농산물 수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수출권장
- 외국 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국내의 자주적인 연구개발 추진하며, 지적소유권을 개발하여 핵심경쟁력 제고
- 농산물 원산지라벨 등록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검사면제 관련 규정에 부합된 제품은 법대로 우선적으로 검사 면제하고 신용이 좋고 원산지 보호라벨이 있는 농산물들의 통관 편의제공
- 제품 품질 기준체계를 설립하여 농산물 수출 업계기준 및 표시를 적극적 추진
 - 표준화 파종, 양식을 보급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농산물 생산을 감독 통제
 - 제품품질을 보증하는 동시에 제품품질 식별표시(기준단위 실제단가, 제품원료(성분 라벨), 식품영양품질(영양라벨), 제품의 선도(생산시기) 등 포함)를 통해 제품이 품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진
- 유명 농산물 브랜드의 해외마케팅 추진계획 제정

□ **교육과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 농산물 무역정보 발표시스템과 상품수출 경고시스템 설립
- 농산물 수출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 농산물 수출교육 전개로 종사자 역량강화
-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 적극지원
- 물류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출 효율성 제고

□ **업계 건설을 강화하여 농산물 수출 조직화 강화**

- 농업생산 조직화 수준 제고 추진
- 농산물 수출업계 설립 강화
- 농산물 수출 경영업체의 지원 육성

□ **농산물 수출에 관한 지원정책 시스템 확대**

- 중앙대외무역발전기금(中央外贸发展基金)으로 농산물 수출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
- 대출여건에 적합한 농산물 수출업체에 적극적 대출지원 제공
- 농산물 수출정책성 보험제도 완비
- 세수 지원정책 개선
- 농산물의 검사검역비용 감축 및 신속 통관지원

□ **대외 교섭력 강화로 양호한 국제환경 조성**

4. 일반 수출지원 정책 (농산물 포함)

□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의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및 환급실시

〈 제 15조 부가가치세 면제 물품목록(2009.1.1 시행)〉

- ①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체 생산농산물
- ② 피임약품 및 도구
- ③ 고서적
- ④ 과학연구, 과학실험 및 교습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기기, 설비
- ⑤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용 제품
- ⑥ 본인이 기 사용한 제품의 판매

* 이를 제외한 증치세 면제, 감세 항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름

※ 출처 : http://www.gov.cn/zwgk/2008-11/14/content_1149516.html

□ 수출세환급 관련 정책

- 중국 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세무총국 수출물품 환급세율 조정통지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出口货物退税率的通知>를 따름

〈국가세무총국 수출환급세율 조정 통지 주요내용(2003.10.13 발표)〉

1. 아래의 물품은 본래 환급세율 유지한다.
 - (1)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5%와 13%인 농산물
 - (2)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13%인 농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공업제품
(본 통지 제 3조와 제 4조에서 규정한 부분은 제외)
 - (3) 현행 세수정책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17%이거나 환급세율이 13%인 물품(본 통지 제 3조와 제 4조에서 규정한 부분은 제외)
 - (4) 선박, 자동차 및 관련 부속품, 항공우주 기계, 수치제어 기계, 가공센터, 인쇄전로, 철도기관차 등 현행 환급세율이 17%인 물품(제품코드 및 명칭별도 부록 참조)
2. 소맥분, 옥수수가루, 절단 오리, 절단 토끼 등 부록에서 제시하는 제품수출 환급세율은 5%에서 13%로 인상한다.
3. 원유, 목재, 펄프, 양모, 새끼장어, 희토광석, 인광석, 천연흑연 등 부록에서 제시한 물품의 수출환급정책을 취소한다. 그 중 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 마땅한 물품의 수출소비세 면제정책을 취소한다.
4. 아래와 같은 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낮춘다.
 - (1) 오일(HS코드27101110), 미세공 아연(HS코드7901)의 수출환급세율은 11%로 낮춘다.

- (2) 미세공 알루미늄, 황인 및 기타 인, 미세공 니켈, 합금 주철, 목 광사 및 그 정광 등 부록4에 나열한 물품의 수출환급세율은 8%로 낮춘다.
- (3) 코크스, 점결탄, 형석, 활석, 동석 등 부록 5에 제시하는 물품 수출환급세율은 5%로 낮춘다.
- (4) 제1조, 제2조, 제3조 및 본 조에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에 현행 환급세율이 17%와 15%인 모든 물품의 수출환급세율은 일괄적으로 13%로 낮추며, 현행 관세율과 환급세율이 모두 13%인 물품은 11%로 환급세율을 낮춘다.

※ 출처 :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63/n8193451/n8193571/n8194691/8252310.html>

- 최근 발표한 일부제품 수출 환급세 취소에 관한 통지<关于取消部分商品出口退税的通知>에 따르면 알코올 및 옥수수 전분의 수출환급세가 취소됨

<일부제품 수출 환급세 취소 통지 주요내용(2010.7.15 시행)>

1. 일부 철강
2. 일부 유색금속가공재
3. 은가루
4. 알코올, 옥수수전분
5. 일부 농약, 의약품, 화공제품
6. 일부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고무 및 그 제품, 유리 및 그 제품

* 수출환급세 취소 농산품 리스트 (총 406 품목 중 농산품 발취)

NO.	HS 코드	상품명
1	1108120000	옥수수 전분
2	2207100000	80도 이상의 변성알코올
3	2207200010	모든 농도의 변성 알코올
4	2207200090	모든 농도의 기타 알코올

※ 출처 : http://sx.mof.gov.cn/lanmudaohang/zhengcefagui/201006/t20100623_323961.html

□ 중국 수출신용보험

- 현재 중국은 수출신용보험에 관련된 법률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정책성 수출신용보험은 기타 일반 상업보험과 같을 동일하며 중국 인민공화국 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을 적용

〈중국수출신용보험 현황〉

중국 수출신용보험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음. 1989년부터 중국인민 보험 회사가 수출신용보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로 단기업무 위주였고, 1992년부터 중장기 업무를 시작함. 1994년 정책성 은행을 설립함에 따라 중국수출입은행도 수출신용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국무원은 전문적인 국가신용보험 기구의 설립을 비준함. 주요업무는 중국인민보험회사와 중국수출입은행이 각기 처리하던 신용보험 업무를 통합한 것임

□ 수출신용대출(出口信贷)

- 현재 수출신용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공식적 기구는 중국수출입은행 이외에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국제발전은행 등 상업성은행임. 각 은행은 주로 자본성 화물선박, 전기기계 및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에 수출신용대출을 제공함

〈수출신용대출 주요내용〉

- 수출 판매자 신용대출 : 수출상의 전자 기계제품, 설비세트와 첨단기술 제품의 제조 및 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의미하며, 주로 수출상의 수출상품 제조 및 구매 해결 혹은 관련 노무의 자금수요를 제공함
 - * 출처 : http://www.eximbank.gov.cn/yewuarticle/yewu/expmfxd/200807/6196_1.html
- 수출 구매자 신용대출 : 국외 차입인에게 제공하는 중장기 신용대출로, 중국 제품, 기술 및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상(업주)이 중국수출상(도급업자)에게 즉시 지불해야 하는 상무계약금에 사용됨
 - * 출처 : http://www.eximbank.gov.cn/yewuarticle/yewu/expbuyxd/200807/6197_1.html

- 중국수출신용대출은 자본성 화물의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3. 중국의 농업(식품) 관련 주요정책

주요정책	실시시기	관련기관	주요 내용
식품안전 국가기준 포장식품라벨통칙	'12. 4. 12	위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성분함량, 규격, 생산자,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포장식품 라벨표기 관련 규정 · 2011년 4월 기존규정 갱신 발표
2012년 관세실시방안	'12. 1. 1	국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관세 인하정책 · 관세인하 품목은 유류품, 유아식품 등 총 730여개 품목으로 평균 관세율을 4.4%로 조정 · 식품 관련품목은 총 28개 품목이며, 한국산 대중 수출관련 품목은 냉동넙치, 냉동대구, 어란 등 수산물과 분유 등 유아식품이 있음
전국 가축가금류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방안	'12	농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까지 50개 이상 신품종 가축가금류를 육성하고 산업화된 지방품종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려 가축가금류 육종기업을 육성 · 우수한 축산제품 생산능력과 가축가금업종 경쟁력 향상추진 · 동 방안은 향후 5년 가축가금류 유전자원보호 방향과 주요임무를 명시한 것으로 돼지, 소, 양, 닭, 오리과 거위 등이 주요 가축가금류임
2011년 농산물 수입관세쿼터 재분배 공고	'11. 8. 8	상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2011년 농산품 수입관세쿼터 재분배 공고>를 제정
일부업종 농산물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공제 관리방법 시범시행 공고	'11. 6. 28	국가 세무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업종의 농산물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공제 시범실시 및 매입세 공제율과 매출세 징수율 통일추진
식품불법첨가행위 단속 및 식품첨가제 감독관리 강화통지	'11. 6. 20	국무원 판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불법첨가행위 및 식품첨가제 감독 관리 강화를 통한 인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수입수산물 검역관리방법	'11. 6. 1	국가 질검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입 수산물 수입검사검역 감독관리 관련 세부규정
수입육류 검역관리방법	'11. 6. 1	국가 질검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입육류 수입검사검역 감독관리 관련 세부 규정

주요정책	실시시기	관련기관	주요 내용
2011년 국가식량증산 및 농민수입증대 지원정책 홍보요강	'11. 3. 28	농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농(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민 우대정책 확립
밀가루 생산 시 과산화벤조일과 과산화칼슘 첨가 금지에 관한 공고	'11. 2. 11	위생부, 상무부 등 7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품첨가제는 기술적으로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후에 사용허용범위 규정에 들 수 있음 식품첨가제인 과산화벤조일과 과산화칼슘은 기술상 위험평가를 거칠 필요성이 없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09. 7. 8	국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른 조례 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09. 6. 1	전국인민 대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식품첨가제 등 안전표준 및 위험검측과 평가, 생산경영, 검사, 수출입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등 국가 식품안전에 관한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 지원
국가 유기농식품 우선발전에 대한 의견	'09	상무부, 과기부, 공상총국, 계감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식품 발전을 적극적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인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기농 채소, 식량, 가축가금, 차잎 등을 우선추진 전체 식품시장의 0.1%에 불과한 유기농식품 생산량을 10년 내 5~10배 증가 추진
농업 산업화와 농산물 가공 추진 행동방안	'06. 5. 29	농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산업화와 농산물가공 추진계획을 조직하여 실행
수입과일 검역관리방법	'05. 7. 5	국가 질검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신선과일 수입검사검역 감독관리 관련 세부 규정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	'05. 7. 1	국가식품 약품감독 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신청 보건식품에 대한 검사 실시, 신청과 허가절차 및 요구사항 규정
보건식품 위생관리방법	'96. 6. 1	위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식품은 요구에 부합되고 보건기능이 있는 식품은 위생부의 심사를 받아야 함 보건식품의 생산과정, 조건은 상응하는 식품생산기업 위생규범과 기타 관련 위생요구 부합되어야 하는 조건 등

II

중국 일반경제 동향

1. 2011년 중국 경제동향

- 중국 경제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통화긴축 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GDP 성장률이 '11년 1/4분기 9.7%에서 4/4분기 8.9%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나, 유럽 재정위기로 '11년 연평균 성장률이 8%대에 그칠 것이라는 서방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뛰어넘는 **9.2% 예상**
 - * GDP 성장률 : ('10. 4Q) 9.8 → ('11. 1Q) 9.7 → (2Q) 9.5 → (3Q) 9.1 → **(4Q P) 8.9**
 -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11년 1분기를 정점으로 둔화
 - 경기선행지수도 지속 하락하여 2개월 연속 100을 하회

- (소비자물가) '11. 10월 이후 상승률 하락폭이 가속화되고 있음
 - '11.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하여 9월 6.1%, 10월 5.5%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

- (소비·투자) '11. 11월 소매판매와 도시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각각 17.3%와 21.2%로 과거('07~'11. 11월) 평균 수준을 유지

- (수출입) '11. 9월 이후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 '11. 11월말 현재 수출은 전년 대비 21.0%증가, 수입은 **24.2%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843억불 흑자이나 전년 대비 8.5% 감소
 - 지역별로는 EU 등 글로벌 재정위기 관련국가에 대한 수출이 최근 들어 부진한 추세

* '11. 11말 현재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 증가율(전년 대비)

- 수출(전체 21.0%) : 일본(23.3), 한국(22.5), **EU(15.1)**, 미국(14.8)
- 수입(전체 24.2%) : 일본(11.9), 한국(17.5), EU(26.8), 미국(19.7)

〈 중국의 EU에 대한 최근 월별 수출증가율(전년 대비) 〉

구 분	'11. 8월	'11. 9월	'11. 10월	'11. 11월
증가율(%)	22.3	9.8	7.5	5.0

- (통화) '10년 초 이후 기준율과 예금·대출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는 등 긴축기조를 지속해 왔으나, 12월초 기준율을 0.5P 인하하여 긴축기조 일부 완화
 - 총통화(M₂) 증가율이 '11년 초에는 목표치인 16%를 상회하였으나,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11월 12.7%로 하락

- (부동산) 부동산(36개 도시주택 및 상업용 건물) 가격은 '10. 2월 전년 대비 34.8%까지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투기억제대책* 시행으로 안정세 회복
 - * 현금납부비율 인상, 양도세 부과기준 변경, 3주택 보유금지, 보유세 도입 등

- 주택(70개 도시) 가격은 '11. 9월 이후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락추세로 진입

〈 한국관련 경제동향 〉

1. 수출입현황

□ '11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4.9%증가한 1,342억불, 수입은 20.8% 증가한 864억불로 **478억불 흑자 실현**

-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
- 수입은 '09. 12월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2011년 대중국 수출입실적 〉

(단위 : 억불, %)

구 분	2011년		2010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1,342	14.9	1,168	34.7
수 입	864	20.8	716	31.9
무역수지	478		452	

□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제품이 대중국 3대 수출품

- 석유제품이 68.1% 급증한 반면, 반도체는 오히려 감소
- 수입은 무선통신기기가 전년 동기대비 72%로 크게 증가

〈 2011년 1~11월 대중국 5대 수출입 품목 〉

(단위 : 억불, %)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평판디스플레이	186.1	9.8	반도체	61.2	1.3
반도체	143.6	△9.6	컴퓨터	54.9	0.4
석유제품	100.4	68.1	철강판	52.2	41.5
합성수지	68.1	8.0	무선통신신기기	43.5	72.1
석유화학합성원료	41.3	30.3	평판디스플레이	38.8	8.1

* 자료원 : kita

2. 대중국 투자 및 투자유치 현황

□ '11. 9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투자는 21,645개사, 347.8억불임

- '11. 1~9월 대중 투자규모는 636개사, 29.2억불임
- 생산비용 상승, 위안화 평가절상 등으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중국 제조업 투자가 점차 감소추세임
- 한국계 투자기업 중 제조업 비중(78.5%)이 여전히 높으나 도소매(5.4%), 건설(2.3%), 금융·보험(4.3%)에 대한 투자비중이 점차 상승
 - * 10대 투자지역 : 산둥, 강소, 북경, 요령, 천진, 상해, 광둥, 절강, 길림, 호남 順

□ '11년 중국의 해외투자액(비금융)은 601억불이며, 이중 대한민국 투자액은 5.5억불임(12.21기준, 홍콩 등 우회투자 제외)

- 중국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및 외환관리국 등의 까다로운 해외투자 심사절차로 중국의 해외투자 상당부분은 홍콩, 싱가포르 및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를 경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규모는 공식 통계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부동산, 지역개발 등 중대형 투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큰 폭의 투자확대가 예상됨
 - 중국 최대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 기업인 "綠地그룹"이 제주도 JDC 프로젝트(신화역사공원 및 헬스케어타운) 개발참여를 위한 10억불 규모 투자 MOU체결('11.12.23)

〈 중국 해외투자 및 대한민국 투자현황 〉

(단위 : 억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1
직접투자액 (비금융)	28.5	55.0	122.6	176.3	248.4	418.6	478.0	590.0	500.1
對한국 투자액 (투자신고 기준)	0.50	11.64	0.68	0.39	3.84	3.36	1.60	4.14	5.5 (12/21 현재)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2. 2012년 중국 경제전망

핵심사항

- '12년 경제핵심과제 : 안정적 성장, 물가관리, 구조조정
 - * 國家發改委에서 '12년 최우선 과제로 "내수확대" 제시
- 경제성장률 : 8%대 유지
- 소비자물가 : 3~4%대에서 안정
- 위안화 환율 : 3% 수준에서 안정적인 위안화 절상기조 유지

□ '12년 중국경제는 부동산 부문의 위축과 수출증가세 둔화로 연간 8%대 성장이 예상되며,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유럽 및 미국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수출둔화가 예상되나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줄어들어 선진국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축소

* 선진국 수출비중 : ('05. 1월) 53.8% → ('11. 10월) 43.8%

〈 주요기관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 〉

기관명	2011년	2012년	전망시기
IMF	9.5%	9.0%	9월
OECD	9.3%	8.5%	11월
ADB	9.3%	8.8%	12월
중국 사회과학원	9.2%	8.9%	12월
노무라증권	9.2%	7.9%	12월

□ (소비자물가)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에 반락하다가 하반기에 재차 반등하여 대체로 3~4%대에서 안정

○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가격, 곡물 등 식품가격 안정,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안정 기조 회복

□ (소비와 투자) 임금상승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어 내수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제12차 5개년 계획('11~'15) : 임금인상, 서비스업 육성 등 내부기반 확충에 중점

□ (수출입)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지만 무역흑자는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유럽, 미국시장이 비관적으로 전망되지만 FTA, ODA 등을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에 수출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시장) 물가상승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부동산 가격은 '12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 구매제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

○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 8%달성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로 '12년에 상승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통화·재정) 통화정책은 현행 긴축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경제상황에 따라 "선제적 미세적(豫調微調)"으로 통화정책보다는 감세 등을 통한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경기둔화가 전망되는 내년 초까지 기준율을 추가 인하하는 완화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환율) 위안화 절상기조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둔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FDI 및 핫머니 유입 감소 등으로 절상속도는 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12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일부 국가에 경착륙이 나타나면서 자금이 선진국으로 선회함에 따라 신흥시장의 화폐 평가절하, 중국의 핫머니 유출이 발생하면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음

< 한국 관련 경제전망 >

1.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대 중국 한국농식품 수출확대 전망

- 중국 정부는 임금인상을 장려하고 소득에 대한 면세점을 높여 실질 소득 증가를 통한 저소득층 구매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음
 - 중국은 '11년 최저임금을 평균 22%를 인상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위안화의 지속적인 강세는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및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12년 위안화 강세와 함께 엔화강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중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농식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로 수요확대
- 중국 정부의 중서부 개발정책에 따른 대규모 투자집행으로 중국 내수 시장 확대 전망



1.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효과와 중국 내 내수 확대효과가 서로 상쇄될 전망이나,
2. 중국 GDP성장에서 무역수지 흑자의 기여도가 낮고,
3. 중국 시장 내 경합 제품의 상대적 가격 상승효과(엔화 강세) 및 한국 상품의 가격 하락효과(위안화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4.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12년 한국 농식품 수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2. '12년 중국 정부의 수입제품 관세율 인하로 한국 상품 경쟁력 강화

□ 2012년 중국 정부는 수입재화 730여 품목(수입식품 29개 품목)에 대한 세율을 최혜국 관세율 절반 수준인 평균 4.4%로 인하 예정

- 관세인하 주요 품목에는 분유(15%→5%), 냉동대구(10%→2%), 수정어란(12%→0%), 넙치(12%→2%) 등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품목은 한국의 대중 수출 상위 품목
- 관세율 인하와 함께 한국산 분유의 대 중국 가격경쟁력 강화 및 냉동대구, 넙치 등 수출유망 수산물 수출확대 전망

3. 중국 부동산 경기의 향방이 중국 경기 및 한국농식품 수출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소비자의 소비여력 감소와 부동산 담보대출은행의 부실을 가져오고, 이는 대출감소로 이어져 다시 부동산 경기와 하락과 소비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 중국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해야 하는 서로 상반된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음
 -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한 통화량 증가 정책이 필요하나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을 초래함
- '12년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한국 농식품 대 중국 수출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미 국

국 가

미 국

작성자

LA aT센터

I

미국 농업정책 동향

1. 정책 배경

1. 농업법(The Agricultural Act)

- 오늘날의 대부분의 정책은 1930년대의 대공황시대에 수립
- 1949년의 농업법(The Agricultural Act)은 미국의 물가와 소득지원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틀로 알려져 있음
- 미국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농업법을 개정하며 2008년 6월에 제정된 식품, 보호 및 에너지 법률(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같은 농업제품 및 가격을 규제하는 법규 (Farm Bills)를 통해 영구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 여러 농업법(Farm Acts)이 모두 농가의 소득문제와 농산물 물가문제를 지원하는 법률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농산품 거래, 외국 식량 원조, 자연보호, 산림, 미국 내 저소득자들을 위한 식품 보조, 농식품 조사 및 교육, 농촌개발, 그리고 마케팅관련 프로그램 같은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 원래의 물자 프로그램은 경제 공황시대와 전쟁 후 특정 물자에 대한 가격 및 소득 지원 조항을 통해 농촌소득을 올리고 유지하도록 하고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함
- 농업정책은 추가된 목적들을 개정해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방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가 농산물 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을 증대시킴

- 단편적 예로 1985년 농업법을 시작으로 1990년과 1996년에 지속적으로 농업 제정법이 실행됨에 따라 미국은 국내 농업정책에 큰 변화를 거쳤음
- 품목정책의 주요 계기가 생산 및 가격관리수단에서 예산에 의한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됨
- 2008년 농업정책에 대한 정책논쟁은 도하 라운드 및 다자간 무역 협상의 배경과는 반대였고 높은 연방 재정 적자에 대한 것이었음
-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계획한 2008년 농업 정책의 전체 예산은 2008~2010 회계 연도에 2,840억불이었음

2. 미국 농업정책의 주요 특징

1. 주요 연도별 농업정책

□ 2002년 농업정책

- 마케팅보조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
- 생산자유계약지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을 직접지불(direct payment)로 대체함
- 경기대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프로그램이 신설
- 환경보호를 위한 지불증가
- 땅콩의 보급통제를 없앴

□ 2008년 농업정책

- 직접지불(direct payment), 경기대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마케팅 보조융자 혜택유지
- 새로운 수익보조 프로그램인 수입보전 직접지불(Average Crop Revenue Election)을 도입

- 유제품 가격 지원 프로그램에 변화
- 곡물 및 설탕 프로그램 몇 가지에 대한 지원금(예. 대출금리 및 목표가격) 증가
- 설탕에서 에탄올로 우회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창출 ; 바이오연료 조사 설명을 위한 예산 증가
- 전에 있던 특별한 목적만을 위했던(ad hoc) 방식을 공식화하기 위한 새로운 재해지원프로그램 도입
- 미국 내의 식품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의 상당한 증가
- 수출진흥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의 종료
 - * 직접지불, 경기대응지불제, 유통보조 용자 프로그램, 수입보전 직접지불을 통한 밀, 사료용 곡물, 면(cotton), 쌀, 지방 종자, 두류의 수익지원제공. 설탕 용자율 재정비 및 잉여 설탕의 생물에너지 활용 프로그램 추가. 우유제품 보다 제조제품의 관리가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유제품 가격지원 변경

□ 기타 농업관련 정책

- 몇 년간의 지속된 농업정책 개정으로 인해 정책의 가이드라인은 잡혔지만 농산물정책의 수립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1991년~2001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ad hoc) 비상지원 같은 분리된 제정법의 비상사태 및 그 외 지원, 그리고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 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있음
- 미국 회복 및 재투자 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2009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임
 - 전체 7,890억불 중 약 3.5%는 영양보조, 농촌개발, 환경보호 및 산림, 그리고 농촌보조 및 교역을 위해 USDA가 관리함.
 - 이 법률에서 농업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양 프로그램 보조 증가
 -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broadband) 대출 및 보조금 수령기회 확대, 지방의 수도 및 폐기 시설 건설과 개선

- 농업 1세대 가정을 위한 직접차관(direct loan) 및 보증대출(guaranteed loan)
- 지방의 지역기관들에 대한 지원
- 새로 시작하는 농민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직접차관을 포함한 보조 프로그램 자금
-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t Program)의 재허가
- 국가의 산림과 농촌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
- 실행 후 첫 일 년 동안의 주요 결과들
 - 사업체들과 가정을 위한 1,000억불 이상 감세 실시
 -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3,800만명 이상에게 4인기준 가정 당 매월 \$80로 수당증가
 - 지방에 사는 85,420명의 주민들에게 주택구매 및 개보수를 위한 대출 제공
 - 산불위험 감소를 위한 134,000acre의 산림 방제활동을 위한 5억불 제공
 - 장기간 농장 경영 대출 프로그램(Farm Operating Loan Program)을 통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대출제공
 -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5천만불 제공
 - 5,000개 이상의 학교의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비구입 지원
- 2010년 잔여자금 할당내역
 - 지방의 가정, 사업체, 학교나 병원 같은 시설 등에 광대역 인터넷 설치를 위한 투자
 - 9억불을 사업체 성장, 혁신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자
 - 지방주민들을 위한 건강관리 및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 상, 하수도 시스템을 위한 투자

2. 최근 농업정책(2008년 농업정책) 주요내용

□ Commodity Program

- 밀, 사료용 곡물, 면(cotton), 쌀, 지방 종자, 두류의 수익지원제공. 설탕 용자율 재정비 및 잉여 설탕의 생물에너지 활용 프로그램 추가. 우유제품

보다 제조제품의 관리가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유제품 가격 지원 변경.

* 주요 지원책 : 직접지불 및 경기대응지불, ACRE(수입보전 직접지불), 유통보조용자 및 용자 부족불제도, 땅콩, 설탕, 유제품

○ 직접지불

- 직접지불제에 포함된 쌀이 장립종과 중립종(단립종 포함)으로 나뉘어졌고 두류는 물류지원에는 포함되나 직접지불제에는 해당되지 않음.
- 땅콩은 계속 직접지불제에 포함이 되나 다른 작물들과는 별도 취급
- 지불액은 똑같은 법이 적용되나 에이커(acres)지불은 83.3%로 감소함
- 지불율(payment rate)은 쌀이 장립종과 중립종으로 나뉘고 지방종자가 파운드당(per lb)에서 100웨이트당(per cwt)으로 변경
- 선지급은 2012년도부터 종료됨

○ 경기대응 지불

- 2002년 법을 유지하되 장립종과 중립종의 실효물가(effective price)는 똑같은 계산을 하되 쌀의 종류에 따라 함. 2009년에는 두류종류 포함
- CCP 목표가격은 '10~12년까지 밀, 보리, 대두, 다른 지방 종자는 증가
- 부분지불의 경우, 첫 번째 지불은 40%를 넘기지 말며 10월까지 지불하면 되었던 것이 마케팅 년도의 첫 180일후에 내야하고 마지막 지불은 마케팅 년도가 끝난 직후 지불해야 함. '11년부터는 부분지불이 없어짐

○ 수입보전 직접지불 프로그램(Average Crop Revenue Election(ACRE) Program)

- 수입보전 직접지불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수익에 의거한 선택적 경기대응 지불제 프로그램임
- 기존의 경기대응지불제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ACRE의 참가자로 뽑히면 재배농가는 2008년 동안 프로그램에 속해 있게 됨
- ACRE참가자들의 직접지불은 20%로 감소, 유통보조 용자율은 30% 감소
- * ACRE 보장한도 : 참가자들은 5년 ACRE 주정부 수확량 기준과 2년 ACRE 프로그램 보장 가격의 90%에 한하는 주정부 수익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 ACRE 지불면적 : ACRE 수익지불은 2009~11년은 재배면적 혹은 재배할 면적의 83.3%로 작물이나 땅콩을 위함이며 2012년은 85%임. 농가가

받을 수 있는 ACRE 지불인 전체 재배면적의 수는 적용되는 농가의 작물이나 땅콩의 전체 기본면적을 넘으면 안 됨

○ 마케팅보조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s) 및 융자 부족불제도(Loan Deficiency Payments-LDPs)

- 2009년부터는 큰 사이즈의 병아리콩(chickpea)도 포함되며 쌀은 장립종과 중립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융자율을 가짐

- 2008~12년의 ELS(Extra Long Staple) 면화의 비상환청구융자(non-recourse loan)가 허용됨

* 작물 융자율(Commodity Loan Rate) : 작물 안전 융자를 통한 농가에 주어지는 단위 가치(per-unit value). 밀과 기타 지방종자 및 끝은 융자율이 지속되다 2010~12년에는 증가하고 렌즈콩 및 건조콩은 2009년부터 감소함. ACRE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농가는 생산을 위해 융자율을 30% 낮춤

* 융자 상환 : 융자율과 이자를 합한 것 혹은 시장가가 작물 융자율보다 낮을 때에 더 낮은 유통보조 융자율이 발생할 수 있음. 마케팅, 운송, 혹은 연관된 기반시설의 심각한 문제발생시 장관은 상환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음. 또한, 면화의 시장가치에 따라 유통보조 융자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수 있음. 장립종 쌀과 중립종 쌀의 융자율은 고정되나 품질과 등급은 고칠 수 있음.

* 융자부족불제도(Loan Deficiency Payments) : 재배자들이 유통보조 융자 받는 것의 대안.

* 작물증서(Commodity Certificate): CCC에서 발행하는 현금지급 대체 지불방법

○ 땅콩

- 보관 및 취급비용

• 2008년부터는 작물안전융자관련 땅콩은 장관이 CCC자금을 사용하여 취급 및 관련 비용(보관은 제외)을 지불하여야 함. CCC에 몰수당한 땅콩은 보관을 포함한 취급 및 관련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설탕

- 가격 지원

• 가공되지 않은 설탕은 2013 회계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융자율 감소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

- 몰수 방지 : 장관은 설탕의 비상환청구용자(non-recourse loa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설탕 용자 몰수를 방지함
- 정보 리포트 : 2002년에서 더 나아가 멕시코 설탕의 생산, 소비 및 거래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야 함.
- Flexible Marketing Allotments : 장관이 몰수를 방지하기 위한 마케팅 할당 (marketing allotments)도입이 허가됨
- 관세율할당(Tariff-Rate Quotas(TRQs)) : 가공되지 않은 설탕 및 가공된 설탕의 관세율할당은 반드시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량은 갖추어야 함.
- 설탕 보관시설 용자 프로그램 : 국내생산 사탕수수과 사탕무의 생산자에게 자금혜택을 주어 보관 및 취급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함.

○ 유제품

- 세 가지의 주요 연방정부 프로그램
 - 연방우유마케팅결정(Federal milk marketing orders) : 우유가 사용되는 제품들에 따라 분류하고 최소가격을 매김. 마케팅결정을 개정할 기준과 스케줄을 재정비함. 14명으로 구성된 연방우유마케팅결정 검토위원회 (Federal Milk Marketing Order Review Commission)는 현재 연방정부의 우유마케팅 결정 시스템과 연방정부가 아닌 곳의 우유 마케팅 결정 시스템을 평가함.
 - 가격지원(Price support) : 정부가 버터, 무지방 분유 및 치즈를 구매함으로써 제공됨. 각 품목이 개별 가격으로 구입되며 이 가격은 전 미주지역이 동일해야 함. 장관은 CCC에 있는 물품관리를 위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CCC에서 구입한 물품들은 시장가격에 다시 팔릴 수 있음.
 - 우유소득손실 계약지불(Milk Income Loss Contract(MILC) Payments) : 지급률이 2008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증가하고 2012년 9월부터는 이전과 같은 지급률을 가짐
- 낙농업 수출 인센티브 프로그램(DEIP) : 수출하는 미국 유제품을 보조함.
- 전국 낙농업 홍보 및 조사 프로그램(NDPRP) 및 전국 우유제조자 홍보 프로그램(NFMPPP) : 미국50개주 및 푸에르토리코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하며 수입산 유제품의 평가와 지불금 징세를 함

□ 무역 (Trade)

- 중간수출보증프로그램 (Intermediate Export Guarantee Program), 공급자신용보증프로그램 (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 및 수출증대프로그램 (Export Enhancement Program)의 폐지
 - 비상시를 제외한 식품 보조에 대한 지출 증가 및 지방을 위한 식품보장 위기시 식품보조의 구입 및 유통에 대한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더해짐. McGovern-Dole International Food for Education과 어린이영양프로그램 (Child Nutrition Program)에 반드시 자금을 제공함.
-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
 - 개발도상국에 미국 농식품에 대한 정부에서 정부로의 무료판매를 용자나 보조의 개념으로 제공.
 - 외국에 비상시나 비상시가 아닐 때 필요한 식품을 위한 미국 농식품 기부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농식품의 기부
 - 시장발전목표(Market Development Objective)삭제
 - * 상업발전가능성으로 지원받을 나라를 정하거나 시장발전계획을 제출해야 함을 없앴. 시장발전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내세우는 것을 삭제.
 - 농식품의 공급, 지원수준 및 책정의 허가
 - * 행정적 지원, 내부 운송, 유통비용은 최소 7.5%로 증가했고 최고치도 13%로 증가했음. 지원액 중 일정부분은 식량원조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임.
 - * 기존의 법에서 비상시가 아닐 때의 식량지원을 증가시키고 이는 특별한 식품지원이 필요할 때에 바뀔 수 있음.
- 1978년 농식품 무역협정관련법 및 관련 규정
 -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 : 미국 농식품의 상업판매를 가능케 함
 - * 중간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GSM-103)과 공급자신용보증프로그램(SCGP) 규정을 폐지하고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GSM-102)은 가공 및 고급 농식품을 홍보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함
 - 시장접근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MAP) : 미국산 농식품의 해외 시장을 넓히기 위해 기술적 지원, 시장조사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 분담금 제공. 2002년 내용과 같음

- 수출증대프로그램(Export Enhancement Program-EEP) : 미국 수출자들이 특정한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금 제공. 2002년 내용과 같음
- 해외시장개발프로그램(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FMD) : 미국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발 및 확대를 위한 비용분담금 제공. 2002년 내용과 같음.
- 발전을 위한 식품(Food for Progress-FFP) : 개발도상국으로 미국 작물을 지원하거나 신용판매 하여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기업기반 확대를 지원.
 - * 2002년 법을 그대로 행하되 Malawi에서의 프로젝트가 2009 회계연도부터 실행됨
- McGovern-Dole 국제식품교육(International Food for Education) 및 어린이 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 :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어린이를 위한 개발 및 식품안전을 돕기 위함. 2008년에는 2002년보다 비용이 증가함.

○ 기타 무역원조 제공

- 빌 에머슨 인도적 신탁기금(Bill Emerson Humanitarian Trust) :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인도적 식품 문제가 긴급 발생할 경우 식품원조를 하게 됨.
- 글로벌다양성신탁기금(Global Diversity Trust) : USAID의 관리자가 세계 작물다양성재단(Global Crop Diversity Trust)에 기부하여 작물 다양성을 지원함.
- 특용작물대상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 program-TASC) : 미국 공기업과 사기업에 특용작물 수출을 위협하는 기술적 장벽 및 위생 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
 - * 2008 회계 연도부터 2011-12 회계 연도까지 매년 지원 자금 증가
- 신흥시장 및 시설 보증융자프로그램 : 해외특정시장에 미국수출을 홍보하기 위한 기술지원활동을 하는 미국 공기업 및 사기업에 자금지원.
 - * 신흥시장프로그램은 2002년과 같지만 시설보증융자프로그램은 그 기간을 더 늘림.
- 수입 농식품의 미성년노동 및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한 협의체 : 협의체를 만들어 강제노동이나 미성년노동으로 제배되는 수입 농식품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세움.

- 지역 식량지원조달프로젝트 : 비상시 지역에서 자격이 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금.
- 연목 목재 수입자 신고 프로그램(Softwood Lumber Importer Declaration Program) : USDA가 수립. 수입자들은 반드시 목재수입을 보고하여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캐나다 연목목재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을 시행하게 함.

□ 무역 및 세금관련 내용(Trade and Tax Provisions)

- 영구적 재난보조
 - 농업 재난구제 신탁기금(Agricultural Disaster Relief Trust Fund) : 추가 농업재난지원(Supplemental Agricultural Disaster Assistance - SADA)를 보조하기 위한 기금
- 농업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제공
 - 세관이용자요금 : 승객 및 운송 과정비용과 제품과정비용을 2017년까지 늘림.
 - 기업세금전적의 지급기간 : 기업자산 최소 10억불 이상인 업체에 대한 세금지급 포인트를 증가.
- 세금제공
 - 특정인들을 위한 SECA(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에서 관리보류 프로그램지불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Payments)를 제외함
 - 관리를 위한 자본재산 기부를 격려하는 특별법을 2년 연장함
 - 멸종위기종 복원 자금 축소
 - 자격이 되는 목재제품에 관한 세율의 임시적 축소
 - 목재 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REIT)근대화 : 목재 REIT의 정의를 목재 생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부동산이 자본의 50%이상이 되는 REIT로 정함.
 - * 자격이 되는 산림보호채권 : 세금공제 목재보호채권을 발행하여 보호 제한구역을 위한 산림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수립함.

- 셀룰로오스바이오연료(Cellulosic Biofuel) 생산용자: 2012년까지 임시적 세금공제를 제공함
 - * 바이오연료의 포괄적 학습 : 미래의 바이오연료개발과 개발증가로 인한 국내영향에 대한 조사를 함.
- 농업의 제공 : 농업채권 용자제한의 증가
 - * 농약증권금융(Agricultural Chemicals Security Credit): 농업 및 농약관계자들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함.
- 특정세금납부자들의 농장상실제한 : 이 제한은 직접용자, 경기대응 지불제 및 상품신용공사(CCC)용자를 받는 농민들에 한해서 제공됨.
-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보호: 이 법률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신탁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익에서 자금을 이체함.

II 미국 경제정책 동향

1. 미국 일반경제 동향

1. 미국 경제전망

-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2년에 GDP 3.5%에서 4.0% 증가, 연말에 실업률은 8% 미만예상
- 2012년 실제 GDP는 전망치였던 1.5% ~ 2%보다 많이 개선전망이나 2013~2014년에는 국가 재정과 통화정책의 위험요소로 경제 성장률은 다시 평균 수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2012년 실제 GDP 수치는 유럽의 경제공황과 중국의 성장감속을 모두 감안한 수치임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2012년 12월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3.5%가 될 것으로 보임

년도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 (식품에너지 제외)	실제 GDP 성장 (연평균 대 연평균)	연방 자금 금리
'06.12월	2.52%	2.61%	2.66%	5.24%
'07.12월	4.09%	2.42%	1.91%	4.24%
'08.12월	-0.04%	1.75%	-0.34%	0.16%
'09.12월	2.76%	1.80%	-3.49%	0.12%
'10.12월	1.39%	0.65%	3.03%	0.18%
'11.12월	3.85%	2.34%	1.73%	0.20%
'12.12월	3.43%	3.61%	3.54%	0.20%
'13.12월	4.06%	3.48%	2.36%	1.50%
'14.12월	4.58%	4.06%	1.54%	4.00%

* 자료: Bloomberg Professional for Historical Data, CME Research의 전망

- 겉으로 보기엔 이러한 경제적 성장 전망은 미국의 자본시장에 좋은 뉴스로 보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S&P 500 회사들은 운용자금의 절반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것임
- 중국과 다른 신흥 시장들의 성장이 느려지고 유럽의 실제 GDP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강한 성장은 세계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

2. 경제동향 특이사항

1. 국가재정정책

- 2010년과 2011년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치열했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기관을 올바로 잡았다는 것은 좋은 상황임.
- 연방정부는 2012년 11월 선거 이후인 2013년까지 주요 지출과 세금 건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결정했음.
 - 현재로선, 합동 “최고” 위원회(Joint "Super" Committee)의 예산개혁이 실패함에 따라 더 심각한 지출 삭감이 2013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부시대통령 시절의 세금삭감정책도 2012년 말에는 없어질 것이므로 2013년 초에 새로 당선된 의회와 대통령이 재정정책을 제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엄청난 지출삭감과 세금 증가로 인해 또 다시 경제 불황 상태를 맞게 될 것임

- 2013년에 들어가면서 매우 높은 재정정책 위험요소를 안고 시작할 것이고, 경기가 나아질 2012년 이후에는 다시 부진한 성장이 전망됨.

2. 금융 및 부동산 정책

□ Zero-Rate의 영향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0”에 가까운 연방자금금리는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2008년 금융공황이후 자신들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신경을 쓰면서 경제에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는 의견임
- 부채감소절차(deleveraging)가 완료된 이후 남은 의문점은 재정정책이 지속적으로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2012년에 소비자들의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것임

□ 주택시장 동향

- 2012년에 주택 시장도 조금 나아질 조짐을 보임
 -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업률이 감소되어 20대(또는 30대)가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실업률이 감소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임
 - 2012년에는 실업률이 8%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

3. 2012년 미국 상황

□ 2012년도 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 변동성

- 중국이나 다른 신흥 시장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유럽의 불황요인도 있지만, 2012년에는 실제 GDP 성장이 3.5% ~4%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만한 긍정적인 면이 많음
 - 이러한 긍정적 성장 전망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유럽재정불안 (채무 위기로 인한 붕괴), 러시아 (정치적 문제), 그리고 중국 (성장세가 생각보다 더 느려짐)에 있음

- 전체 및 주요(식품과 에너지를 제외)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012년 12월까지 전년 대비 3.5% 예상되며 2012년 상반기에는 시장성장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실제 인플레이션은 좀 느릴 것으로 예상됨
- 시장가격상승의 이유가 연방자금금리가 2013년 상반기에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는 미묘한 견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2013년 6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0.2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언제 금리를 다시 인상하고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로 인한 증가한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로부터 벗어나는가에 대한 논의는 2012년 여름 즈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임.
- 2013년에 인플레이션이 3.5% 또는 그 이상이 될 경우, 연방 준비제도는 연속적인 증분비율(incremental rate) 증가를 2013년 중반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는 2014년 혹은 그 이후까지 지속될 것임
-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와 각 지역 연방 준비 은행 대표들 간의 이러한 논쟁은 재무성발행 장기채권(Treasury bond)에 많은 변동을 가져올 것이며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연방 준비제도가 금리정책을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맞추기 시작하면, 10년 재무성발행 장기채권 수익률이 과거에 명목GDP 성장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변동(equity market volatility)에 적용되는 3%이상의 실제 GDP 성장은 흥미롭게도 채권시장변동(bond market volatility)에는 반대로 작용됨.
- 자본시장은 미국 내의 경제활동증가, 유럽의 경제 불황, 중국 및 신흥 시장의 성장둔화에 대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주가지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 2012년 이후에는 국가 재정 절감이 또다시 미국 경제를 뒤흔드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며 그때에는 연방 준비제도가 차츰 금리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함에 의한 단기 이자율 상승도 나타날 것임.
- 2013년에 나타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제 GDP 성장은 다시 2%대로 내려갈 것이라 전망함. 미국 정치권과 미래 국가 재정 및 자금정책이 2012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가 관건임.

홍콩 / 대만

국 가

홍 콩 / 대 만

작성자
홍콩 aT센터

I 주재국 농업정책 동향

1. 농업정책

< 홍콩 >

1. 농업현황

- 홍콩 농가수는 '10년 기준 2,600개이며, 농업종사자는 약 4,700명임
- 주 생산 작물은 관상용 화훼류(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이며, 식용작물로는 엽채류, 국화과 작물, 수상작물이 있으나 소규모임
- 경지이용은 '10년 기준 채소류 297ha, 화훼류 153ha, 논작물 20ha, 과수류 276ha로 경지면적이 매우 협소함
- 총 농산물생산은 US 615백만불로 이중 작물생산 US 232백만불, 축산물 US 176백만불, 가금육 US 207백만불을 생산하였음
- 전체 농산물 소비에서 자국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선농산물 2.5%, 가금육 56.2%, 돈육 6.4% 등임

2. 농업정책

- 홍콩의 농업정책은 정부 참여 최소화로 자유시장을 겨냥한 완전 개방 정책을 펴고 있음
-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95% 이상임
 - * 담배, 주류(30도 이상), 메틸알코올, 카본오일 4가지 품목 외 모두 무관세임

< 대만 >

1. 대만 농업 이슈

□ WTO 가입, 중국과 ECFA 체결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 WTO가입 후 농업 생산량 20% 증가, 수출은 31% 증가

- 대만은 2002년에 WTO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농업 생산량은 NT\$4,263 억원(약 16조 2천억원)으로 WTO 가입 전 대비 20% 증가. 2010년 농식품 수출은 US 40.2억달러로 2002년(30.3억) 대비 31% 증가

○ 중국과 2010년 6월 ECFA 서명, 대만 농식품 중국본토 수출 확대

- 2010년 대만 농식품 중국 수출액은 US 3억달러로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 전인 2007년에 비해 23% 증가 하였으며, 2011년 1월~11월까지 US 5.9억달러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 대만은 2010. 6월 중국과 ECFA 양안 정책에 서명하였으나 중국 농산품 830여품목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미 개방된 1,415항 농산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리지 않고 있음. 특히 농민보호를 위해 이미 특혜를 받은 대만 농산품 18개항에 대해 중국이 추가조건을 달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중국 직항로 개설, 검역 협정 등 대만 농식품 수출애로 해소

- 대만은 2008년 농식품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운송시간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직항로를 개방하였으며, 2009년 신선 냉장 과일들의 수출 검역 검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양안 농산품 검역 검사협력”을 협정하였음. 2010년에는 중국으로 US 10.2백만달러를 수출하여 2007년 대비 420% 성장하였음. 그 중 파인애플, 유자, 반려지 등의 과일이 대륙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는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대만 정부 한국산 수입사과 농약 전수검사로 사과수출 애로

- ‘11. 2. 1일부터 한국산 사과 전수검사 및 지속적인 농약 검출로 당분간 전수검사 해제 지난

2. 대만 고품질 농업 프로젝트

□ 사업개요

- 대만은 고품질 농업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Healthful Agriculture, Excellent Agriculture, Lohas Agriculture 등 3가지 프로그램 운영

〈 프로젝트 개요 〉

(단위 : NT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계
Healthful Agriculture	647	833	976	986	3,442
Excellent Agriculture	716	1,447	2,367	1,711	6,241
Lohas Agriculture	2,020	3,351	4,853	4,326	14,550
계	3,383	5,631	8,196	7,023	24,233

* 환율 : 38원 / NT\$

- 고품질 농업 프로젝트는 안전한 식품, 녹색 환경, 지방문화 활성화, 창의적인 기술개발, 오염방지 등 경제적인 면 뿐 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공헌도가 높으며,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 프로젝트 세부내용

① Healthful Agriculture

- '08년 대만 농경지는 약 820천ha로 이 중 25천ha(3%)는 GAP, 유기농, 이력추적가능(traceable) 제품을 재배하는데 이용. '12년까지 50천ha로 늘려 전체의 6% 수준으로 확대

* ('08) 25천ha(전체 면적의 3%) → ('12) 50천ha(6%)

○ Organic 농업

- 2012년까지 유기농 식품을 재배하는 땅의 면적을 2배로 증가시킬 예정이며, 총 면적은 5천ha로 확대, 생산액은 NT\$ 30억 예상

○ GAP

- GAP(Good Agriculture Practice)는 '12년까지 GAP 재배면적은 30천ha 수준으로 생산액은 NT\$126억 예상

○ Good products with CAS label

- '12년까지 CAS(유기농마크)를 받은 식품 생산액은 NT\$ 530억으로 예상

○ TAP traceability system

- 국제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하는 기준을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12년까지 생산액은 NT\$ 54억 수준으로 전망

② **Excellent Agriculture**

○ 대만의 농업기술은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였음. 생명공학, 난초 재배, 식용 및 관상용 어류, 종자, 묘목, 동물사육 등 '08년 농업기술 관련 생산액은 NT 210억이었음.'12년까지 NT\$ 34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생명공학, 난초 재배, 식용 및 관상용 어류사업은 '12년 까지 2배로 증가시킬 계획임

③ **Lohas Agriculture**

< Agro-Tourism 현황 >

○ '08년 현재 63개의 농업관광 지역과 177개의 농장이 있음. '08년 농업관광 시장가치는 NT\$ 74억이었음. 총 관광객 수는 959만명이었으며, 이중 64천명은 해외 관광객이었음

○ 18개의 산림휴양지와 8개의 자연 교육센터 및 등산 코스가 있음. '08년 시장가치는 NT\$ 33억이었으며, 총 방문객은 480만명이었음

○ 266개의 레크리에이션, 77개의 낚시 스포츠용 보트를 정착할 수 있는 어항이 있으며, 연간 120만명의 방문객이 고래 관람과 스포츠 낚시를 하였음. 담수에는 매년 1백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음

< LOHAS Agriculture >

○ 신기술 개발

-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실온 보존기술과 냉동기술을 개발
- 전통주 제작기법과 생명공학을 연계하여 대중적인 고가 와인 개발
- 반도체, 의학, 에너지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대나무 제작 핵심 기술 개발

- 새로운 경영 모델
 - 판매경로의 다양화를 위하여 원산지과 추적 증명서 등 보완
 - 생산업체와 제조사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게 도우며, 농업 협의회, 식품업체 및 유통업체 연합 강화
 - ISO와 연결할 수 있도록 식품 품질인가 홍보활동
 -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만에서 주문, 중국에서 배달받는 시스템” 개발

2. 한국 농식품 현지 여건 및 수출전망

< 홍콩 >

- 한국산 농식품은 안전성 확보, 한류 등으로 인지도 상승
 - 일본 쓰나미, 대만 가소제 사건 등으로 홍콩에서는 인삼, 김치, 과실류 등 한국산 주력 품목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한국산 먹거리 대호황으로 한국산 농식품 취급 확대 지속
 - 한식당 호황, 한국 농식품 위상 강화 등으로 바이어 및 유통업체 모두 한국산 취급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30% 수준 증가 예상

< 대만 >

- 한국산 농식품 수출 고성장세 주춤
 - 세계 경제위축, 대만 내 반 한류 상존, 과실류 검역강화 등으로 한국산 농식품 취급 감소 및 소비 위축
- 한국산 품질 우위, 안전성 확보 등으로 기본적인 수요는 확보
 - 일본 쓰나미, 중국 식품 안전사고, 대만산 가소제 사건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내외 성장세가 전망됨

II

주재국 경제정책 동향

< 홍콩 >

1. 경제여건

1. 2011년 성장률 5%내외로 '10년 6.8% 대비 감소

□ 원만한 성장세를 구가한 2011년 상반기

- 홍콩의 경제는 2010년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1년 상반기에도 6.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소비자물가는 2010년(2.4%)보다 높아져 2011년 1~9월 기간 중 5.1%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은 심화되었으나 실업률은 2011년 7~9월 중 3.2%를 기록해 전년 4.4%보다 낮아졌음
- 소비시장은 2010년 18.3%에 이어 2011년 1~8월 기간 중 2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이는 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에 기인함. 2010년 관광객은 3,600만명, 2011년 관광객은 4100만명 상회

□ 세계경기 불안으로 '11년 3분기부터 침체 시작

- 도널드 쟁 행정장관(국가수반) 및 경제전문가들은 홍콩 경기가 3분기에 이미 침체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음.
- 홍콩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으며 올해 전체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5~6%)보다 낮은 5% 내외에 머물 전망임
- 또한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유럽과 미국의 경기 둔화로 홍콩의 수출 둔화가 두드러짐. 2010년 22.8% 증가세를 기록한 홍콩의 총수출 증가율은 2011년 1~9월 기간 중 11.2%로 감소하였음

2. 2012년 경기 침체론 우세

□ 2012년 경제성장률은 3~4%대로 예상, 둔화 전망

- 홍콩무역발전국은 3%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등) 내년도 홍콩 경제성장 전망을 3~4%대로 예상
- 중국의 견조세와 홍콩정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침체에 대응
 - 홍콩정부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 회복 조짐이 없어 유럽 경제위기가 홍콩을 포함한 전 세계에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 다만, 중국의 내수시장 견조세와 홍콩정부의 양호한 재정상태가 경기 침체기를 버텨내는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은 다소 진정될 전망

- 홍콩의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 중소폭의 시장 하향세를 점치고 있음
- 물가도 미 달러 및 홍콩 달러 안정세, 일본 방사능 사태 후 다변화된 농수산물 수입경로 확보 등의 호재로 상당부분 안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플레이션은 2011년 2분기 5%, 3분기 6.1%에서 2012년 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2. 시장여건

1. 소비시장 활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인 소비가 내수시장 동력으로 작용

- 2010년의 경우 홍콩 총 소비시장 중 35%가 중국인이 차지하였으며 중국인 관광객은 2011년 28% 증가하였으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전체 관광객 수는 41백만명 수준이며 그 중 중국인 관광객 수는 2,800만명으로 중국인 소비액은 1500억 홍콩달러(약 22조 5천억원 / 전년 대비 10% 증가)로 2011년 홍콩소비시장의 39%를 차지, 홍콩 경제성장률에 0.5~1%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홍콩 서민층 소비도 소폭 회복 될 전망

- 홍콩 시민의 종합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31.66%), 외식비(17.07%), 식료품구입비(10.88%) 등임. 따라서 2012년 주택 및 식료품 가격 하락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층 소비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에 따른 소비 증가 예상

□ 중국의 내수시장 활황여부가 큰 변수

- 2012년도에 중국정부는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을 상당부분 늘릴 것으로 예상 됨
-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 노력은 소비 증가에 따른 중국의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위안화의 상대적인 강세 기조 유지 예상에 따라 대 중국, 홍콩 수출도 호의적인 상황임

< 대만 >

1. 경제여건

1. 2011년 경제성장률은 4.6%로 '10년 10.9% 대비 대폭 감소

□ '11년 경제성장률 4.6%로 당초보다 하향 조정

- 2010년 대만의 수출입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민간소비 성장률도 최근 6년 간 최고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0.9%에 달하여 1987년 이후 최고치 기록

- 2011년에는 일인당 GDP가 사상 최초로 2만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 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정부는 수출과 민간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금년도 4.9%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으나, 하반기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을 4.6%로 하향 조정

2. 2012년 경제성장률은 4.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대만 중화경제연구소의 2012년 경제예측에 따르면 성장률은 4.1%로 전망
-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은 각각 4.6%와 1.0%로 수출이 수입보다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지탱할 것으로 보임

2. 시장여건

1. '11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4.0%로 전년 3.7% 대비 소폭 증가

-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급증과 기업 이윤 확대로 노동 시장의 일자리 증가와 급여 상승으로 소비가 촉진되어 민간소비가 2010년 3.7%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4.0%로 증가할 전망
- 2009년에 6%에 육박했던 실업률이 2010년 12월에 4.7%로 감소되고, 평균 임금도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하여 소비 증가를 촉진
- 2010년에는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이 소비재 물가 상승을 동반하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1.8%P 상승, 실업률은 4.3% 수준
- 2011년 3분기까지 지속된 대만달러의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의 하락,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풍작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인하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5%로 예상

2. 2012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6%로 전년 4.0% 대비 감소

- 민간소비 성장률은 2.6%로 전망되며, 민간 투자 성장률은 전년도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여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약 1.5%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겠으나, 평균 실업률은 소폭 상승한 약 4.5%로 전망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국 가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작성자
싱가포르 aT센터

I

말레이시아 농업정책 동향

1. 농업개황

1. 주요 농업지표

□ 농업 부문 경제기여도

- 고무, 석유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관광 등 서비스업으로의 경제구조 다각화에 치중한 결과, 농업 부문 경제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부 문	기 여 율
서 비 스	48.2%
산 업	41.4%
농 업	10.5%

[자료원: CIA World Factbook]

□ 농경지 현황

전체 국토 면적	33백만 ha	-
농경지 면적	6.6백만 ha	국토의 20%
상품작물 재배면적	77%	팜유, 고무, 코코아, 담배, 후추
기타작물 재배면적	16%	쌀, 과일, 야채, 코코넛

[자료원 : 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 말레이시아는 전 국토의 70%가 열대우림 지역이며,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남한)의 약 3.3배이고 그 중 농경지는 약 6.6백만 ha로 국토 면적의 약 20%를 차지
- 총 농경지 면적 중 관개수리 면적의 비중이 낮아 강우량 등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업 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음

- 새로 개간 혹은 간척되는 국토의 일부로 농경지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곡물재배 면적 확대를 꾀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995년 이후 군사용, 공업용, 주택용 등 다른 분야의 토지 수요 증대로 인한 농지 전용 확대에 의해 최근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노동인구의 산업별 구성 비율

노동인구	단위	2008	2009	2010	2011
전체	천 명	11,577	11,632	11,937	12,227
농업	전체 인구 %	12.0	12.0	11.6	11.4
광업		0.4	0.4	0.4	0.4
제조업		28.8	27.6	28.3	28.9
건설업		6.6	6.6	6.5	6.3
서비스		52.2	53.5	53.3	53.1

[자료원: Economic Planning Unit, Ministry of Finance & Department of Statistics]

- 말레이시아의 농업인구는 2004년 전체인구의 35%가량을 차지하였으나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체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
- 농촌의 많은 남자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여성이 농촌 노동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사바(Sabah)지역의 경우 농업노동력의 75%가 여성

□ 주요 신선농산물 생산 동향

(단위 : 천톤)

품 목	2010	2011(추정치)
쌀	1,632	1,682
설탕	36	37
코코아	19	20
우유	50	52
가금류	1,222	1,227
돼지고기	214	218
소고기	40	42
팜오일	16,993	17,697

[자료원 : BMI]

- 임산물과 팜유, 고무가 말레이시아 전체 농업생산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이 농업생산의 4.5% 가량을 차지함. 그 밖에 카카오 씨, 채소, 과일 등도 말레이시아 농산물의 주력 제품임

- 야자유(Palm Oil)는 말레이시아 전체 신선 농식품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큰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음
- 또한, 쇠고기 및 낙농 산업은 규모가 매우 작는데 말레이시아 특유의 고온의 열대성 기후가 쇠고기 및 우유의 생산에 부적절하며 목초지의 면적 또한 좁기 때문임

□ 농산물 수급

- 말레이시아는 식물성유와 일부 축산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축산물에 대해 자급을 이루지 못함
- 곡물의 경우 소비량인 약 370만톤의 45%수준만 자급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특히 설탕 및 감미료의 말레이시아 국내 생산은 15만톤 수준으로 100만톤에 달하는 소비량의 15%만이 자급되고 있어 수입량의 140%에 달하는 140만톤 수준이다.

2. 주요 농업정책

1. 주요 3대 농업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4년부터 국가 농업정책(NAP, National Agricultural Policy)을 도입하여 시행
- 2011-2020년은 4차 NAP이며 2012년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농업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FSP, NAP, NKEA 3가지임
- 식량안보정책 (FSP, Food Security Policy)
 - 2008년 쌀 대란 당시 도입한 정책으로, 당시 2008-2011년의 기간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식량안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NAP와 연계시켜 존속시키기로 함

○ 주요 정책목표

- 쌀 자급률 : NAP3 종료시점 65% → NAP4 종료시점 86%
- 식량(쌀)의 안정적 자급화 (SSL, Self-Sufficiency Level)를 위한 2008-2011년 3년간 총액 MYR 5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FSP 연장 첫해인 2012년에는 총액 MYR 27.7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항 목	예 산 (MYR)
비료 보조금	409백만
산지 쌀 가격 보조금	480백만
쌀 종자 보조금	85백만
쌀 생산 장려금	150백만
쌀 수확 보조금	80백만
소비자 쌀 가격 보조금	167백만
기 타	169백만
행정 비용	1,230백만

[자료원 : 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 국가농업정책 (NAP, National Agricultural Policy)

-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말레이시아가 식량 수입국가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석유와 팜유 일변도의 수출,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해외기업들의 전자제품 생산기지 등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NAP를 시행함

○ 시기별 주요 정책목표

구 분	기 간	주요 목표
NAP 1	1984-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생산 증대 ○ 쌀 자급률 80-85%
NAP 2	1992-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획득 작물 생산증대(팜유, 코코아)
NAP 3	1998-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증대 ○ 쌀 영농에 민간자본 참여 ○ 상품화 가능한 작물 연구개발 ○ 쌀 자급률 65%
NAP 4	2011-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향상 ○ 농가, 어가 및 낙농 (SALT)현대화 ○ 유통 현대화 ○ 과일 수출상품 개발

[자료원 : Ministry of Agriculture]

○ 4차 국가농업정책 정책방향(NAP 4)

- 기술과 혁신의 사용

- * 현재 식품 제조분야 종사자의 50%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농업 기술의 향상 및 자동화 도입으로 인건비 절감, 외국인 노동자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 정책 목표임

- 정보 통신기술(ICT)의 응용

- * 집약 농업은 ICT의 적용으로 비료, 화학물질 및 농업용수의 사용을 줄임
- * 식품 안전의 측면에서의 ICT는 식품 추적 시스템을 적용, 식품 생명공학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식량 공급 보장이 가능

- 농어민 교육 강화

- * 농어민협회 등의 관련 기관을 통한 농업 종사자 교육, 기술 습득을 강화

- 유통망 혁신 및 안정성 확보

- * 현재는 재래시장이 우세하나, 향후 말레이시아 마케팅 채널의 60%는 다른 선진국처럼 대형 슈퍼마켓을 통할 것으로 예측
-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한 신선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 * 식품의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국제 식품 규격(Codex Alimentarius), Global-Gap, ISO 및 HACCP과 같은 국제 표준 도입 및 추진 예정

□ 국가 주요 경제분야 (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10차 NDP (2011-2015년) 의 실무계획인 경제변혁 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중점 분야로 11개의 산업부문과 1개의 지역 등 총 12개의 중점 분야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농산물 관련 분야로는 농업, 팜유, 유통 등 3개의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음

- 농산물 관련 NKEA는 16개의 진입 프로젝트(EPP, Entry Point Project) 및 11개의 사업기회(Business Opportunities)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 MYR21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16개 EPP의 주요 내용

테 마	EPP		목 표
경쟁적 우위 확대	1	고부가가치 허브제품 개발	GNI : MYR 22억
	2	swiflet (금사연) 새집의 생산 확대	GNI : MYR 45억
	3	Sabah주 해초류 상업화	GNI : MYR 14억
	4	수산양식업 수직통합화	GNI : MYR 14억
	5	팜유농장내 가축 사육	GNI : MYR 1.5억
고급시장 진입	6	고급 새우 양식 활성화	GNI : MYR 13억
	7	과일 및 야채 생산능력 향상	GNI : MYR 16억
	8	식품 가공산업 통합단지 조성	GNI : MYR 8.8억
	9	쌀 신제품 MRQ76 보급	GNI : MYR 1억
식량안보 확보	10	Muda지역 쌀 생산량 확대	GNI : MYR 10억
	11	기타 지역 쌀 생산량 확대	GNI : MYR 14억
	12	축산농가 생산량 확대	GNI : MYR 1.8억
	13	낙농단지 설립 (해외기업 유치)	GNI : MYR 3.3억
지역 농업망 참여	14	사육사업 진입	GNI : MYR 4.7억
	15	바이오기술 FDI 유치	GNI : MYR 8.2억
	16	해외 축산업 투자	GNI : MYR 1.2억

[자료원 : PEMANDU]

- 농산물 관련 NKEA 중, 식량안보 확보는 2020년까지 쌀 자급률 85%, 소고기 자급률 40%, 유제품 자급률 5%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2012년 정부 예산안 중 주요 농업관련 정책

농촌 변혁 프로그램 (Rural Transformation Program)

- 농촌 지역을 매력적인 개인 투자처로 전환하여 귀농을 통한 젊은이들의 취업 및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며, '12년 예산안 발표 연설시 포함

□ 농촌 변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Rural Transformation Centre (RTCs) 설립
 - 농산물 취합, 가공, 배분 서비스 기능
 - 은행, 보험, 사업 컨설팅, 교육훈련시설, 의료서비스, 소매업 등 입주
 - Perak 등 4곳에서 파일럿 사업 추진 후 추후 Kedah, Johor 등 4개 도시에 추가 설치 운영
- 전문직 서비스 펀드 (Professional Service Fund) 조성
 - 변호사, 의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농촌지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4% 이자율, MYR 100백만)
- 고무나무 신규 식수를 위해 MYR140백만을 고무산업개발위원회 지원
- 농촌지역 도로건설(2,749Km)에 MYR18억 투자
- MYR 21억은 농촌지역 20만 가구 생활용수 공급, MYR 11억은 농촌지역 3만9천 가구 전기 공급을 위해 지원
- 20,000개의 물탱크 MYR 52백만 공급으로 사라왁 지역의 10만명에 혜택 제공
- 농촌지역 은행서비스 확대를 위해 5,000개의 지점 설치
- 농촌 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MYR 150백만 대중교통개발기금 마련
 - 각 주는 4%의 이자율로 미니, 스쿨버스를 운영 또는 신규버스 구입 및 운영
- 파항, 페락 지역에 거주하는 19만명의 원주민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
 - 소득 활동 지원 등 MYR 90백만, 신규 주거지 건설 MYR 20백만

3. 농식품 수출입 현황

1. 주요 수출품목

-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수출장려 정책으로 상품작물(cash crop)과 관련하여 이를 관장하는 별도의 정부부서(Ministry of Primary Industry & Commodities)를 두고 팜유, 고무, 코코아, 목재 등의 품목에서는 세계 상위를 기록하고 있음
- 팜유는 말레이시아 제1의 농산물로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팜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며 세계 팜유의 43%를 생산
- 팜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동시에 팜유를 이용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등 팜유 용도의 다양화를 위해 집중

품 목	현 황	주요 수출국	출 처
팜 유	생산 : 세계 2위 수출 : 세계 1위 2011년 수출 USD 123억	중국, 미국, EU, 인도	Malaysian Palm Oil Board
고 무	생산 : 세계 3위 수출 : 세계 8위 2011년 수출 USD 107억	중국, 미국, EU, 일본, 한국	Malaysian Rubber Board
코코아	가공 : 세계 5위 수출 : 세계 8위 2011년 수출 USD 15억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폴, 러시아	Malaysian Cocoa Board
목 재	수출 : 세계 8위 2011년 USD 65억	일본, 인도, 대만, 한국, 중국	Malaysian Timber Council

□ 말레이시아 식품수출입 통계

		2008	2009	2010
수 출	전 체	21,051	16,158	21,449
	팜유/코코아	17,602	12,905	17,314
	조정 소계	3,449	3,253	4,134
수 입		10,050	8,935	11,712
식 품 수 지		△ 6,601	△ 5,682	△ 7,578

[자료원 : GTIS]

2. 대 한국 관련 동향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에 수교를 하였으며, 2007년 서명한 한-ASEAN FTA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양국 간 FTA를 협의 중에 있음
 -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는 순식품수입국가로, 현재로서는 수입 및 검역 등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음
 - 농수산물의 무역수지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팜유 및 코코아로 인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 말레이시아 식품수출은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11년 한국농수산식품 수출액 : 95백만불(전년대비 46%성장)]

- 말레이시아의 수입식품시장은 연평균 15%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자 FTA가 체결되면 진출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기회요인
 - K-POP, 한국 드라마 등으로 인한 비즈니스 한류 영향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우호적임
 - 세계적인 웰빙의 추세에 힘입어,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육류가 첨가되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 음식은 친할랄 제품임
 - 위협요인
 - 3개 주요 농업 정책의 시행 및 정착에 따라, 2015년부터는 식품 수입 규모의 감소가 전망
 - Halal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지에 따라, 향후 수입 식품에도 Halal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
 - 200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중국식품의 분유 및 식품 오염문제, 작년의 대만식품 발암물질 오염사태 및 일본의 방사능오염 등으로 “식품오염”이 화두가 되고 있음. 현재는 검역과정에서의 검사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변수 : 말레이시아는 2개의 오래된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들 과제의 해결 시기는 미상임. 그에 따라 물가의 상승 및 소비심리의 위축 등이 예상됨.
 - 부가세 제도의 도입: 말레이시아는 산업화된 국가로서 유일하게 부가세 제도가 없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부가세 (GST)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2010년도에도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였음. 대부분의 상인 및 기업단체들은 부가세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 정부는 2012년 말-2013년 초로 예정된 다음 총선 이후에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임
 - 보조금 제도의 폐지: 말레이시아는 전임 마하티르 총리 시절에 집권당의 득표 전략으로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서민물가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가격통제 및 보조금 등을 통하여 가격을 유지함. 동 정책으로, 2009년 국고지출의 22%가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조금의 감소를 시도하고 있으나, 저렴한 가격에 익숙해진 서민 및 상인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음
- * 제품 : 휘발유, 디젤유, 식용유, 밀가루, 빵, 쌀 등 6개 품목

II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동향

1. 주요 경제동향

1. 경제 산업 구조

-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2차 산업의 기반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지향

2.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 최근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과 수출 및 투자 급감, 국내소비 위축 등의 악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에는 GDP 성장률 -1.7%의 성장 감퇴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중에는 7.2%에 달하는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고, 2011년에는 5~5.5%의 무난한 성장세를 나타냄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 유럽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크게 회복되는 한편 산업생산 증가로 경제 성장률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 수출 주도형 경제 (주요 수출품목 : 석유, 팜유)를 가진 말레이시아는 Eurozone의 공공부문 부채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약화로 인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2012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5.8%에서, 4.9%로 하향조정
- 최근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 구(백만)	27.5	27.9	28.3	28.6
노동인구(백만)	12.0	12.1	12.4	12.6
경제성장률(%)	4.6	-1.7	7.2	5.0~5.5
취업인구(백만)	11.6	11.6	11.9	12.2
실업률(%)	3.3	3.7	3.4	3.3
GDP(백만RM)	530.7	522	559.6	588.4
1인당 GDP(USD)	7,991	6,972	8,417	
물가상승률(%)	5.4	0.6	1.7	3.2
실업률(%)	3.3	3.5	3.4	3.3
외환보유액(억USD)	913	960	1,065	

* 11년 자료는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 전망치임

□ 소비자 물가

- 말레이시아의 소비자 물가는 2010년 중 1.7% 상승한 이후 2011년 들어서는 1/4분기 2.8%, 2/4분기 3.3%, 7월 3.4%, 8월 3.3%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보조금 규모 축소 정책에 따른 가솔린 및 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1년 연간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 관리 수준(2.5%~3.5%) 이내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 환 율

- 말레이시아 링깃화 환율의 경우 2011년 들어 8월말까지 1달러당 2.9링깃 수준까지 강세를 나타내었으나, 8월중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미 달러화) 선호 경향이 강화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있어, '11년 9월 이후 달러화가 강세(링깃화 약세)로 전환되었으며, 11년 달러 대 링깃 평균 환율은 3.137로 나타남
-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1달러당 링깃, 기간평균)

2010				2011			
3월	6월	9월	연간	3월	6월	9월	연간
3.3255	3.2645	3.1062	3.2211	3.0368	3.0298	2.9878	3.137

□ 금 리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5월 종전의 2.75%에서 0.25% 포인트 인상된 3.0% 수준을 계속 유지
-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2009		2010			2011
1월	2월	3월	5월	7월	5월
2.75	2.00	2.25	2.50	2.75	3.00

□ 외환보유액

- 경상수지 흑자 기초를 유지하고 2010년 중 말레이시아로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023달러를 기록

2. 경제구조 및 정책

1. 구조적 취약성

□ 지속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좁은 재정 운용폭

- 말레이시아는 고무, 석유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관광 등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 다각화에 성공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세수입은 여전히 석유 관련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임(2009년 기준 전체 세수의 약 37%규모)
- 반면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연료, 식료품 등에 대한 빈곤층 보조금 지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해 왔음
- 이로 인해 경제 위기 시 적극적인 정책운용에 큰 부담이 되는 등 정부의 운용폭이 좁아짐에 따라 조세 개편과 보조금 합리화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높은 무역의존도

- 말레이시아는 협소한 내수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2010년 기준 147%에 달하는 증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특히 전기, 전자제품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의 40%, 제조업 부문 수출의 60%에 달해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임
- 또한, 전기, 전자산업 등의 부문에서 재료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커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수입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성향을 보임

2. 성장잠재력 및 정책성과

□ 양호한 인프라 수준

- 말레이시아 정부의 일관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정책으로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에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환경이 양호함
 - World Economic Forum의 2010/11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인프라 부문에 있어 전체 139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였음

□ 풍부한 자원

-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 원유, 팜오일, 주석, 고무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팜오일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수출국(40%이상)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생산국으로, 팜오일이 최근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각광받으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음

□ 계획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

- 말레이시아는 1970~1990년 신경제정책(NEP), 1991~2000년 국가 개발정책(NDP), 2001~2010년 국가비전정책(NVP) 등 정부 주도의 장기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 고무, 주석 등 1차 자원수출과 농업생산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전기, 전자산업 외에도 라텍스, 타이어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련 제조업 산업을 발달시키는 산업 다각화에 성공,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음

□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

- 경기가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2010년 빠른 회복세로 전환되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아시아 국가 중 인도와 더불어 처음으로 2010년 3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2010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7%의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

3. 최근 경제정책 동향

1.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 2011-2015(10th Malaysian Plan)

-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며,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 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0년 6월 10일 Najib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2015)을 발표했는데, 동 계획의 목표, 10대 전략적 중점육성 분야 및 12대 국가 핵심경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제10차 계획의 목표
 - 경제 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 6.0%
 - 2015년 1인당 GDP : 38,850링깃(USD 12,140)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 5.3%(2010년)→3.0%(2015년)
 - 민간투자(계획기간 중 연평균) : 12.8% 성장
(연평균 1,150억링깃 신규투자)
 - 고용(계획기간 중 연평균) : 2.4% 증가, 140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 10대 전략적 중점 육성 분야
 - 내부 역량강화 및 외부 변화 활용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문화를 통한 고소득 사회로의 전환
 - 생산성에 기반을 둔 성장과 혁신 장려
 - 최고급 인력의 육성, 유지 및 강화
 - 균등기회 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른 성장 발전 추구
- 정부와 민간 기업 간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
- 천연 부존자원의 효용가치 극대화
- 정부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 12대 국가핵심 경제 분야

- 석유 및 가스, 팜오일 및 연관 상품, 금융 서비스, 도소매업, 관광산업, 전자 및 전기, 민간 의료산업, 교육,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농업 서비스, 광역 쿠알라룸푸르 구축

3. 새 경제모델 (NEM : New Economic Model)

-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을 발표·추진 중에 있음

〈 NEM 기본 원칙 〉

- High Income : 현재 1인당 GDP 7천불에서 10년 내에 1만5천불로 도약
- Sustainability :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삶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등을 목표

- NEM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발전, 지방자치에 따른 결정, 클러스터 및 경제구역 기반 경제 활동 강화, 기술 산업 및 기업 우대, 아시아 및 중동지역 중시, 고급 기술인력 유치 등과 같은 실천전략 마련하여 추진 중

4. 지역 발전전략

- 말레이시아는 상기 국가전체 차원의 발전전략과는 별도로,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도 동시 추구하고 있음

〈 지역별 발전전략 〉

- Johor주 등 남부지역 : Iskandar Development Corridor
- Kedah주 등 북부지역 : Northern Development Corridor
- Terengganu 등 동부지역 : Eastern Development Corridor
- Sabah주 지역 : Sabah Iskandar Development Corridor
- Sarawak주 지역 : Sarawak Iskandar Development Corridor

5. 2012년도 정부 예산안

□ 예산규모

- 말레이시아 정부의 2012년도 정부지출 예산 규모는 2,328억링깃(약 86조원)이며, 2012년도 정부수입은 1,869억링깃(약 69조원)으로 재정적자는 459억링깃(약 17조원)으로 GDP의 4.7%수준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신설, 교육시설 유지 보수 확대, 병원 신축 등을 포함하는 특별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할 예정

□ 2012년도 정부 예산안 중점 추진사항

○ 투자확대

- 지방도로, 철도 확충 및 공군기지 확충 추진
- 다국적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향후 5년간 70%의 소득세 감면
- 쿠알라룸푸르 국제 금융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관련 세금 100% 감면
- 이슬람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이슬람 채권 중 Wakalla에 대한 세금 감면 시행
- 녹색기술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전액면제 제도를 2013년 말까지 연장
- 관광업 촉진을 위해 랑카위섬 재개발 정책을 시행

-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 초등 및 중등학교 학비를 2012년부터 전액 면제
 - 국립학교 이외의 국립형 학교(중국어, 타밀어 및 영어 교육), 선교사 학교, 정부보조 종교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1억링깃 소요)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30만명에 대해 교재비 200링깃 지원(2.6억링깃)
- 지역개발 강화
 - 사바/사라왁주 등에 대한 깨끗한 물 공급 사업 추진 등 지역의 기본인프라 확충을 위해 50억링깃 투입
- 공무원 경쟁력 강화
 - 공무원의 근무성과에 연동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탄력적 보수제도 시행
-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 쌀, 육류, 과일 등 생필품에 대한 물가관리 강화
 - 가계소득이 월 3천링깃 미만인 저소득가정 350만 가구에 대해 연간 500링깃(약18만원)을 현금 지원(18억링깃 소요)

참고 싱가포르 경제정책 동향

1. 싱가포르 경제 개요

1. 싱가포르 시장특성

□ 동남아 최대의 교역 국가 및 쇼윈도 역할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나, 교역 규모로 보면 동남아 최대 시장이고, 세계적인 전자산업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및 유통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반도체 등 전자 부품류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등 전자제품이 싱가포르 시장 거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동남아 물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전세계 상품이 집결하고 인근 각지로 재수출되는 중계 무역센터로 2010년 총 수출액에서 재수출이 차지한 비중이 48%에 달하였으며, 재수출 대상 지역은 동남아는 물론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포함

□ 자유무역 및 완전 경쟁시장

- 자유무역 정책 하에 일부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데 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제품 등 4대 품목의 경우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 시장은 비관세 장벽 등 수입 장벽이 거의 없는 완전 경쟁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대규모 유통업이 발달된 시장

- 연간 900~1,200만 명가량의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 및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대규모 유통센터가 발달했으며, 유통업 형태는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할인점, 전문용품점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일본계 대형백화점 및 쇼핑몰 센터의 진출이 두드러짐

2. 경제정책 기본원칙

□ 자유시장경제 고수

- 자유시장경제 및 개방 노력은 싱가포르의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기본토대가 됨.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싱가포르는 오늘날 그 어떤 국가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간주되고 있으며,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고 현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음

□ 외부 지향 경제정책 추진

- 싱가포르는 국가 규모와 부존자원의 한계로 인해 외부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무역과 투자 부문에 있어 시장 개방으로 이어졌으며, FTA체결과 같은 각종 역내 협력 주력으로 이어짐

2.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 싱가포르는 '11년 4.8%의 성장률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1/3수준으로 급락
- 싱가포르는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4.7%의 성장률을 달성
-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큰 폭 성장으로 3분기 이후 성장세 유지

- 유럽 채무위기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불확실한 외부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올해('12년) 성장률은 연간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2. 주요 경제지표('11년 3/4분기 기준)

- 수출입
- 수출 및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S\$1,301억) 및 6.2%(S\$1,161억) 증가함에 따라 총 교역규모는 S\$2,471억(5.4%)을 기록

- 국제수지
- 종합수지는 S\$100.9억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 분기 S\$54.7억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확대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전분기와 비슷한 S\$153억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수지는 은행들이 해외자산 보유를 줄이면서 기타수지가 전 분기 적자에서 흑자(S\$52억)로 전환하면서 적자폭이 S\$22억으로 크게 감소

□ 고용

- 3/4분기 중 취업자 수는 32,300명 증가하여 전 분기 증가폭을 상회하였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조금 낮은 2.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방학기간 중 일자리를 구하던 대학원생 등이 학교로 복귀한데 주로 기인
- 내국인 실업률도 전 분기 대비 0.1%p 감소한 2.9%를 기록

□ 물가

- 3/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 분기 4.7%보다 1.2%p 증가한 5.5% 기록
- 통신비와 피복비가 각각 -2.2%, -0.3%로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나, 교통비(11.8%)와 주거비(9.7%)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상승을 주도

□ 부동산시장

-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세를 보이던 민간 주택 가격은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다소 낮아져 3/4분기에는 전 분기(2%)보다 0.7%p 낮은 1.3% 상승에 그침

□ 환율

-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싱달러 강세)를 보이던 대미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11년 9월말 기준으로 1.3003으로 전분기말 대비 약세를 기록
- 원화의 대 싱 달러 환율은 '11년 9월말 기준 907.44원으로 전년 말 보다 약세를 시현

□ 금리

- 2008년 말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미국채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 정부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크게 하락

- 은행예금금리 : 0.16% / 은행 간 금리 : 0.25% / 은행 간 기준대출금리 : 5.38%

3. 경제전망

- '12년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침체수준을 지속하겠지만,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생의학 부문과 관광 부문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2012년 중 싱가포르 경제는 1~3%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선진국 경제는 현재 경제조정 영향으로 최종수요가 여전히 위축될 것이며 견조한 국내수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기전자나 도소매업 등 싱가포르의 대외 관련 부문은 호조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증가로 인해 금융서비스업 역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그러나, 생의학 부문은 원료의약품 생산 증가 등으로 2012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관련 부문들도 다소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유럽 등 일부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상황이 악화되어 급격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낮아지는 하방위험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태 국

국 가

태 국

작성자
방콕 aT센터

I

태국 농업정책

1. 2011년 대홍수 피해상황

1. 농업분야 피해상황

□ 총 손실된 농경지는 20,240km²(논 16,000, 밭 3,008, 기타 1,232)

○ 쌀(Jasmine Rice)

- 쌀 생산량은 목표치인 2,514만 톤에 못 미치는 2,025만 톤으로 연 생산량의 20% 정도가 감소했음
- 홍수피해로 태국 쌀 수출량이 줄어들 예상이어서 2012년 국제 쌀 가격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카사바(Cassava)

- 타피오카의 주재료인 카사바의 피해도 적지 않으며 평년 생산량이 3,000만 톤이나 2011년 생산량은 2,000만 톤으로 줄어들어 가격상승이 예상됨

○ 사탕수수(Sugar Cane)

- 피해가 없으며 생산량이 1억 톤 정도로 평년보다 증가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임

○ 고무나무(Para Rubber Tree)

- 고무나무의 피해는 크지 않으나 홍수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어 고무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하락이 우려됨

○ 옥수수(Corn)

- 사료용 옥수수는 홍수보다 먼저 추수가 이루어져서 큰 피해가 없었음

○ 새우(Shrimp)

- 2011년 새우 수출량이 전년(420,800톤)에 비해 35,000톤 감소한 395,000톤으로 새우를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싸뭇싸컨주가 홍수 피해를 입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2. 농업개발 전략(2012~2016)

1. 농업종사자 생활의 질 향상

□ 농민 소득 및 삶의 안정성 창출

-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자연재해, 기후변화 및 경제적 환경변화로 야기되는 상황 등에 적합한 위기보장 시스템개발
 - 유기농, 무기농 비료 및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이론지식을 전파하고 경작시스템과 해충 관리
 - 전체 농가에 공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득 안정성 창출
 - 농산물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의 위험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피해규모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생산 활동을 위한 농가들의 종자돈 마련부담을 낮추고 불법적인 자금(사채, 고리대금)에 의지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 농민단체 및 기구를 지원, 농민들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 부채문제 해결을 지원
- 농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한 농민신분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고정수입을 조속히 조사
-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 노동인구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 개발, 전체적인 보장 사항들을 포괄하는 사회보험 마련, 농민복지기금 등 농민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하는 계획 추진
- 어려운 환경의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농경 자원이 풍부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 보호 시스템을 개발

□ 지식창출과 전파

- 자급자족 경제 교육센터, 철학센터 및 관계기관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전파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민족적 지혜와 융합하여 기존의 지식이 농업환경의 시대적 변화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
- 신기술과 지역고유의 지식을 통합하여 정부 및 민간 기관을 통해 농민들에게 전파하고 농업활동과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과학이론 및 기술을 보완·개발
- 개별가구에서 지역공동체까지 회계지식을 강화하여 소득과 지출 및 부채, 자족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
- 각 연령대에 적합한 수준의 지식개발을 강화. 농민들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개발지원, 국내·외에서 농업 과학, 생산 및 마케팅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농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농민 및 커뮤니티 역량창출

- 대중 홍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상황 교육
-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 활동의 적절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응지식과 기술전파
 - 생산과정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품의 품질 및 안정성, 낮은 생산비용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시설 및 작물의 위생관리 방안과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 무역의 장애요소를 줄임

□ 농가의 식량 안전성 및 안정성 창출

- 자급자족의 경제철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농업 이론을 이용한 통합적 농업기법과 유기농 농업 및 무공해 농업 등 농민들이 각 환경에 적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식량 생산 및 자체 소비 장려

- 모든 관련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정보·지식을 관리배포하고 식량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함
- 보다 많은 도시 거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수급하고 가계의 식량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관심 있는 가구나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무공해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반 국민도 도심 농업활동(City farm)을 할 수 있도록 장려
- 가구나 공동체의 재활용 활동을 장려함.
 - 분뇨, 볏짚, 겨, 톱밥 등을 이용, 바이오 가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생산비용과 가계지출 및 공해를 줄이고 남는 자원들을 열, 전기 에너지원으로 판매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및 지역의 소득을 신장시켜 농가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안정성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

□ 새로운 농민세대의 농업부문 참여 장려

- 농업분야의 지식기반을 마련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양성하며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농업관련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교육 시스템을 개선
-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농업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경작지를 제공하고 생산을 위한 투자 자원획득 기회를 창출
- 농민들이 상호간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하여금 지식을 관리하게 하고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사회 전체가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농민단체 및 기관의 업무 지원

- 농업분야 개발계획과 연계된 농민의회(Farmers Council) 내 정책설정 업무를 지원하여 농민의회가 생산과 마케팅 활동에 이용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수준의 실행계획을 설정

- 에너지 및 식량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와 농업 관계기관의 관리 메커니즘의 연계성을 위해 농민 참여와 업무를 통합하는 협동조합, 공동체 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농민 단체 조직을 지원
-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역량을 증진하고 회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농민 단체, 협동조합 및 공동체 사업 조직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려

2. 생산 및 관리와 식량안보 역량개발

□ 생산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

- 모든 생산단계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 공정 개발을 장려하여 생산 효율성 증대, 생산자본 감소와 농산품의 품질기준을 향상
- 농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 혹은 공동체 네트워크 형태(Cluster)의 생산을 장려
- 농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 농산품의 물류 개발

□ 환경 친화적 생산 장려(Green Product)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와 유기농법 활용을 장려하고 농업자원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줄이는 등 녹색·저온 농업경제(Green and Cool Agricultural Economy)를 실행하고, 청정 기술사용을 위한 동기유발 방안을 마련함. 또한 생산자본 감축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 재활용을 장려하고, 재활 자원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농장과 공장에서 사용하게 하며, 남은 에너지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
- 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분야의 생산 방향을 조정함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개발하고 탄소배출 시장과 관련 이해를 도모하는 등 향후 기후변화 대응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지역 수준의 협력관계 구축을 촉진

□ 식량 및 에너지로서의 농업 생산 안정성 강화

- 식량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농업,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통합목표 설정을 통해 식량 및 대체에너지 생산력 증대
-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농산품과 식량을 생산하여 생산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고 소비 충족 및 대체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

□ 농산품 시장시스템 개발 지원

- 유통 및 수출에서 ‘주’ 단위 및 국가적 수준의 농산품 증개시장 활용을 지원하고 농민기관 및 단체가 물량을 관리하여 다양한 시장에 유통하는 방법을 통해 공동체, 지역 수준의 증개 시스템을 강화, 농민 생활안정과 농산품 유통시장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
- 정부기관, 농민기관 및 단체가 농산품 관리부문에서 각기 제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 일부를 공동 관리하여 생산, 마케팅 및 소비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계절에 따른 생산량 변화가 있는 농산품을 중심으로 농산품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 농산품 시장의 기회창출을 위해 농산품 마케팅 부문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시장에서 활용하도록 함

□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연계성 창출

- 시장 수요에 따른 생산, 마케팅, 농산품 개발연구 분야에서 아세안 지역 및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3(중국, 일본, 한국), 특히 인접국과의 다양한 전략적 경제 협력체를 통해 다자간 혹은 양자 간 국가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세계기후에 민감한 자원을 관리
- 태국의 각 상품별 위기요소 및 강점 등 아세안 지역의 생산 및 무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통하여 아세안 경제 공동체 및 아세안+3과의 자유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연구

- 무역 파트너국의 법규 및 규제, 또는 세금 문제와 세금 이외의 모든 무역 방해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마련을 위해 농산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국의 법규 및 규정 등의 정보를 연구함
- 소득 분배 및 판매경로 확대를 위해 농업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해외 행사 개최를 지원함

□ 국가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 연구 강화

-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동·식물 종자 및 미생물에 대한 연구, 개발과 카사바, 팜오일 식량 생산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조류(algae)와 같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원료 등 국가 환경에 적합한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 및 효율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또한 미래사회에 태국이 식량 및 에너지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식량 및 농산품 시장의 공급 사슬을 혁신
- 농산품의 가치증대와 농산품의 재배, 수확, 운송, 저장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 연구 및 혁신
- 국가 농업분야의 방향성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정부, 민간, 생산자, 연구 및 분석기관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함. 연구, 개발과정에서 농민들의 참여를 증대하고 연구 및 혁신분야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연구와 상업적 발명에 관한 기술 및 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분야 개발 및 연구혁신 단계까지 확대하여 생산 및 수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전자 변형(GMOs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을 활용하여 농, 축산, 어종, 미생물 및 바이오 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
- 소비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친환경적 생산 여부, 소비자에 대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갖춘 상품인지 여부, 유기농 상품 여부, 패키지 상품인지 여부, 영양소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 농산품에 대한 시장의 욕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한 연구, 분석을 지원

- 개발, 혁신 성과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실질적인 상품의 가치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젊은 세대의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를 도모

3. 농업자원의 효율적, 균형적, 지속적 개발

□ 농업자원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강화

- 토지 관리와 배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농업 생산효율 증대, 농업분야 경쟁력 증대를 위해 농업용 수자원 관리 효율성을 증대함. 농업용수 저장량 증대, 용수로써 개발 가능성을 지닌 지역을 중심으로 관개지역 확장, 수자원 관리 메커니즘 효율성 증대 및 수자원 관리와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농민 및 공동체의 통합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내·외 수자원을 지속적인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시스템적 요소와 국내·외의 여론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타당성 연구·조사를 실시
- 안정적인 생산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수생자원 관리 효율성을 증대
- 민간부문이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관개 시스템(용수로) 확장 및 개선 등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협력, 사업기간,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역단체 및 공동체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관계 기관들을 통합

□ 농민들이 생산 자원을 안정적이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민들이 화학물질(비료)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화학물질이 토양 및 물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각 농산품에 해당하는 농업용 화학물질 및 비료활용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배포하고 농민들을 위한 자문 및 조언 활동을 하도록 하며 퇴비, 콧거름, 유기질 수용비료 등의 생산 및 활용을 지원

- 토양 유실을 사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고지대 및 강 상류에서의 농업용 화학물질 사용을 철저히 통제 및 관리하고 토양보존과 수자원 활용방안을 강구
- 농업용 화학물질 확대를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통제·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강화함. 또한, 농업용 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점포, 중간상, 판매 영업인, 판매경로, 판매방법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통제기준을 마련

□ 농민들이 농업자원 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현금 또는 세금 및 토지 이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전수해주는 방식 등의 보상을 통해 농민 또는 지역 공동체가 농업자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 자원 사용권한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원의 보존, 보호, 복구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용 등의 지역 농업자원 관리 부문에 농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증진하여 농민들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로 인한 상황에 대비

- 농민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키고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들을 사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 모든 분야의 업무와 정보를 통합
- 재해 손실방지 및 준비부터 재해 대응 준비, 긴급 상황 대처, 대책 마련을 통한 재해발생 후 대처,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신속히 배포하기 위한 정보업데이트, 농민 및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인 재난관련 정보 배포와 홍수 시 유속을 낮추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 준설작업 및 집수지 구축, 농경지 및 주거지의 피해방지 및 배수를 위한 관개시설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여 상황발생시 의사결정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지역 내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 자연재해 경감 및 방지 시스템 구축

- 농업용지, 댐 및 집수지, 생활용수 공급지와 가뭄을 겪는 지역에 충분한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인공강우 실행을 지원
- 강우와 대기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공강우 및 대기상태 조절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
- 인공강우를 만드는 실제 상황에서 최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장비 및 필요 물질 조달을 지원
- 대기 및 기상 조정과 관련된 기상학, 화학, 물리학, 수학, 통계학 등 과학 분야와, 항공분야와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연구지식을 공유하고 관련지식 개발을 지원하여 인공강우 실행 인력들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함

□ 현 동향을 반영하는 적절한 농업자원 관리 관련 법률 개발

- 현 시대에 적합하도록 법률을 개발하고 수정함. 또한, 종의 관리, 조업, 농업용 토지개척 및 토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조만간 제정될 법률에 따른 농업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방향성을 연구함. 이미 제출된 법안인 환경세(공해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및 자원보존을 위한 세금), 상품세, 공해 관리세, 환경피해 보장기준 설정, 공해배출 권리 설정 등은 세율을 정하는 주요 법안이며 향후 관계기관들은 사업 분야에 따라 적절한 하위 법안 구성 및 세금 부과율을 설정

II

태국 경제정책(2012~2016)

1. 주요 변화

1. 경제적 변화

- 금융부분에서는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내수경제 증가, 대체에너지 활용으로 인해 경기회복
- 국가재정은 공공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안정화는 악화
 - 잠재 서비스와 창조적인 경제로부터 새로운 소득원천이 필요
 - 환경문제와 환경규제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과 농업부문에서의 소득창출이 제한됨
 - 아울러 산업부문은 원자재, 자본, 지식, 기술의 수입의존도 높아졌고, 농업부문은 경작이 가능한 토지의 제한과 고갈되는 천연자원으로 악화

2. 사회적 변화

- 젊은 층 인구 및 인력은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 여전히 잠재 개발 기회는 존재하지만, 교육의 질, 유아지능개발, 국민 건강, 낮은 노동생산성 등은 주요 문제점으로 남아있음
 - 태국은 소득 불평등, 도덕적 가치의 몰락, 문화의 다양성, 젊은 층과 성인 층의 마약 및 도박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동시에, 국민의 정치적 활동 및 참여는 증가하였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3. 천연자원과 환경 변화

천연자원은 줄어들었고, 환경은 더 심각해졌음

- 이상기후변화는 천연자원과 환경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농업생산성과 빈곤에 영향을 미쳤음
- 천연자원과 환경관리는 비효과적으로 추진되어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사이에서 갈등만 양상

이상기후변화와 곡물연료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식량 안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4. 행정 변화

태국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 및 타인과 다른 의견표현 증가. 동시에 남쪽지방의 대부분지역에서 정치적 갈등과 소요사태는 여전함

- 정부부문에서는 대체적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부패청산의 의지는 더욱 필요함
- 지방분권화가 진행 중이지만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책임소재가 아직 불분명하게 남아있어 분쟁의 가능성 상존

2. 비전, 미션, 목적과 목표(2012~2016)

1. 비전(Vision)

정의와 공정함이 실현되는 행복한 사회

2. 임무(Missions)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입 분배와 민주주의 사회 강화

- 식량과 에너지 안보확보와 더 나은 사회 안정망 강화 및 지식, 창의성, 환경친화성을 기초로 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성 강화로 사회경제적 안전망 창출
- 인적 자원 개발과 위기와 변화에 대응력 강화

3. 주요목적(Main Objectives)

- 국가의 알맞은 통치로 평화로운 사회 증진
- 천연자원과 환경육성과 경제, 사회, 정치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국민 준비

4. 주요목표(Main Targets)

- 태국사회는 평화롭고 공정한 국정운영을 소유하고 있다
- 모든 시민들은 사회 안정망 아래에 있다
- 모든 부문의 생산성은 증가 한다
- 농업과 서비스 부문의 공유가 증가 한다
- 창조적인 경제의 공유가 증가 한다
- 태국의 국가경쟁력의 순위가 올라간다
- 천연자원과 환경의 질은 향상 된다

3. 실행전략

1. 정의로운 사회 강화전략

국민이 삶 속에서 기회 창출과 위험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보장 강화

- 강한 경제적 기반과 서민경제 강화
- 사회적 보장시스템의 보장범위 강화
- 자원의 공정한 배분
- 생활향상을 위한 IT 사용 증진

모든 국민이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편입 보장

- 비 특권그룹이 사회적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발굴
- 가난한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위기를 관리
- 사회보장 강화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을 참여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생각의 자유 독려
- 새로운 가치 창출에 관한 창조적인 미디어 강화
- 사회적 발전 속에 민간부문의 역할 지지
-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 부패청산과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개혁

사회적 응집성 강화

- 신뢰와 상호간 지지를 기반으로 가치 창출
- 사회에서의 자신감과 믿음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운영 강화

2.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발전전략

적정한 인구분배로 신생아의 삶의 질 강화

미래변화의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인적 자원 개발

평생교육 증진

- 모든 국민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창조
- 모든 국민들이 배움의 사회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기회부여
- 유아시절부터 배움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발전
- 창의적 배움의 방법으로 미디어 활용 강화
- 양질의 교육기회를 위해 대체교육관리 시스템 제공

국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문화적 가치 독려

- 사회적 기관의 규정 강화
- 지역사회 발전 속에서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3.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강화전략

농업생산 기반을 위한 토대로서 천연자원 보강

- 생산성이 높은 농경지의 보전 및 소농의 농경지 소유 지원
- 토지 사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정한 재분배 필요
- 지속가능한 농장을 지원 및 농업생산을 위한 천연자원 회복

농업생산성 증대

- R&D 강화 및 사회학적 지리학적 조건에 맞는 농업생산 재조정
- 표준기준에 맞도록 수입화학비료와 해충제의 통제 및 감시
-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농업적 실천필요
- 환경 친화적인 생산기술 지원 등 농업 과학기술 발전

□ 농업상품의 가치 증대

- R&D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혁신, 기술, 지식을 적용
-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생산시스템 및 농업생산제품 필요
- 농업생산품의 시장 및 선물시장 강화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 강화

□ 농민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과 직업 창출

- 농민을 보장할 수 있는 곡물보험과 더불어 수입보험제도 개발 필요
- 농민과 지주의 공정한 계약재배 필요
- 젊은 층, 신세대, 숙련기술노동력이 농업에 진출 필요
- FTA의 영향력이 큰 소농들이 질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식량안보 강화 및 바이오 에너지 개발

- 지속가능한 농업 필요 및 농업에서도 지식경영 전파 필요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 필요
- 소비자의 알맞은 소비행동 필요,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 창출 필요
- 농업에서 Zero Waste Approach 필요

□ 국가발전과 농업부문 강화를 위해 바이오 에너지 안보강화

- 식량과 에너지곡물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바이오 에너지 사용 증가에 관한 R&D 필요
- 바이오 에너지 사용과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부문 증가 전망
- 바이오 에너지 가격구조의 규제를 위한 방법(Mechanism) 필요

□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한 공공관리 증대

- 농민, 지역학자, 민간부문, 지역사회가 농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실천행동은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추진
- 생산, 유통, 소비단계까지 식량과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농업발전을 위한 법률 규정 강화
-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제적(ASEAN) 협력 필요

4. 지식기반 경제창출과 경제적 환경을 가능케 하는 전략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품의 가치와 생산성 증가를 통한 발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조부문 안정화

- 노하우와 새로운 지식, 더 나은 교육시스템을 통한 인적자본 강화
- 투명하고 이해할 만한 규칙과 규정으로 국정운영
- 저탄소 경제를 위해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 친환경산업단지 개발, 악화된 환경복원, 잠재력 있는 새로운 클러스터 개발

내재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부문 개발

- 혁신, 최신 지식과 태국의 가치를 활용하여 잠재사업의 경쟁력 강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부문의 더 많은 투자유치 환경 강화
-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관광부문의 행정
- 더 나은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

차별화되는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

무역과 투자부문 개발

- 유통과 분배의 효율성 강화, 기업의 기술과 지식 개발
- 역효과를 완화시키고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 기술, 연구, 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개발

국가기반시설과 물류시스템 개발

□ **공정한 상거래 증진을 위해 규칙과 규정, 상법 개혁**

5. 지속적인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조정 전략

□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 창조 활용**

- 서비스 부문은 부가가치 창출, 혁신과 창조를 기초로 한 친환경으로 조정 필요
-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 강화 및 혁신 및 녹색생산가공을 통한 가치창출 강화
- 친환경적이며 지식기반 국가 건설,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부문을 만들 수 있도록 과학, 기술, 창의성 필요

□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경제 구조조정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 혁신과 창의력 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함
- 연구개발과 지식전수 등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지적재산의 고용과 효과적인 지적재산시스템 개발 필요
- 도로, 항만, 물류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질적 수준을 효과적으로 강화 필요
-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적인 틀, 관련 규정 및 규칙들의 개혁 필요

□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안정화 달성**

-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 통화정책 아래 금융관리가 최우선 과제
- 경제 등락의 감시도구와 경고시스템 구축 필요
- 국고세입환수시스템 강화를 통해 금융관리의 효율성 필요
- 국영기업의 운영효율성 강화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국고분배와 관리 필요
- 공공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에 있어서 민간부문 참여필요

6.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역 간 연결고리 창출 전략

□ 지역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운송과 물류시스템 연결고리 개발

- 국제기준에 맞는 효과적인 운송 및 물류서비스 개발 필요
- 재화의 운송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의 개정, 담당인력도 개혁필요
- 운송 및 물류사업에 인적 자원의 효율성 강화 필요
- 국경지역과 경제특구 등에 경제적인 연결고리 창출 필요

□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투자기반 발전

- 상호간 안정과 안보를 위한 통합개발계획을 기초로 동남아시아와 인근 국가들이 연결될 수 있는 개발 필요
- 산업, 농업, 관광, 국경경제특구, 국경타운 등을 개발모델의 발전 필요

□ ASEAN 경제공동체 준비

- 모든 경제 부문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공공-민간부문의 협력강화 필요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맞도록 공공-민간교육기관의 수용력 강화 필요
- 인근국가 및 태국 내로 저질상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노동기술 개발과 재화와 용역의 최소 기준 필요

6.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환경, 천연자원 관리전략

□ 천연자원과 환경기반을 재건하고 보전

□ 친환경적인 사회를 위해 개발 패러다임과 소비행태의 이동

- 공공의식 창출과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한 R&D 지원
-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지원
-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미디어의 역할과 소비자보호 메커니즘 강화

□ 도시환경과 국가기반시설 관리강화

□ 기후변화 복원이 가능한 사회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강화

□ 천연자원 관리의 국정운영 강화

- 합동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
- 천연자원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회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과 규정 강화
- 천연자원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투자 추진

네 델 란 드

국 가

네 덜 란 드

작성자
로테르담 aT센터

I

네덜란드 농업정책 동향

1. 최근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위한 입법 제안

1. EU 집행위는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입법 제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표 (2011.10.12)

□ 동 입법 제안은 유럽농업의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유럽시민들에게 건강 및 고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촌 환경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로 구성

□ 동 입법 제안 패키지는 4개의 주요한 이사회 법령제안과 3개의 부가적인 법령제안으로 구성

○ 4대 법령 : ①직접직불금, ②단일공동시장관리, ③농촌지역개발정책,
④CAP예산관련법령

○ 3개 부가법령 : 주요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법령

2. EU 집행위는 CAP 개혁법안 패키지를 ‘10대 개선방향’으로 설명

1 성장과 고용을 위한 목표지향성 소득보조 추진

(Better targeted income support in order to stimulate growth and employment)

- 농가직불금을 형평성, 목표지향성, 간편성 제고 방향으로 개선
- Basic Payment는 실제활동농가(active farmers)에 대해서만 지급
 - 농가당 보조금이 연간 150천유로 이상이면 지급액 체감계산하고 연간 300천유로의 상한액 설정 (단, 고용창출 고려)
 - 농가 간, 지역 간, 회원국 간 분배의 형평성 고려(2019년 이후 ha당 단일 단가로 지급)

2 새로운 경제위기에 더욱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수단 구비

(Tools to address crisis management which are more responsive and better suited to meet new economic challenges)

-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과 민간보유지원(private storage aid)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 모든 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관리정책(safeguard clause)을 도입하여 지난 5월 e-coli 오염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시장교란 위기에 EU 집행위가 긴급히 사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 관련 보험과 뮤추얼 펀드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개선

3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녹색’ 직불금 도입 (greening 의무 부과)

(A 'Green' payment for preserving long-term productivity and ecosystem)

- 농업분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 현행농가 직불금의 30%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을 최적화로 사용토록 하는 부대조건(practices)을 부여 함 (녹색 직불금에 대해서는 상기 직불금 상한선 적용 배제)
- 이러한 부대조건은
 - ① 다양한 농작물 재배(crop diversification),
 - ② 영구적 초지(草地) 유지(maintenance of permanent pasture),
 - ③ 생태학적 목적으로 경지면적 7%를 유보(preservation of ecological reserves and landscapes)하는 것 등임

4 연구 및 혁신 관련 투자 확대

(Additional investment in research and innovation)

- 지식 기반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서 농업관련 연구/혁신 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농업계와 과학계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결과 의 농촌현장 활용도를 제고

5 더욱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식품 체인이 되도록 지원

(A more competitive and balanced food chain)

- 식품 체인의 기저(base)를 형성하지만 조직화 정도가 취약한 농업분야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분야 간(inter-branch)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시킴
- 현재 EU차원의 유일한 쿼터제도인 설탕 쿼터제도에 대해서는 2015. 9.30 이후 이를 폐지키로 함. (우유쿼터와 와인 지배권 쿼터는 폐지키로 기 결정)
- 학교 과일 지원제도와 학교 우유 지원제도를 보다 확산키로 함

6 농업 환경 정책의 지역 자율성 제고

(Encouraging agri-environmental initiatives)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지역별 차원의 농업 및 환경정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존, 회복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농촌지역개발정책 틀 속에서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7 젊은 농업인의 창업을 쉽게 하도록 지원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 of young farmers)

-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 5년간 Basic Payment를 25%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단, 회원국별 평균 농업경영규모 이하의 중소농에 대해서만 지원)

8 농촌의 고용과 기업 활동 촉진

(Stimulating Rural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 "Starter kit" 프로그램(농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7만 유로까지 지원) 등 다양한 농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LEADER 프로그램의 지역 활동 그룹 역할을 더욱 강화함

9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Better addressing fragile areas)

- 사막화를 방지하고 비옥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불리한 자연조건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 회원국 차원의 지원액(compensation)을 증액(현행 회원국 예산의 5% 범위 내)
- 이를 위해 EU회원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기존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으로 지원

10 CAP의 단순화 및 효율화

(A simpler and more efficient CAP)

-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CAP 정책 집행과정을 단순화함
 - 예를 들어 환경보존의무 등 cross-compliance 의무이행항목을 단순화함
- Small Farmers Scheme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농에 대한 지원책을 단순화함
 - 2014.10.15까지 동 제도 수혜를 신청하는 중소농에 대해서 500~1000유로의 직불금을 연간 지급하고 동 중소농에 대해서는 Cross-compliance 의무를 경감하고 녹색 직불금 의무를 면제함
 - 농업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을 이양하는 중소농의 농지 매매를 활성화하여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함

3. EU집행위 농업담당 집행위원(mr. Ciolos)은 이번 CAP 개혁법안 제안은 향후 유럽농업에 대한 대외적 도전요인(식량안보,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럽 사회와 유럽 농업인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Ciolos 집행위원은 2013년 이후의 시기는 기후변화, 국제경쟁심화 등의 대외변수에 유럽의 농업분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관한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 이번 CAP 개혁 법안은 유럽농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환경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 농업의 성장과 고용을 유지시킴으로써 Europe 2020 중장기 전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2. 과거 EU 공동농업정책 성립 이후 유럽 농업정책의 변화

1. 공동시장 확대와 가격지지 (1957~1983)

□ EU의 공동농업정책은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 ('58~)

- 공동시장정책 - 관세, 수량제한 철폐, 공동 대외관세, 공동가격, 공동규칙
- 가격지지정책 - 상한 초과 시 역외로부터 수입, 하한 초과 시 역외로 수출
- 구조개선정책 - 농업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었으나 공급과잉문제 발생

- 공급과잉농산물 - 사료용으로 저렴하게 판매 또는 수출보조금을 이용해 수출
- 수출경쟁국으로부터 거센 항의 유발, 제3세계 농업발전 저해
- 생산 보조금, 수출 보조금으로 인해 EU 예산의 대부분이 농업에 지출됨

2. 구조적 과잉생산과 개혁추진 (1983~2008)

□ 가격정책으로는 농업소득 유지와 생산증가 역제가 불가능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 불만 가중

- 생산자 - 과잉생산으로 시장가격하락은 농가소득 감소
- 정 부 - 정부수매, 해외원조, 수출보조로 재정부담
- 소비자 - 비싼 가격으로 역내 농산물 구매, 높은 세금부담

□ 첫 번째 변화 -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쿼터시스템 도입 ('84, 우유생산쿼터제)

- 회원국별 우유생산 쿼터양 설정, 농가는 이전생산량을 기초로 쿼터양 할당
- 쿼터양은 회원국 간 거래 금지, 점차 쿼터양 축소 ('97,'84쿼터의 87% 감소)
- 소비자 - 비싼 가격으로 역내 농산물 구매, 높은 세금부담

□ 두 번째 변화 - 지지가격을 인하하고 생산축소를 직불금으로 보전 ('92, Mac Sharry 개혁 - UR 협정의 Blue box로 규정)

- 곡물은 30%, 쇠고기는 15% 지지가격 인하
- 농가에게는 단위면적 or 가축 마리당 직불금 보상
- 경종작물은 재배면적 일부(약 15%) 의무적 휴경,
- 축산은 일정수준 사육밀도 준수 조건 부과

□ 세 번째 변화 - '94,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 결정

- EU는 가변부과금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6년 이내 점차 감축토록 결정
- 그 결과 수입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EU 역내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수출보조는 더 축소, 보조금을 활용한 수출량도 축소

□ 네 번째 변화 - '99, Agenda 2000

- 지지가격을 곡물은 15%, 쇠고기는 20%, 버터, 탈집분유, 파우더 15% 추가 인하
- 농가손실은 곡물 외 쇠고기와 낙농까지 포함한 보상적 직불로 보전
- 신규가입국에 대한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제도 도입

□ 다섯 번째 변화 - '03,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개혁

- 기존 품목중심 직불제를 생산과 단절시키면서 농가단일직불제도로 통합
- 소득직불을 받는 농가에게 식품안전, 동물복지, 친환경조건 등 상호준수 의무(cross-compliance) 부과
- 농가단일직불(Single farm payment) 지급기준을 결정하는데 “과거실적에 기초한 농장별 직불” 또는 “면적당 고정 직불” 중 하나를 회원국이 선택
- '05부터 연 5,000유로 이상의 직불금을 받는 농가의 보조금 중 일정비율을 농촌개발 재원으로 전용 - 농촌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

□ 여섯 번째 변화 - '08, 봄부터 곡물 휴경제 폐지

- '06 부터 생산량 감소와 수요증가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평균 10% 상승
- 축산물 소비 증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증가로 식량생산 감소여건 조성
- '07 밀 가격이 51% 상승, 우유는 49% 상승

3. 공동농업정책 성립 이후 네덜란드 주요 농업정책

1. 개관

- EU 정책 이외에는 특별한 가격, 소득, 시장정책이 없으며, 이와는 거리가 먼 네덜란드만의 농업 농촌정책 시행
 - OVO(농업연구, 교육, 지도)의 체계적 시스템
 - 펀드 및 재정적 지원, 토지통합

- '83년 이전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여 공급과잉을 시장 확대로 해결
 -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규모 확대 등이 강조
 -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농업인에게 성장기반 제공
 - 전문화, 규모화

- '84년 이후 - 농산물 생산촉진에서 부작용 억제로 전환
(from promoting production to containing the damage)
 - 생산지원에서 환경이나 경관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 이동
 - 농업연구, 지도,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던 공공의 영역에서 지식시장으로 이동하고 민영화
 - 지원방식도 계획에 입각한 사전 투입보다 사후에 산출물의 내용을 따지는 결과중심으로 이동 (from funding input to funding output)

2. 연구, 지도, 교육 (OVO)

- 연구, 지도, 교육 시스템 간 긴밀한 협력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필수요소
 - '90년대 민영화 전까지 정부주도하에서 OVO시스템이 새로운 건물, 기계, 기술 등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 수행

- 현재 연구부문은 민영화되었지만 특정연구과제는 재정적으로 지원
 - 지도 서비스 부문도 완전히 민영화
 - 학교에서 하는 농업교육은 정부가 지원

3. 자금 지원

- 농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 '80, 협동조합은행(Robobank)
 - 1886년 설립한 Raiffeisenbank, Boerenleenbank를 100년 후 통합

□ 농업대부 보증기금(Agricultural Loan Guarantee Fund) 설립('51)

- 생산성 향상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신용 제공
- '99년까지 48년간 62천건 25억유로 이상 대부

□ 농업발전 재정비기금(Agricultural development & Reorganization Fund) 설립 ('63)

- 기금설립목적은 농업의 발전과 재정비

□ 정부의 자금지원에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음

- 경영이양사업 - 농가가 더 많은 토지를 빌리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경영 이양할 경우 주는 보조금
- 새 기술과 장비구입, 건물의 건설을 촉진하는 농장의 현대화 및 혁신사
 - 노후화된 유리온실 교체, 신규 낙농건물, 집약적인 축산시설 등
- 이자보조사업 -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

□ 산업투자법인(WIR)이 제정되어 투자를 장려

- 투자를 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
- 투자 장려를 위한 지원수준 - 투자금액의 12%(기본)에서 50%(특정지역)

□ 가족 간에 농업회사를 이전할 경우 시장가치보다 낮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

- 농업자본축적 기회 확대, 농장승계를 통해 후계자 확보 유도

□ 소작인이 빌린 토지를 토지가의 60%로 구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

- 장기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률

4. 토지통합과 생산단지 정비

- 토지 통합을 위해 시기별로 법령을 제정, 상황에 맞게 추진
 - ‘16년 토지합병계획 - 농업인간 합의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실시
 - ‘24년 토지통합법 - 일정 다수가 합의하면 사업추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장치, 대규모 사업 추진에는 한계
 - ‘54년 새로운 법 - 정비지역 농지의 최대 5%를 자연보호, 유원지, 마을재건축, 경관증진 등 공익용도로 사용토록 조치
 - ‘85년 토지사용개발법 - 주체가 소유자와 토지사용자였으나 지역정부도 권리행사

- 집약 축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은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지역 재정비법”에 따라 축산농가 재배치 사업 실시
 - 유리온실 원예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린포트(green port) 개발 사업도 실시 - 노후화되고 흩어져 있던 유리온실을 5개 그린포트지역으로 집중화

4. 네덜란드의 정책제안 (Dutch outlook 2020)

- ‘08년 네덜란드 정부는 EU에 2020년까지 중장기 공동농업정책 및 개혁방향을 제안 (Dutch outlook 2020)
 - 이 제안은 사회경제협의회(SER)의 권고문 “농업의 가치”(Value of Agriculture)에 기초한 것

〈“농업의 가치”에서 다루는 내용〉

- 농업은 식량 이외에 어떤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다 제공될 수 있는지,
- 다 제공될 수 없다면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보호해야 하는 농업의 가치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기술

□ 네덜란드 정부가 보는 “농업을 둘러싼 향후 여건변화와 추세”

- ①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
 - UN 세계인구 ‘25년 78억명,’50년 90억명
- ②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소비자 관심 증가
 - 동물 복지규정 및 규제도 동일한 경쟁조건 필요
- ③ 기후변화와 식량이 에너지 공급 원료로 전환
 - 식량 부족과 가격급등 등 부작용
- ④ 식량 생산 확대로 침식, 염류화 등 환경과 토양에 부정적인 영향 직면
 - 환경문제에 숲 세계 차원에서 정책 강화 필요
- ⑤ 세계화 - 다른 시장에 접근을 보장하는 방법, 속도, 조건
 - 동일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
- ⑥ 지역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농촌을 매력적이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

□ 이러한 여건변화 속에서 농업의 가치별 정책 수단

가치	시장 작동	정책 수단
1 농업생산과 고용창출	- Yes - 시장에서 충족	▶ EU차원 시장규제 ▶ 지식과 혁신 정책 ▶ 훈련과 고용 정책
2 식량 안보	- Yes	▶ 농업용 우량농지 보전 ▶ 비상시 시장지지조치 유지
3 식품안전과 인간 및 동물의 건강	- Yes - 국제기준작동	▶ 시장규제 ▶ 건강 및 안전규정을 자가 고용 농업인에게 적용
4 동물 복지	- No - 국제기준미비	▶ 더 엄격한 기준개발 (EU/WTO) ▶ 혁신 촉진
5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 No	▶ 시장 규제 ▶ 초과성과 제공시에만 지불
6 자연과 생물 다양성 보전	- No	▶ 시장 규제 ▶ 초과 공공서비스에 지불
7 인간이 만든 경관과 여가복적의 자연환경 보존	- No	▶ 시장 규제 ▶ 초과 공공서비스에 지불
8 블루 서비스 (물 관리)	- No	▶ 초과 공공서비스에 지불
9 농촌의 활력 증진	- Yes	▶ 경제적 다양성(산업배치) 증진, ▶ 농촌정책

7. 네덜란드 농업이 주는 메시지

1. 네덜란드 농정의 시사점

- 시장 개입보다는 연구, 지도, 교육에 정책 집중
 - 성과 중심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
- 토지통합과 생산단지 정비, 원예 및 축산 시설현대화 등 규모화
 - 지식과 혁신을 통한 전문화
- 자금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신용 제공 활성화
 - 성과 중심으로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 여건 조성
- 계획에 입각한 지원보다 산출물 내용을 따지는 결과 중심의 지원
 -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의 최적 분배

2. EU 농정의 시사점

- 생산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직불금은 지속적 감축, 지급기준 단일화
 - Coupled를 De-coupled로, 지역별, 농가별 차이를 축소
 - 직불금 상한선을 설정하여 균형 지급토록 유도
- 다양한 농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직불금을 연계
 - 친환경 보조, 자연보호지역 보조, 젊은 농가 보조 등과 연계
 - 동물 복지에 대한 규정 설정으로 향후 무역거래의 규제 조건 예상
- 직불금에서 감축된 재원을 ‘농촌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고 농가 단체를 통해 농촌지역개발 추진
 - 보조금 지급 시비를 회피함과 동시에 농가조직화 유도
 - 농가단체가 주도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이익을 대변

□ 향후 식량안보와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대비

- 에너지 원료 사용 등 향후 식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 안전한 식품에 대한 니즈 충족 준비

3. 네덜란드와 한국 비교

구 분	네덜란드	한국
① 전체 인구 ('10, 천명)	16,575	48,580
② 농가 수 ('10, 호)	72,324	1,177,318
③ 국토면적 ('08, Km ²)	41,543 (지표면 33,719)	100,212
④ 인구밀도 ('10, Km ² 당)	492 (지표면 대비)	485
⑤ 농지면적 ('08, Km ²)	22,758	17,153
⑥ 국토대비 농지점유율 (%)	67.5% (지표면 대비)	17.1%
⑦ 농가당 경지면적 ('10, ha)	31.5	1.46
⑧ 농지가격 ('10, 원/m ²)	8,717	26,881
⑨ 1인당 국민소득 ('10, \$)	49,050	19,890
⑩ 농가소득 ('10, 천원)	121,402	36,818
⑪ 전체 무역수지 ('10, 억\$)	512	402
⑫ 농식품 무역수지 ('10, 억\$)	334	△182
⑬ 모돈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22	15
⑭ 파프리카 생산량 (톤/10a)	26	10
⑮ 유리온실 면적 ('10, ha)	10,307	272

<자료원 - 네덜란드> Land- en tuinbouwcijfers 2011 (LEI, CBS)

- ① 11p, ② 25p, ③ 14p, ④ 16,575/33,719, ⑤ 14p, ⑥ 22,758/33,719
- ⑦ 2,275,800/72,324,
- ⑧ 129p (57,705유로/ha를 '10년 평균 환율 1,532.85원/유로로 환산 - Pacific XR)
- ⑨ IBRD, ⑩ 79,200euro * 1,532.85원/euro
- ⑪ 184p (38.9b-euro을 '10년 평균 환율 1.3274로 환산), ⑫ 25.4b-euro,
- ⑬ 농식품부 농업경쟁력강화방안('09) ⑭ 농식품부 업무보고('11) ⑮ 83p

<자료원 - 한국> 농림수산물 통계연보 2011

- ① 18p, ② 33p, ③ 42p, ④ 48,580/100,212, ⑤ 42p, ⑥ 17,153/100,212
- ⑦ 34p, ⑧ 농식품부(농지과) 농업진흥지역내 발기준('08)
- ⑨ IBRD, ⑩ 162p, 168p, ⑪ 240p ⑫ 240p, - 농축임산물 합계
- ⑬⑭ 농식품부 업무보고('11.12.16), ⑮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2010)

II

네덜란드 일반경제 동향

1. 주요 경제 동향

1. 네덜란드의 경제는 2009년 경제상황 악화로 -3.9%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회복세

□ 명목 GDP는 '11년 5,910억유로, EU 27개국의 약 4.9% 차지

○ GDP 성장률 : ('09) -3.5% → ('10) 1.7% → ('11) 1.8%

* EU 27개국 평균 GDP 성장률 1.6% 보다 약간 높은 수치

□ 1인당 GDP는 35,400유로 (약 50천불)로 EU에서 4번째로 높은 국가

○ 룩셈부르크 271, 노르웨이 181, 스위스 147, 네덜란드 133 (EU 평균 100)

□ 실업률은 5.4%로 EU 27개국 중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낮은 나라

○ EU 평균 9.8%, 오스트리아 4.0%

2. 네덜란드의 교역은 무역수지 흑자로 수출이 수입보다 389억 유로가 많음

□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전화기, 컴퓨터 부품, 자동차, 의약품 등

○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컴퓨터부품, 전화기, 자동차, 의약품 등

□ 농식품 수출은 수입보다 254억 유로가 많음

○ 수출 665억 유로, 수입 411억 유로 (흑자 254억 유로)

3.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를 1.5% 수준으로 인상

- EU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2%를 넘고 있어 유럽중앙은행(ECB)은 2011년 들어 4월, 7월에 걸쳐 유럽 은행간 금리를 1.5% 수준으로 인상
- 현재 GDP 성장률 둔화, 유가 상승세 완화 등으로 금리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퍼진 유럽의 재정위기로 유럽 중앙은행은 2011년 연말까지 긴급 유동성 공급을 연장
- 또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으로 1,100억 유로 상당 채권 매입

※ 네덜란드 거시경제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①	명목 GDP(십억유로)	561	582	573	581	591
②	실질 GDP 성장률(%)	3.9	1.8	-3.5	1.7	1.8
③	1인당 GDP(유로)	34,900	36,200	34,600	35,400	-
④	인플레이션(%)	1.6	2.2	1.0	0.9	2.5
⑤	실업률(%)	4.5	3.8	4.8	5.4	5.4
⑥	국가전체 (십억유로)					
	수 출	347.5	370.5	309.4	371.2	-
	수 입	307.3	335.9	274.0	332.3	-
	수 지	40.2	34.6	35.4	38.9	-
⑦	농식품 (십억유로)					
	수 출	43.5	50.1	60.5	66.5	-
	수 입	25.1	28.3	37.5	41.1	-
	수 지	18.4	21.8	23	25.4	-

(자료) 네덜란드통계청(CBS), Eurostat,

2. 주요 산업 동향

1.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 유통, 도소매 및 운송 등의 서비스 산업이 GDP 생산 및 고용의 70% 이상 차지
 -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입해 재수출하는 가공, 중계무역이 발달되어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 다국적 기업 등 외국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기업의 집중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주요 특징
- 다국적 기업들이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10명 미만의 소기업도 강세
 - 네덜란드의 선도산업 분야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대변
 - * SHELL, AKZO, NOBEL, DSM, UNILEVER 등
 - 소기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기업 중 90% 이상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
- 농업, 축산, 낙농업도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으며 국내 총생산의 약 4%, 노동력의 3.8%가 이 분야에 종사
 - 두당 우유생산량, 연유, 치즈 수출량도 세계 최고
- 기술집약적이고 기술 인프라가 적용되는 부분이 네덜란드 산업의 토대
 - 필립스의 경우 전체 직원의 15%가 R&D에 종사
 - 노동인구의 25%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 국제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으로 인정

2. 자동차 부품산업 시장은 약 30억 유로 정도로 추산

- 세부적으로 타이어가 전체의 21%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액세서리 12%, 자체부품 10%, 기어박스 5% 등
 - 차량 내구연한 증가로 부품 수요 증가
-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Just-in-time” 배송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로테르담에 물류기지 구축
 - 로테르담은 유럽 중심지로 1~3일 내 주요도시 배송 가능
 - 유럽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 가능

3. 조선 산업은 핵심 산업 분야로 연간 5만명의 고용창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선박을 세계에 공급

- 국내시장에도 해수면 상승과 거주 지역 부족으로 다양한 준설작업 예상
 - 해양레저 발달로 다양한 요트에 대한 수요 증가
-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관련 선박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대형선박보다는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당분간 확고한 위치 고수 예상

4. 네덜란드 산업분야 중 화학 산업 분야가 가장 혁신적

- 페인트, 접착제, 향수, 고무밴드 등에 혁신적 중소기업 집중
 -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 지향적 시스템,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투자
 - 새로운 물류시스템과 서비스 도입, 친환경적 상품개발 등으로 지속적 경쟁력 향상
- 시장의 협소함 극복을 위해 대부분 업체들은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에 집중
 - 내수시장 침체기에서 연간 10% 이상 고성장 지속

3. 주요 투자 여건

1. 지리적 중심지로서 양호한 접근성

-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70백만명 인구와 유럽 주요기업의 50% 소재
- 유럽 3대 시장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중간 지점에 위치
- 독일 루르 공업지역 등 유럽 주요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

2. 우수한 사회 인프라 구비

- 로테르담항은 상해, 닝보,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의 물동량 처리
- '10년 기준 연간 11백만TEU의 컨테이너와 430백만톤 화물 처리
- 전체 항구 면적은 10,570ha, 항구 총길이는 40km, 수심 24m
- *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
-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은 승객기준 유럽 5위, 화물기준 유럽 3위 공항으로 세계 87개국 262개 지역 취항
- 물류, 운송, 보관, 출하 시설 우수
-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결체계도 탁월함
- 1980년 이후 약 140개의 공항 관련 상 수상

3. 우수한 물류 전문 인력 거주

- 3만 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가 물류관련 비즈니스에 근무
- 160여개의 물류전문 서비스업체 보유
- 로테르담 해운물류대학 등 전문분야 교육시스템 우수

4. 효율적이고 비즈니스 마인드의 세관시스템 구비

- 운영 면에서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하고 융통성이 많음
- 부가세나 통관세 없이 타 유럽국가로 수송 가능
- 보세 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속적

5. 유럽 국가 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 능력 갖춘

- 대부분 영어를 구사하며 독일, 불어 등 기타 외국어 구사도 우수
- 타 유럽국가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 단기, 파트타임 계약 등 탄력적인 고용계약 체결 가능
- 타 유럽국가에 비해 파업 등 분규로 인한 인력 손실이 적은 편

4. 한국과의 교역 동향

1. 유럽국가 중 네덜란드는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2011년 기준 독일에 이어 제 2위의 교역 파트너임

- 산업별 경기상황에 따라 수출입 물량이 크게 좌우
- 수출은 경유, 선박,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같이 주요 산업의 경기 상황에 따라 수출입 규모 결정
- 2011년의 경우 수출 1위인 경유 수출이 20% 감소하여 전체 수출이 12.8% 감소하였고
- 수입은 고철 61% 증가,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32% 증가, 돼지고기 153% 증가 등으로 전체 5.6% 증가

※ 對 네덜란드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 출	6,406	42.7	4,528	-29.3	5,306	17.2	4,628	-12.8
수 입	3,240	-12.5	2,060	-36.4	4,189	103.4	4,424	5.6
무역수지	3,166	302.8	2,468	-22.0	1,117	-54.7	204	-81.7

자료원 : KOTIS

해외aT센터 주재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서

발행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 : 2012년 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조사참여 : 일본 - 도쿄aT

중국 - 상하이aT

미국 - LAaT

홍콩·대만 - 홍콩aT

말레이시아·싱가포르 - 싱가포르aT

태국 - 방콕aT

네덜란드 - 로테르담aT

총괄 - 식품수출정보팀(이나래)

문의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9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우리의 농식품과 식품화가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